

인권정보자료실
R1.1.9

인권하루소식

합본9호
(97년 하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합본9호 (97년 하반기)

인
기
인권정보자료실
R1.1.9
사
랑
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이런 고민과 헌신이 있고서야 한국의 인권운동은 다시 현 정권이 막을 내릴 때 인권운동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인권문제가 소수의 관심사가 아닌 대중적인 관심사로 확대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현실이 인권의 가치를 조롱하면 할수록 인권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은 더욱 절실해져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끝-

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제915호 - 제93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일(화)

제 9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곤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자칫 국민합의를 배제한 채 제도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회, 주민카드 예산안 전액 삭감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전자주민카드 예산안 10여억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민일보에 따르면, 예결위에 앞서 13일 열린 내무위에서 위원들은 "도민은 물론 국민지향이 상존하고, 더구나 아직 정부조차 관련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카드 예산안을 올린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제주언론, 여론형성 적극 기여
또한, 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내 20대 이상 성인 3백36명을 대상으로 의식설

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자는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7%만이 '전산망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고 답해 국가 전산망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카드 시행의도에 대해 '국민편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3%, '행정편의'라고 응답한 사람은 30.6%에 달하는 등 정부의 견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6%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해 제주도 주민들이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주지역의 관심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엔 지역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들은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 제주도측과, 의회, 사회단체들의 주장 및 움직임을 꼼꼼히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지상 찬반논쟁을 마련하는 등 여론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속전속결...사회단체, 거북이걸음
반면, 서울을 비롯한 여타지역의 관심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인데, 현재까지 전자주민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단체들이 지역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은 서울, 전북, 광주, 부산 지역 정도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달 4일 전자주민카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4일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인권지기,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빛고을정보공동체 등 인권단체 및 정보통신단체들이 중심이 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1일 광주지역의 모든 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오는 10일경 1차 준비모임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도 부산대, 부산정보연대 등이 주도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상황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지만, 여론형성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사회단체들은 거북이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감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원 3명과 정경화(나우정밀 노조 사무장), 곽은주(대성덕스타 노조 교육부차장) 씨 등 노동자 5명도 비슷한 시간에 연행됐다.

연행된 정현곤(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 씨의 부인은 "오전에 형사들이 남편을 서울시경 흥제동 분실로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지역에서는 지난 5월 구로청년회 등 사회단체 사무실에 피관들이 잇따라 침입해 컴퓨터 등을 조사하다 달아난 일도 발생했었다.

동포돕기운동 '의도적' 흠집내기

전국연합등,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지난 27일 북녘동포돕기 운동과 관련,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가 즉각 대북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등은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지원요청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북녘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민간차원의 동포돕기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이러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데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수사방점을 알려진 이후 수사에 응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처사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은 특히 북한의 실상을 보고한 지난 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의 제방영이 갑자기 취소된 데 대해 정부가 국민들 속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해 제방영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즉각 제방영을 촉구했다.

북한성금 관련, 범민련 2명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권한 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바람에서 일본에 돈을 보냈을 뿐이다. 송금은 2만달러를 했는데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되었을 뿐, 조총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린·이천재 씨는 송금 사실을 추후 보고받았을 뿐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1일(화)

- 유규하(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신건
- 노지연(한총련)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유해정(국보법,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 박기서(살인등, 안두희 살해)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 정지아, 박종석(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이용석, 최인기, 김태윤(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정영훈(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유덕상(업무방해등, 한국통신)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7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지 경찰관 활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B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노점상 양승진(43) 씨 사망

◆ 24일(화)
 '정보연대 상' 소속 회원들 YWCA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제도 반대 집회/유엔 인권이사회, 92년 동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파키스탄 사형수 모하메드 아자즈와 아미르 자밀 씨의 탄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혀/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사) 다른 재소자와 싸운 뒤 독방에 격리수감됐다 자살한 이아무개(당시 19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청구소송에서 2천9백만원 배상 판결

◆ 25일(수)
 북한당국 공식자료, 96년 북한에서 숨진 5살 이하 어린이 최소 12만4백60명 추정/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제방영 돌연 취소/국민회의, 북한 식량지원 모금활동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창구 복수화 주장/한국노총, 대선에서 친노동계 성향의 특정 후보 선거활동기로/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한총련 출범식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1백95명 전원 집시법등 혐의로 기소/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 26일(목)
 국방부, 5·18 관련 서훈자 77명과 2개 단체(특전사·20사단) 중 정호용 씨와 최세창 씨 등 2명만 치탈대상자로 결정/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박시환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정한 국보법 19조(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한국 무기수입 3위/유엔 환경특별총회, 핵폐기물 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의문' 채택/유엔 에이즈 최신보고서 발표, 전세계에서 하루 1천여 명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

◆ 27일(금)
 전국 43개 대학총학생회장, '한총련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대표자회의' 결성하고 한총련 개혁 촉구/성북경찰서, 전국연합의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관련 압수조사 벌여/과거청산위등, 제2회 인권피해의 장 개최

◆ 29일(일)
 내무부등 발표, 주민카드 생산발급업체로 지정된 한국 조폐공사가 1월에 독일과 미국에서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오는 8월 국내 도입예정

인권
사망

전·노 시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안된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지난 4월 17일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신한국당의 대선예비주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온 전·노씨 등에 대한 시면요구가 바야흐로 청와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에 선출될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이들에 대한 조기시면을 건의할 경우 김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면 일자리는 8·15광복절, 대선 직전, 대선 직후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중 광복절 시면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임기만료 전에 해야 할 민주개혁작업 시면주장자들은 여권 대선예비주자가 아니면 5, 6공의 실제 인사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김대통령과 대구·경북을 향해 시면주장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에게는 결사해지 차원에서 임기 만료 전에 시면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전·노 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고 물러나라는 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태를 꼬이게 한 것은 현 정권이 전·노 씨 등의 기소를 허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 정권의 잘못된 전·노 씨의 사법처리 정신에 걸맞은 야합 사죄, 양심수 석방, 공안기구 개혁 등 과거청산작업이나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을 진전시킬 과감한 민주개혁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데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결사해지의 자세는 지금이라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나서는데 있지 간신히 이뤄진 형사처벌마저 되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화해 내세운 표 작업

시면주장자들은 국민화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여당의 대선예비주

자들이 대구·경북 들으라고 국민화해 운운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불을 질러 대구·경북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일 뿐 국민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시면에 반대하는 광주·전남 시민들을 국민화해의 정신을 결여한 소아적 존재로 몰아부치면서 국민화해를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면주장자 중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면서 시면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5, 6공 실세의 경우 전·노 씨에 대한 시면요구는 자기 시면의 요구에 지나지 않고 여권 예비주자의 경우 지역정서에 기반한 득표전략의 하나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시면을 검토해야 한다면

시면 주창자들은 광주시민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17년간의 외면,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노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잘못되어서도, 전·노 씨가 시면받을 만한 공적이 있어서도 아니다. 또 한 전·노 씨가 잘못을 뉘우쳐서도 아니다. 전·노 씨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회개의 시늉을 낸들 진심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기에 시면 여부는 전·노 씨의 전향성명서 한 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노 씨들에 대한 시면이 바람직한 경우는 시면이 망국적 지역갈등의 해소와 민주적 국민통합의 진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 분명할 때에 국한된다.

대통령의 시면에 앞서

그렇기에 여당 대선후보나 5, 6공 연합자들의 건의를 받아 시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과거청산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시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여당의 대선후

보들을 위시한 시면주장자들은 광주·전남시민들에게 달려가야 한다. 17년 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하고 외면했던 점에 대해 사죄하고 지난 17년 간 그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전남의 시민들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진실규명과 정의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 결국 역사왜곡을 바로잡은 데 대해 치하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들에게 그 연장선 상에서 다시 한 번 회생과 대동의 위대한 5월 정신을 발휘하여 시면에 반대하지 말 것을 호소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들은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진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이러한 호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광주 망월동 신묘역을 방문하여은 광주시민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대화합 선언을 하고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시면이 국민화해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5·18이 역사와 법에서 공식복권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과거청산과 민주발전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해소시키기 위한 절절한 열원과 넉넉한 마음으로 전·노 씨 등을 시면한다면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 진전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의 시면권은 광주 시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아 확인적으로 행사될 때에만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당 후보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시면을 한다면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망국적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전·노 씨의 사법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시면주장이나 대구·경북의 표심을 겨냥하여 외쳐지는 시면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일(수)

제 9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물쩍

경찰·가해전경 부모, 합의 중용

이철용(33·일용직노동자) 씨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회유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에 집단폭행당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으로 전경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지난달 30일 폭행전경의 어머니와 함께 이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어머니 김옥자 씨는 "6월 30일 저녁 8시경 경찰 4명과 가해 전경의 어머니라는 40-50대 여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김 씨에 따르면, 전경부모들은 "용서해달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경찰도 "미안해서 찾아왔다"는 말과 함께 "전경측 가족과 합의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과 29일에도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가, 김 씨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이 씨에 대한 신변조사에 착수해, 이 씨의 12년전 탈영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국군에 이첩하기도 했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과약' (최영애 소장)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원숙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 (조주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이 발표되었다.

대전·전남·경북 상담소 부재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대전·전남·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23개(종사자수 69명)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영애 소장은 전국 상담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거의 모든 상담소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난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꼽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들은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 확보의 문제와 교육장소와 피난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제법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한데,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 25만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공판 안내

- ▶7월2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7월3일(목) 정승화(내란방조)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나현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해부) 오후3시 4단독 524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방진욱의 1(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박수정, 차승업, 이미정(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조창목(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7월4일(금) 함윤경(국보법) 오전11시 10단독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유민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7부 423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기획: 안기부와 인권 -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슬한 오명을 남겨온 안기부에게 있어 이번 대선은 명예 회복의 기회로 자리할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하는 계기가 될지 자못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노동당 사건, DJ에 치명타 선거를 앞둔 안기부(또는 중정)의 단골 작품은 바로 '공안 사건'이었다.

67년 6·8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야당(신민당) 전국구 후보인 김재화 씨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일동포 실업인이던 김 씨에게 조총련계 자금이 유입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민당 중앙당의 경리장부가 압수되고,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되었다.

결국 한달 전 5·3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가 선전을 펼친 양상과는 반대로 6·8 총선은 야당의 참패로 끝나버렸고, 여당은 개헌선 117석을 훨씬 웃도는 129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69년 대통령 3선거연으로 이어지는 6·8 총선을 지휘한 것은 중정이었고, 그 책임자는 김형욱이었다.

92년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두고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6공 안기부의 최대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고위 간부 이선실과 연루했다는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공 심리를 한껏 자극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선거후 월간중앙에 실린 92년 김영삼, 김대중 씨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인 9월 현재 김영삼(21.1%) 씨와 김대중(18.8) 씨 간의 지지율 격차는 3% 포인트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노동당 사건 직후, 김대중 씨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했으며 양자간의 지지율은 10% 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었다(YS-23.5%, DJ-13.4).

그 뒤, 93년 2월 24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이 사건이 '대선용

과대포장 사건'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안기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 고위간부인 이선실과의 연관성 여부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끝난 뒤였고, 1심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 김영삼 씨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야당후보 비방유언을 사건 선거시기 중정과 안기부의 역할은 '공안바탕'을 일으키는 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 씨와의 박빙승부로 박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71년 4·27 대통령 선거에서 중정의 '활약'은 빛을 발했다. 당시 'DJ의 제갈공명'으로 불린 조지참모 엄창록(88년 타계) 씨를 회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김대중의 당선을 도운 이래 70년 대통령후보가 될 때까지 DJ의 3선을 가꿔왔던 그가 4·27 대선을 열흘 앞둔 4월 16일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달 뒤 모습을 나타낸 엄 씨는 "중정에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지만, DJ진영은 이를 "중정의 회유에 따른 엄 씨의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후 죽는 순간까지 엄 씨가 DJ를 멀리한 사실은 '회유'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회유'된 '납치'된 엄 씨의 이탈은 대선에서 김대중 씨가 패한 4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92년 3·25 총선에선 안기부의 노골적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투표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 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에선 선전물을 돌리던 4명의 안기부원들이 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그것이다. 안기부원들이 뿌리고 다니던 유인물은 야당후보자인 홍사덕(민주당) 씨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이었다. 야당운동원들에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안기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 지역에선 홍사덕 씨

가 김만제(민자당, 현 포철회장) 씨를 전국 최대 표차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문민시대 안기부, 선거개입 여전 김영삼 씨의 문민정부는 93년 안기부법을 개정함으로써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가문은 예기치 않게 드러난 안기부의 한 비밀문건을 통해 백일하에 벗겨지고 말았다.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가 "지방선거 출마자의 동향을 분석하고 선거의 연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국지부장에게 내렸던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덕 통일부총리(비밀문건 작성 당시 안기부장)가 경질되고, 정형근 안기부 제1차장(현 신한국당 의원)도 웃을 벗게 되었다.

지난 96년 4·11 총선은 'DMZ 사건' 등 이른바 '북풍'이 여당에 승리를 안겨준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던 재야운동권은 이미 95년 11월부터 '공안'의 된서리를 맞고 있었다.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이 발표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허인회, 이상호, 함우경, 이인영 씨 등 학생운동 출신 청년운동가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허인회, 박충렬)이 잇따랐던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간첩 김동식' 사건은 여당에겐 호재로, 재야와 야권에겐 타격을 입힌 92년 '공안한파'의 복수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도 안기부의 활약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중정 이래 중단했던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을 경감하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안기부의 '다음 작품'이 무엇일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다.

고려대 '청년', 전북지역 대학생 그룹 사건 등 6월 들어 연일 터져나오는 국가보안법 조지사건들도 과거의 악령에 대한 기억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3일(목)

제 9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두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안기부법 그냥 통과

안기부법은 지난 3월 18일 마친 임시국회에서 여당측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죄) 10조(불교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무효화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국민회의 전용택(정보위원회 간사) 의원 비서관 곽동진 씨는 "안기부법 개정 부분에 대한 무효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슈조차 대두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회의측은 안기부법 문제를 담당해 온 국민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의원이 한보사태로 구속된 상태고, 이번주로 북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이동구 비서관은 "국민회

의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10, 11일경 내무위 차원의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회의만이라도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그뒤 14일경 법안 심사를 가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도 작년 국회에서 상정되어 이미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가 법안을 내놓기로 해놓고 각부처간 이견으로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안만으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이야기다. 그렇다고 마냥 끌기도 어려워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회단체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렇듯 임시국회의 움직임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제정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9일 낮 12시 신한국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개최 및 법사위 의원들에게 촉구서한을 보내는 등 제정촉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비롯해 정책자료집을 제작, 국

회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통합전자유민카드 시행반대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주민등록법 개정반대를 위한 집회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략적 사면논의 중단 촉구 과거청산위·5정협 성명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와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박재순등)는 2일 전·노 사면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성명에서 "전·노에 대한 사면은 결코 대선카드가 될 수 없다"며 "12·12,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정략적 사면논의를 중단하고, 철저한 과거청산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아울러 △ 양심수 전원석방 △ 5.6공에 영합해 자신의 영달을 꾀한 정치인들의 공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행사와동정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식
 - 때: 7월 4일(금)
 - 곳: 부산여성회 일하는 여성의 집 5층
 -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051-503-7268, 051-503-1210)
-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
 - 때: 7월 5일(토) 오후3시
 - 곳: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특별위원회 (전해부)·전해부 지원대책위
- 박노해 출판기념회-명상예세이 「새벽을 길어 올린 한 생각」
 - 때: 7월 8일(화)
 -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

세계의 인권 <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여성이 사고 팔리는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다. 더러운 맥주집의 마룻바닥에서부터 휴양지 해변가의 초호화클럽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대를 배경으로 모든 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시장에 진열된 주요 상품은 아시아 여성들이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여성인신매매 방지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ATW)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인신매매'란 금전상의 이익, 이득을 노리거나 매춘, 강제노동, 성적 노예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나 외국으로 여성과 소녀를 팔고 사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납치와 유괴같은 강제력이 사용되거나 협박, 사기, 거짓약속 등 모든 형태의 미끼가 동원된다. 또한 매춘굴, 군사 기지촌, 섹스관광, 신부를 거래하는 결혼중매 등 여성이 성적으로 착취받는 관행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납치의 경우, 태국의 예를 보면 브로커에게 고용된 사람이 마을 소녀들의 사진을 찍는다. 그 사진을 포주에게 보여주고 원하는 여자를 주문받는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선택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신매매되는 여성의 신상명세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그 여인들은 가난하고 농촌출신이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빈곤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여성매매의 주요인이지만, 배우자의 학대 등 성공적이지 못한 결혼생활을 경험한 여성이나 연애에 실패한 여성들이 매매꾼들에게 섹스산업의 후보자로 여겨진다. 어린 소녀에 대한 수요가 한없이 증가하면서 포획되는 여성의 나이도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도처에 시장

CATW가 보고하는 여성인신매매의 규모를 살펴보자. 방글라데시: 20만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난 10년간 파키스탄으로 인신매매되었으며, 매달 200-400명 꼴의 매

매가 유지되고 있다. 94년 한해에만 2천명의 여성이 인도의 6개 도시로 팔렸다.

베마: 2만-3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태국에서 매춘하고 있다. 이들이 당한 주요 인신매매 유형은 직장을 준다고 속여 매춘굴로 유인하거나 유괴와 매매등이다.

캄보디아: 1만에서 1만5천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5%가 연소자이다. 91년에 약 6천명이 있었으나, 유엔 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UN UNTAC)의 군대가 도착한 후인 92년, 그 숫자는 2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매춘굴의 48%의 여성이 유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94년, 아내로 삼거나 매춘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한 1만 5천여건의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인도: 2백2십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4이 연소자이다. 인신매매 유형은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허위 결혼, 거짓직업알선, 유괴 등이 다.

일본: 가장 큰 아시아여성의 섹스산업 시장이다. 15만명이 넘는 비밀본여성이 매춘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태국과 필리핀 출신이다. 최근 들어 동유럽 여성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남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섹스관광단을 구성하고 있다. 섹스산업이 GNP의 1%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비와 맞먹는 규모다.

필리핀: 30만명의 여성, 7만5천여명의 아동매매가 존재한다.

대만: 4만에서 6만명의 아동매매 추정, 13세 미만의 소녀들이 포주들에게 신체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 처방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30만에서 2백80만에 이르는 매춘여성 중 1/3이 연소자나 아동이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인 여성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춘

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동매매나 인신매매는 주요한 인권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유엔회원국의 2/3이상이 비준한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편, 49년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이 존재하지만 이 조약은 내용도 미흡하고, 단 60개국만이 비준해 이행과 감시체계 또한 빈약하다.

그리하여 최근 "여성인신매매와 매춘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철폐에 관한 조약"이 추진되고 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4년간 검토하여 왔고 많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과리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신매매된 여성을 '인권피해자'로 보는 반면 해당국에서는 그 여성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정당한 절차없이 매춘여성을 재활센터나 캠프에 강제수용한다든지 직업을 가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거리에 있는 어떤 여성이든지 부랑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춘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부과되는 법적용은 무거운 반면, 그 이용자와 매춘으로 이득을 취한 자들에겐 가볍다. 이 때문에 매춘에 대한 책임논쟁과 인신매매의 문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인신매매와 매춘문제는 설령 일부 여성의 문제일지라도 모든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간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다름아니다. 요컨대, 인신매매와 매춘, 기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은 모든 여성의 인권을 위한 싸움인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4일(금)

제 9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대학교 방학과 함께 농활(농촌활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농활 가운데는 특히 환경파괴로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의 발길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인천 앞바다의 섬 영흥도는 ‘환경현장활동대’ 소속 대학생 1백80여 명이 맞이했다. 서울, 인천, 전북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9일까지의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손을 돕는 한편,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예정이다. 강성호(고려대 4년) 씨는 “섬 안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9명 구속재판 현재 영흥도에서는 이제남 씨 등 지역 주민 9명이 구속(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되어 재판을 받을 만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지역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51개 사회단체도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 홍성훈 등)를 통해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시 당동성당에서는 두달 가까이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각종 선전작업과 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영흥도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검문검색·사진촬영까지 당해 이같이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만큼

대학생들의 활동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도를 통해 영흥도로 들어가기까지 대학생들은 무려 네 차례의 검문검색을 당했으며, 섬 입구에서 한바탕 농성을 벌인 끝에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마을회관 등지에 마련된 대학생들의 숙소 앞에선 사복형사들의 감시와 사진촬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생들이 영흥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주최의 이장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선 “불순한 예들이 내려오니 조심하라”는 내용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농활의 마지막날이면 늘상 진행되는 마을잔치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람이 모이면 잔치 불허”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는 영흥도 외에 월성, 영광, 보령 등 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전국 6개 지역에서도 9일까지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 · 새로 나온 책-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 안된다”

노동법·안기부법 낚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재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김 교수는 “누구도 국민이 중심에 서는 권력구조를 가져다 줄 수 없고,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국민이 직접 나설 때에만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든, 인권보장이든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은 결국 헌법개정 주도권을 국민이 장악할 때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의 또다른 한편의 논문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펴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국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과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된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해서 절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짚어 보았다.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제6별관이었다. 이 건물은 지하 3층까지만 존재하고 지상구조는 없어 건물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돼 있으며 본관 지하와 긴 통로로 연결돼 있다. 이 건물 지하 2층은 북도 양쪽으로 화장실이 딸린 4-5평 크기의 취조실들이 10여개 가량 늘어서 있으며 중앙에는 대형 취조실과 함께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수한 창문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한겨레신문 95년 12월 30일자)

지난 95년 안기부 청사가 내국동으로 옮기고 난 뒤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던 남산 안기부 청사의 모습이다. 남산 안기부에는 2만4천8백여명의 부지에 총 41개동이나 되는 건물들이 있었다. 제6별관만이 아니라, 제5별관 등의 장소에서 중정과 안기부는 34년 동안 술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제5, 6별관 등에서 최소 20일 이상 온갖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검찰에 송치될 때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끌고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들곤 했다. 검찰에서 다시 안기부로 끌려간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안기부의 이 말이 무척이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입을 다물었다. 입을 열어 다시 지하실에서 알몸인 채로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을 당하느니 잊고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은 수지만 가끔씩 안기부를 검찰에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당하느니 잊고 말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손병선씨(현재 전주교도소 수감중)는 94년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손 씨는 이 고소장에서 정형근 안기부 제1차장(현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수사관, 수사 보조역, 의사 등 13명의 인상을 세밀하게 적시하였다. 물론 수사관들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름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 후 서울지검은 손 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듯하더니 지금까지도 조사중이라고만 한다. 93년 김영삼 정권 들어 처음 안기부가 다른 간첩단 사건인 김삼석-김은주 납매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기부장조차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 존재를 시인했던 프락치 배인오(본명 백홍용)씨가 독일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김성훈 과장과 윤동한(또는 윤봉환)의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도 공개했지만, 검찰은 이들 안기부 수사관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89년 안기부 고문 수사관들의 얼굴을 몽타주로 그려가면서까지 고소했던 홍성담씨의 경우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89년 서경원의 위법 방북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방양균 씨도 93년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씨와 안종택 검사(현 대검 중수부 2과장)를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안기부 인권유린, 대부분 미제로

93년 11월 서울지검에 따르면, 6공 당시 안기부의 불법 인권유린을 고소·고발한 사건 14건 중 13건이 1-4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확인한 적이 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1조는 이런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제19조에서는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93년 안기부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7년). 검찰은 피고수인 안기부 직원들을 제대로 불러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다 흘려버린다. 안기부는 검찰도 다룰 수 없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를 두려워 하기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2년 3월 20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년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

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황대권씨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냈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국제인권조약들이 고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결국 안기부의 과거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피고소, 피고발된 안기부 직원은 총 42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289명이 무혐의 처리되었고, 57명이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도 가지 않았으며, 미제사건이 20건이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부도 같은 장단

그렇다 보니 안기부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최근 외국에서 북한 관계 연구활동을 하다 귀국한 어느 교수는 자신이 발간한 책과 활동을 문제삼아 자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더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은밀한 위협을 가하고 있 것이다. 실제 95년 박창희 교수 구속사건은 안기부의 위협과 미행을 두려워한 한 동료 교수의 밀고에 의해 발생했다.

이 지경이니 안기부를 통제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안기부법은 “지금은 안기부의 과거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 등 철저한 과거청산 작업을 행할 때다. 안기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곽노현 교수, 방송대 법학)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안기부의 과거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 등 철저한 과거청산작업을 행할 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8일(화)

제 9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용역강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조직적 테러와 유간으로까지 이어지는 노동현장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 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프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 보고에 이어,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용역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등 원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조직적인 탄압 양상과 관련해, 김철준 변호사(후프 노조 고문변호사)는 "용역강패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전문가들의 상세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업장 폭력탄압은 노동문제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라며 "폭력과의 전쟁, 용역강패와의 전쟁을 전국민의 관심 속에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 전국노점상연합회 부회장은 "용역강패 고용현황 등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국회의원들의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했다. 한국후프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자 수가 연인원 9백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조장·은폐되는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소용없다"며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부소장은 더불어 "폭력탄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 조직적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유미 민주노동 여성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에 공동대응을 제안할 것이며,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를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 요구

검찰, 인권유린 은폐·조장 또한, 각종 폭력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철준 변호사는 "폭행을 당하면 사건을 찍고 진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왔지만, 수사기관의 시간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 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정은 김 목사에 대해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태에서 2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목사가 3일 오후 자진

출두하자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류재를 군 장례식과 관련해,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공방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속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여 신앙 양심적으로 행동한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련자 29명이 대거 연행·구속될 당시 함께 구속되어 1실에서 실형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31일 출소했다.

바로잡습니다.

5일자 2면 '북한동포돕기' 관련기사 중 '두 단체'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입니다.

..... 주요 공판 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임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9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국

박노해 출판기념회

「새벽에 길어 올린 한 생각」

때: 7월 8일(화) 오후 6시 10분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주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기획 -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더욱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보독점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민합의를 무시한 채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국민에게 선택권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진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행정에 대한 분노에 앞서 이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 준비 95년 3월 본격화

내무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94년 2월 행정세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로 선정되었다. 95년 3월 15일 「주민등록증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5년 4월 7일 15개 기관 17명이 참가하는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위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 포함되었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무부는 "안기부는 보안관련 전문가로 카드위조, 변조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다"고 대답한다.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안기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95년 9-12월 전자주민카드 총 사업비가 2천7백35억원 규모로 확정되었고, 96년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예산 명목으로 국고와 지방세가 책정되어 왔다. 또 96년 6-9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했고, 10월 7일 데이콤과 전산망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올해 제도준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 98년 제수도 실시 및 주민카드 발급 착수, 99년 전국민 실용화의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7월로 미뤄지긴 했으나, 이제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셈인데, 일정표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12월말까지 개정된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이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제라도 제동을 걸고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신는다.

주간/인권/호/름

(97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 6월 30일 (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씨 등 3명 구속/1백21개 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 7월 1일 (화)
민변, 여야 각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제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안기부가 정치사찰 등 정권안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서울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 7월 2일 (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와 1천4백47명 단계감축에 합의/서울지법 공안2부(신건수 부장판사)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성금 유용혐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

◆ 7월 3일 (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12·12 사건 관련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전국민추월도지 하철노조연맹, 9일부터 서울·부산 지하철 파업돌입 발표

◆ 7월 4일 (금)
서울지법 형사4단독(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8월 선고/전국 국립대노조 서울대 문화관서 창립총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화 의원, 전국 47개 대학 복지학과 교수 2백25명 중 1백22명을 대상으로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점 D+로 평가됐다고 발표/서울경찰청,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등을 독점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등)로 이범업씨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 씨와 서명아 씨 구속/프랑스, 아프리카 8개국에 주둔중인 병력 8천명 철수 등 대아프리카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 시사/세계식량계획 북한 어린이 중 80% 가까이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고 발표

◆ 7월 6일 (일)
민주노동당과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2만여 명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97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및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 열려

인권 시평

악법과 인권

김 동 한 (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 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 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법이다. 말이 법이지 법의 탈을 쓴 폭력도 구인 셈이다. 악법이 존재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형식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이다. 악법은 집권자 입장에서 비판세력과 적대세력을 제압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책적인 셈이다.

악법...법의 탈을 쓴 폭력 이러한 악법이 증세의 마녀사냥, 미국의 메카시선풍, 우리의 빨갱이 사냥과 만날 때 그 위력은 메가톤 급이다. 인간이라는 동물만큼 잔악한 동물은 없다는 것을 이른바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법은 몇몇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자유와 사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론적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현실이 보여주는 것은 힘의 논리이다. 그 힘을 권력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 권력의 무상함을 역사는 반복하여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상배들은 불나비처럼 권력을 쫓고 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는 스피노자는 보이지 않고 내일 감옥에 가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두환·노태우 같은 독재자성향의 인간쓰레기들만 보인다. 이들에게 나라의 심부름역을 맡겨야 한다니 압담하다. 분단을 즐기는 자들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북은 북대로 물질적인 것부터 무너져 내리고, 남은 남대로 정신적인 것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남·북은 언제까지 이래

야 하는지 확실한 대답을 할 자가 없다. 자유와 정의가 없다. 평등과 화해가 없다. 남북의 집권층은 저주받아야 할 만큼 많은 죄를 역사와 민족앞에 저질러 놓았다. 북쪽 당국은 미국·일본은 좋으나 남쪽은 싫다. 남쪽 당국은 중국·러시아는 좋으나 북쪽은 싫다. 타민족·타국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주변 4강에 돌아오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한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할 일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다.

전봉준의 가능성을 되새겨보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

악법철폐 운동은 인권운동의 첫단계이다.

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않았다.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고 인간평등을 부르짖던 민중에서부터 백성들에 대한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분연히 일어서 악법(각종 세금을 규정한 세법)을 철폐하고 새 세상을 이루려 했던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굽이굽이에는 살맛 나는 인권세상의 흔적이 크게 남아있다. 물론 실패한 결과를 지나치게 과정의 위대함으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역사에서 가능성을 읽을 수는 있다. 나아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러한 역사의 흔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악법은 인권침해와 동적의 양면 같은 형국으로 이해할 때 악법철폐운동은 인권운동의 첫단계이다. 이른바 민주정부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권시절 반공법, 데모방지방 등 2대 악법반대 투쟁이 있었던 흔적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학원 안전법 파동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성향을 가늠케한다. 김영삼 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날치기 악법은 여전히 남아 있고 96년 12월말에 날치기 처리한 2대 악법(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은 올 봄 노동관계법 재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양금이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국민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다. 정치관계법(선거법 포함)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 또한 악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먼저 달려 1등을 한다거나 혼자 뛰어 우승을 하는 것은 분명 악법에 관승하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 때문에 한번도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해 본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 과제를 풀지 않고는 민주주의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악법들이 대부분 정치, 사상 분야인 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도 없이 독재에 허울만 씌운 모습으로 반세기를 훌쩍 넘겨 버린 불행한 이면에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충성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20세기 말의 우리나라는 변해야 산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은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다. 악법을 집권의 도구로 삼아 순간적 부귀영화에 빠져 허우적대는 무리들이 집권을 계속하는 한 인권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하자면 남녀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법이라면 악법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법은 대부분 밀실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날치기 처리되기 쉽다. 그렇게 잘못 태어난 법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악법을 청소하고 평등 세상을 기약하여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9일(수)

제 9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테러와 성폭행, 부당해고와 징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는 회사취업규칙(취규)을 통해서도 반인권적 통제와 억압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물론, 표현·사상의 자유조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개가 넘는 한타의 해고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악용되는 것은 '근무성적 불량'(취규 제84조)을 이유로 한 징계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구환(29·96년 5월 해고자) 씨는 '주임 재량으로 매겨지는 근무평가에서 여섯 차례의 최하 평점을 받게 되면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해도 최하평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해고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 (노민

투) 회원 최영환(28·성형과) 씨의 해고 사유 역시 근무평가제에 따른 '근무불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구환 씨는 "근무평가제 외에도 회사 기강문란 또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한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며 "사내에 남아 있는 노민투 회원들이 그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태연 법규무장은 "한국타이어와 같은 징계 사유가 많은 곳은 드물다"며 "이는 회사측의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단협에도 그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현 한국타이어 노조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서광 씨 등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은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2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민주노총·민교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김삼곤·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공사측은 즉각 민철노련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공사측에 있다며,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민철노련의 투쟁은 개악된 노동법 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현 시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은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펴본다.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과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짚어 보았다.

기획: 전자주민카드 ① 예산집행과 법적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월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천7백35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미 96년 4백83억원과 97년 8백82억원이 확정되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96년 가을 두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근거 및 법령 정비 계획'에 대해 추궁하자, 내무부측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주민등록증의 서식)에 의거해 주민등록증의 갱신과 증의 서식, 발급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 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 뿐이라는 내무부의 대답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할 뿐이다.

또한 내무부는 "운영절차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전산서식과 운영절차에 대한 전산업무의 개발이 선행된 후 법령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97년까지 준비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법적 근거를 뒤로 미룬채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 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월에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홍보와 연구개발, 사업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주민카드 발급 또는 개발예산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갱신비 명목으로 상정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갱신과 주민카드의 발급은 전혀 새로운 별개의 사업이므로 주민등록증 갱신 예산을 주민카드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지 변상조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범법행위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현(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가 국민여론의 수렴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30일과 11월2일 두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민의사 수렴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때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중(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안기부 미란다원칙 무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 측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시 30분 분당에 사는 형님 집 앞에서 안기부 직원 3명에게 붙잡혔다. 강제연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김 씨와 안기부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사이 김 씨의 형과 주민들이 뛰어 나왔다. 김 씨는 새벽 2시까지 구속영장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실갱이를 벌이다, 출동한 분당소제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가 다시 분당파출소로 연행되었다. 그뒤 새벽 4시 내곡동 안기부청사로 옮겨졌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96년 5월 결성된 단체로 회원은 10여 명이다. 그간 미군기지 수도요금 받아내기 서명작업,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풍물강습, 통일기행등의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 안기부 기획시리즈는 지면사정으로 다음주에 나갑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 -내무부 자료

총사업비		'96년			'97년			'98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273,520	184,220	89,300	48,240	30,440	17,880	62,454	36,054	26,400	162,826	117,726	45,100

(단위: 백만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0일(목)

제 922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민운동본부)가 8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지난 4월 송찬화(58) 씨는 자신과 딸을 학대하던 사위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 윤선화 씨는 18년간의 구타와 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복역중이다. 윤 씨는 현재까지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윤 씨의 아이들 역시 가정폭력의 영향 때문에 의사표현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법 제정 지연속에 폭력은 계속되고

그동안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어선 나포, 한국인 폭행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 때: 7월 10일(목) 낮 12시
- 곳: 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국민운동본부는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9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회의의 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대회'를 갖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

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히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역시 가정폭력에서 기인한다"며 "학교폭력의 근절은 가정폭력의 근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의 즉각 출동 △피해자들의 쉼터 보장과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봉사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정의전화 인권부장은 "핵심 조항을 비롯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 3당이 거의 합의한 상태인데도 법 제정이 안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게으름을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책- 『1996 노동관계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관계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률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제 관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노동판결의 파기환송률은 37.3%로 95년 민사본안판결의 파기환송률(9%)과 행정본안판결의 파기환송률(15.5%)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승소율은 33.33%로 민사판결의 원고 승소율 89%에 비추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별 분석에 있어, 파기환송률과 최종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높은 대법관은 안용득 대법관이며, 근로자 승소율이 가장 낮은 대법관은 지창권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창권 대법관의 경우, 파기환송 판결의 모두가 원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판결을 뒤집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책 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고 있다. 주요 평석으로는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 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분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격 8천원, 문의: 522-7284)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틀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몇 몇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에 국회의원) 비서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경우 우려점에 대해 이같이 털어놓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민카드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무부 호언장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내무부는 "국민의 감시·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

서 카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고안'에서 ▲개인 정보 파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공유할 정보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보수집 이전에는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관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 설치

또한 내무부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집중화, 전자주민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우선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병원진료기록, 교통법규 위반사항, 재산상태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모아 놓은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자료 등은 주민카드 발급후 삭제함으로써 자료집중

화를 방지한다. 아울러 주민카드 자료 이용자가 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카드자료를 불법유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껏 국민합의를 무시해온 내무부의 사업방식에 비춰볼 때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안장치 과연 완벽할 수 있나

이러한 내무부의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내무부가 보안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남용은 곧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본래 목적인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자료: 내무부>

분야	35개 항목
주민등록(8)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호주 · 세대사항 · 병역사항 · 주민등록 기관코드
운전면허(8)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발행기관 · 면허조건 · 적성검사기간 · 교부일자 · 정지/취소여부 · 면허상태
의료보험(8)	· 보험자 기호 및 명칭 · 보험자구분 · 관리번호 · 피보험자사항 · 피부양자 사항 ·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 진료지역 · 유효기간
국민연금(8)	· 최초취득일 · 가입종별 · 총가입월수 · 급여종별 · 가입상태 · 수급증서번호 · 최종수령일 · 최종보험료납입유무
인감	· 인감(선택)
지문	· 지문
발급기관	· 발급기관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1일(금)

제 9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달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6월 10일 20명, 11일 2명, 12일 20명...18일 12명, 19일 35명...7월 7일 4명. 연일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연세대 87년 기념사업단] (단장 김광수 상대 학생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총련 출범식 이후인 6월 10일부터 7월 7일 사이 연행된 대학생의 수는 최소 2백36명에 달한다.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 조사에서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5월 2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구속이 집행된 대학생의 수가 무려 2백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총련 와해' 방침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연행·구속 사태는 지난해 4백62명의 구속자를 양산했던 연세대 사태에 버금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이후 연행사태들을 살펴보면, 대규모 경찰병력이 학원 내로 들어가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거나 사복형사가 직접 대학 구내로 투입돼 학생들을 체포한 사례들이 두드러진다.

6월 10일 새벽 부산대 학내 문창회관에 사복형사와 백골단이 들어가 총학생회장 백태현 씨를 연행한 사건을 비롯해, 1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전경 2개 중대, 사복 1개 중대, 트럭 2대가 투입돼 학생회관에 있던 학생들을 무작위로 연행하고 4명을 구속한 사건, 16일 경기대에 사복체포조가 투입돼 4명을 연행한 사건, 19일 건국대 내 동아리방에 있던 학생 31명 연행 사건 등과 15일 등산객으로 가장한 형사에 의해 학교 안에서 연행된 동아대학교 부총학생회장 박규도 씨, 18일 교내 법과대 앞 전화박스에서 연행된 연세대 법대학생회장 김선일 씨, 27일 교

문 앞에서 선전활동을 펼치다 연행된 연세대 상경대 학생회장 김광수 씨의 경우 등은 경찰의 검거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방학을 맞아 농활을 진행중인 대학생들이 현장에 파견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충남 제천 원바리에서 농활 중이던 동국대생 1명이 마을회관에서 서울시경 보안과 형사에 의해 연행당했으며, 7일 충남 청양에선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경남 사천에서는 경성대 이과대 학생회장 정현욱 씨 등 3명이 연행되었다.

이러한 연행사태에 대해 연세대 기념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혐의나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학생들을 무작위적으로 연행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의 송소연 간사도 "구속자 가운데 80%가 불심검문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인데, 대부분 집시법과 폭력 또는 화염병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우려되고 있다.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정효순 씨가 10일 아침 7시 대전 자택에서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되었다. 정 씨는 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북한동포 돕기 성금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오전 이정오(범민련 전 사무국장) 씨가 안기부측으로부터 기택수사를 받고 '범민련 통일운동 평가서'를 비롯한 자료일체를 압수당했다.

이로써 북한동포돕기 성금모금 사건과 관련해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권한대행)·이천재(부의장)·나창순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연행·구속되었다.

충남대 총학 간부 7명 연행

10일 새벽 4시경 박범창(25·충남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씨를 비롯한 간부 7명이 자취방에서 연행되었다. 박 씨는 대전 북부경찰서에서, 나머지 6명은 대전시 옥계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박범창·최지용(25·문과대 학생회장)·박선호(28·총학 간부) 이상 수배중/이성미(33)·시니희숙(24)·권주한(28) 이상 총학생회 간부

황장엽 발언 악용 우려 전국연합 논평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0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모순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황 씨의 북핵문제·황장엽리스트·북의 전쟁도발 등의 발언이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황장엽)리스트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보고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조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말해 "지배권력의 탄압도 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행정편의측면에서 보면 연간 주민등록증·초본, 인감증명서 등 1억7천만 통의 증명발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읍·면·동 행정사무의 60-70%가 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므로 최소한 담당공무원 50% (약 5천명)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간 7조3천여억 원 수익 발생 한국전산원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따르는 각종 편익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향후 10년간(1997-2007) 약 7조3천6백21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전자주민카드사업의 타당성 분석)(1996. 8))고 보고했다. 세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2천5백54억, 재발급 비용(사진값) 절감 2천2백9억, 주민증 발급비용 절감 1천6백7억, 공무원 인력감축 1조3천3백14억, 의보 인력감축 2천44억, 경찰범죄금 징수 증가액 1조 6천9백46억 등이다.

공무원 5천여 명 감축 가능한가 이에 대해 이승중(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계과정에서 상당한 과장과 논리적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용절감부분에서 공무원 인력감축을 정부가 과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전자주민카드 시행준비 초기단계였던 지난 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 위원장은 "전자주민카드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증·초본 발급등 민원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읍·면·동 폐지문제를 거론했다(국민일보 95년 4월 19

일자).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용태 내무장관은 박동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 발언은 사전에 불과하며 전자주민카드가 통용되더라도 읍·면·동의 업무량이 격감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조선일보 95년 4월20일자).

공무원의 인원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보다 오히려 전자주민카드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훈련·적용 및 상대적 고급인력의 채용에 따른 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채 편익만 고려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실령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인력감축이 사실이라 한다면, 마땅히 재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살찌우기, 주민부담 외면 오히려 내무부는 주민카드 도입에 있어 행정기관 자체의 비용만 계산했지 주민들이 부담하게될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있다. 카드발급 당시 비용과 실시후 재발급과 관련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략 1만원씩 계산할 경우 총 5천여 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제를 실시할 경우 그 카드를 읽고 사용하기 위해 은행, 보험, 우체국, 병·의원, 약국 등 민간부분이 부담해야 할 부담 역시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일부 제벌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하는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승중(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을 비판하는 글을 통해 "전자카드사업의 총시장규모는 7천억-1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편익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들 제벌과 외국의 기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추계에 따르면 주민카드사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1997-2007년 사이 1천4백60 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달의 민변』

97년 6월호,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

행정 간소로 국민편의 도모해야 내무부는 국민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등에 무인처리기를 설치해 손쉽게 본인이 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부득이 별도의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초본 등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인처리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지고 '국민편의 도모 측면'이라는 기본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각종 증명을 통합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증명의 발급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행정과 통제의 편익을 더 증진한 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편익을 명목으로 인권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끝>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관련 기자회견
 - 때: 7월 11일(금) 오전 9시
 - 곳: 가톨릭센터 7층 703호
 - 문의: 광주정평위 (062-227-6008)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 때: 7월 12일(토) 오후 2-5시
 - 곳: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 문의: 참여연대 (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 때: 7월 12일(토) 오후 1시
 - 곳: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정문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2일(토)

제 924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을 상반기 사례조사

최근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연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을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폭력은 크게 △시위위압 과정에서의 폭력 △연행·체포 단계에서의 폭력 △시위와 무관한 시민폭행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1월 9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철폐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이 집회방송용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장진호(35·한국중기 해고노동자) 씨를 곤봉과 군화발 등으로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월 15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귀가 중이던 시민 김정화(54·대전시 가정동) 씨가 뒤쫓아온 전경 10여 명에게 무차별 곤봉세례와 발길질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고 목에 김스를 요하는 증상을 입기도 했다. 이는 경찰의 화풀이성 폭력행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었다.

잇따른 총기남용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남용 사건도 잇따랐다. 3월 24일 단국대생 박상태 씨는 충남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동료 10여 명과 함께 화염병 및 페인트병 투척시위를 벌이고 달아나던 중 경찰의 조준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다. 또 6월 18일 충남 병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외출·외박 허용 및 자율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M-16 공포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경찰이 전쟁용 살상무기인 M-16 소총을 시위해산용

으로 사용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환자 강제연행

한편, 5월 23일 정호연(25·충남대 97년졸) 씨는 오른쪽 눈에 대한 1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대전북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병원 담당의사의 만류도 뿌리친 채 정 씨를 연행하고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는 "피의자가 환자인 경우 연행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정 씨는 현재 형체만 알아보는 정도로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집시법, 사실상 허가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가 내려지는 사례는 학생집회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대전총련)의 경우는 지난 4월 이후 제출한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받았다. 집회 때마다 대전총련측이 "현행 집시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평화집회를 치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에 따른 공공질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보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집회현장에 '신고가 안된 시위용품'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가 봉쇄되거나 경찰폭력이 행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1월 18일 '노동법 개악 철폐 집회'에 이어 대전역 광장부터 동백4가까지 예정됐던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은 '근조 민주주의'가 새겨진 꽃상여를 문제삼아 행진을 봉쇄했다.

대전충남연합은 다음주 대전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경찰폭력 사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전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정평위를 비롯한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5일 가톨릭회관 7층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 기자회견: 15일(화) 오전 11시 가톨릭회관 3층
 - 항의집회: 15일 낮 12시 국회앞

마석 모란공원 앞 아파트 건설증지 요구 고층 아파트 착공 ... 유가협등 거세 반발

마석 모란공원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등 70년 이후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열사 55명이 잠든 곳으로, 광주 망월동묘역과 함께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져왔다. 지난 5월초부터 그랜드 백화점측이 17층 높이의 아파트 1천여 세대 공사를 시작했는데, 유가족들은 "지금도 명예회복이 안되었지만 역사를 아는 이땅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들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징적 의미로서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협, 15일 이후 농성돌입
이에 열사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전국 유가협, 상임의장 박정기)와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는 남양주 시청측에 아파트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 6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가협 등은 3차로 오는 15일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약 그때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파트 공사 작업을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남양주시청, "법대로 집행했을 뿐"
이에 앞서 11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기(박종철 열사 아버지) 유가협 상임의장과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니) 씨 등 6명은 10일 면담약속에 따라 남양주 시청을 방문했지만 시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부시장 및 주택과장 등은 면담자리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 법으로도 주택에서 5백미터 떨어진 곳에 묘지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개인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시

청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공사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고, 아파

트 동수를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이는 식으로 설계상에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기영(건설도시부 주택과) 과장은 "도덕성과는 무관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고 말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인권영화

파드레 파드로네 (My Father, My Master)

사회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감독: 파비아니 형제/주연: 오메로 안토누피, 마르첼라 미켈란젤리/77년작

인간이 상황과 변화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떨치고 일어서는 인간승리를 우리는 주변에서나 영상으로 얼마든지 보아왔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파드레 파드로네>는 색다른 게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비아니 형제가 칸느의 황금가지를 움켜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사회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불의한 체제에 저항하는 극명한 방법을 지독한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근본)를 극복하는 아들(대안)로 그려낸 것이다.

못살리니를 지나왔던 아버지들의 깊고 굵은 주름만큼이나 그 땅의 아들들 역시 새시대에 대한 갈망도 강렬하다. 그리고 그 갈망이 한 인간에게 조용한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아버지는 더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삶을 살 것입니다!" <파드레 파드로네>에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아들이 없다. 아들을 보란듯이 키워보려는 아버지도 없다. 생계를 위한 노동력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아들의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그 몸부림을 일깨우는 것은 지루함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음악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탈출구인 음악은 영화 전반에 걸쳐 적잖은 의미로 다가오는데 장면마다 민감한 관찰을 요구한다. 또한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려던 독일 이민이 실패로 끝나자 아버지의 강요로 군입대해 아들들은 섬사람 특유의 사무리와 문맹에서 벗어나려는 치열한 자기부정이 언어학자의 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고지대의 삭막한 섬에서 양을 치며 어린시절부터 장성하기까지 아버지에게 못매를 맞는 아들의 모습은 별로 낯설지 않다.

전쟁을 겪고 60년대를 거처온 우리네 아버지들의 절대적 권위와 경직된 사고가 가족들을 움아내는 경험을 우리도 지나왔다. 때문에 어린 가비노에게 가해지는 아버지의 빈번한 매질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것이 폭력으로 비쳐지기보다는 기존질서의 부패한 구조적 억압을 상징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모습이 영화가 갖는 또 하나의 감점이다. 상징이 과장되거나 비약되지 않고 일상에서 전혀 무리없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장센으로서의 음악적 감흥과 반복되는 상징적 표현들이 영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도 훌륭히 그려냈다. 빈곤했던 그 시대에 여러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위치라는 것이 자연히 그러한 방식을 요구했다. 결국 그 매질이 더 큰 반항을 가져왔고 그 삭막한 생활이 더 큰 욕구를 자극시켰던 것이다.

이미 기성세대에 속해 있던 40대 후반의 파비아니 형제는 젊은 가비노를 통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시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전경일=민주연론운동협의회 영화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5일(화)

제 9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충남 신탄진에 소재한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에서의 강제노동, 청부테러,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김진균 서울대 교수, 장창원 목사, 배법식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한국타이어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문조사단」 소속 각계 인사들은 지난 10일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을 방문해 현장확인에 나서는 한편, 청주지검을 찾아가 96년 5월 15일 한타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박 아무개(28) 씨 사건의 담당검사를 면담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폭행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지검 권선용 검사는 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증거로 제출된 주스병, 담배꽂초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으나, 지문이 말라버려 감식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권 검사는 "피해자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문채취 건성·피해자 요구도 묵살
반면 피해자 박 씨는 "사건현장을 1년간 보존했다"며 "범인들이 장갑을 끼지 않고 만졌던 문고리 등에서 지문채취가 가능하고, 머리카락·체모 등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컵, 속옷, 담배꽂초 등 몇 가지 증거품을 단 한차례 수집해 갔을 뿐이며, 그것마저 '아예 지문이 안 나온다'며 국과수의 지문감식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에게 현장 정밀조사를 요구했지만 묵

살당했다"며 "검찰이 최대한 성의있게 수사만 해 준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도 10일 범행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현장이 1년 넘도록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인의 체액(정액), 체모 등에 대해 유전자감식 등 범인색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 조사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지문채취를 위한 현장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청주에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을 "일반적 강간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테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날 박 씨와 함께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청주지검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불충분 수사' 또는 '축소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가 벌어질지에 대해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중신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하는 한 사건 해결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좀더 물증과 근거를 확보한다면 재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순 변호사도 "현 제도상 '불충분 수사'를 이유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재수사를 하느냐마느냐는 검찰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측에서 역으로 '지문감정 의뢰' 등의 방법을 써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항의운동 전개
한편, 12일 오후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진상규명과 22명 부당해고 철회,

2억7백만원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배석법 부위원장은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진상조사단 활동을 16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불매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측은 또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 소속 노조에서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한국타이어 반입 및 장작을 거부하는 투쟁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역시 10일 회사측으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서라도 전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이서광 씨 등 해고노동자 6명의 단식농성이 29일째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여부가 무엇인지 편한 사실"이라며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 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15일 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

·기자회견: 오전 10시 카톨릭회관 3층
·항의집회: 낮 12시 국회 앞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간첩혐의로 구속돼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제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일본의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백90명은 14일 방한한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 전국회의」 대표단을 통해, 손유형(68), 김병주(74), 김장호(56), 서순택(68) 씨 등 4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주한일본대사관에 접수시켰으며, 이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에는 카시하라 중이찌(자민당) 의원 등 참의원 1백14명과 도이 다카요(전 사민당수) 의원 등 중의원 7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에서 "손 씨 등 4명 모두 고령인데다 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들의 불안함과 생활상의 고통이 막중하다"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이미 95년, 96년에도 각각 1백29명, 1백31명의 중·참의원 서명을 받아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손유형(전주교도소) 씨는 81년 구속되어 오는 2천년 만기 출소 예정이며, 83년 구속된 김병주(안동) 씨는 2001년, 82년 구속된 김장호(대구) 씨는 2002년, 90년 구속된 서순택(대전) 씨는 2003년에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교회협 정의와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제49주년 제헌절을 맞아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15일(화) 진관스님(간첩 등) 합의3부, 오전 10시, 고법 303호, 형소심 최인기, 정영훈, 이용석(국보법) 합의21부, 오후 2시, 311호, 속행
- ▶ 18일(금) 이승구(국보법) 합의 22부, 오후 2시, 319호, 속행 윤용배(특수공무집행방해) 합의6부, 오전10시, 424호, 선고 유규하(국보법) 8단독, 오전 11시, 522호, 선고 이교관(명예훼손) 10단독, 오전 11시,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7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 ◆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 95년 대비 33.8% 증가/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조사결과 총 4백14건의 평균하도급률이 71.7%에 불과/김영환 국회의원, 한국통신이 114 전화내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사건 수사·공판기록의 증거조사 결정을 거부했다고 발표

- ◆ 8일(화)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외국 특정업체를 인력송출업체로 선정해 주면서 외국인력 도입 브로커 김윤필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주태 통상산업부 행정관리담당관 구속/정부, 학교폭력 추방위해 검사 1명당 5-6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학교담당 지도감사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52개 검찰청에 '학교폭력 전담수사반' 운영키로

- ◆ 9일(수) 전국 33개 대학 2백6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수원 아주대서 개막

- ◆ 10일(목) 병원노련, 산하 68개 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하면서 '촌치근질' 등 의료계 개혁 공동요구

- ◆ 11일(금) 최상업 법무부 장관, 황장엽 씨가 접촉한 국내 인사에 대해 "간첩행위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황 씨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송·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매시립병원과 여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 적발/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이병기 부장검사), 범죄단체 구성과 갈취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아무개(17·s고 2년 중퇴) 씨등 8명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혐의 제외

- ◆ 12일(토) 단국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중인 수배학생들을 연행하려던 대공요원들이 학생들과 충돌사태 발생하자 공포탄 쏘고 달아나

- ◆ 13일(일) 동국대병원 예방의학과 김수근 교수등에 따르면 (주)대우 양산공장에서 유기용제 배합작업을 하던 허도량(24) 씨가 입사 2개월만에 '전격성 간염'으로 숨져/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상속세 명목으로 70억원 추정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청국이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말들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아기였을 때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말고는 딸들에게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많은 것들 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골라 잡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준다. 이런 소박한 꿈이었다.

"보슬아, '눈높이'도 '구몬'도 '속셈학원'도 없는 외국에서 잠시 손바닥 만한 아늑한 학교를 다니다 온 죄로, 애국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 나뭇기는 커다란 학교 2학년 교실에 처음 나가던 날부터 너는 생존경쟁의 쓰디쓴 맛을 보아야 하는구나. 수영장 물 속에 있을 때, 철봉대에 매달리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너는 말하지만, 지금은 구구단을 외어야 한단다. 숙제니까. 오늘은 책을 읽어야 한단다. 숙제니까! "아빠, 그래도 난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못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창피 당하는데?" "그러면 학교 안 가버리지 뭐..." "!!!"

학교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인성교육'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지속적인 상업주의와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던 언론들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갑자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댄다. 입시 중심의 교육 속에 인간교육이 실종해버린 한국 교육의 업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옳다. 그러나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깔아뭉개는 이 사회에서 아무런 의지도 없이 골백년도 되풀이되는 '인성교육' 주장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제로로서의 교육은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기계공업에 의한 대량생산 아래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균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학교교육의 첫째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으며,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교교육은 의식의 여지 없이 개발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가혹하게 억눌렸다. 인권이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인성'이 자랄 수 있단 말인가? 박정희의 독재개발을 온갖 수사로 찬양해대는 입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박정희식 악육강식 교육에 있다. 악육

강식의 경쟁교육에서 탈락하는 아이들은 표현에는 서툴러도 결국 자기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안가버리지 뭐". 그것은 세상에서 버림 받고 자기도 세상을 버리겠다는 슬픔에 다름이 아니다. 아이들의 이 엄청난 슬픔을 목살하는 군사정권은 손쉽게 힘으로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누르지만 놀리면서 아이들의 사회는 병들어간다. 폭력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처음에는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중학생에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아이들이 어른 세계에서 폭력을 배운다.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실의 일면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자라서 도태된 어른이 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UN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의 꿈을 좇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상상은 절망적이다.

보슬아, '스페인'이라는 나라, '오렌제'라는 도시 교외에는 '본페스타'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100명의 아이들과 40명의 어른이 그 국민이란단다. 대통령과 모든 장관은 선거로 뽑히고,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 토론한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짓눌려 움쩍도 못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고 싶다." 이것이 이 나라 국민들의 희망이란단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다니고 어른들의 필요에서가 아닌, 어린이를 위한 공부를 한다. 낮에는 노동을 하거나 서커스 연습을 하는 데, 노동의 댓가로 받는 돈으로 아이들은 먹고 입고 공부한다. 모든 국민은 서커스 단원이고, 아이들은 하루 빨리 서커스에 가고 싶어 열심히 연습을 한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서커스를 보여주면서 '사는 일의 기쁨과 사랑'을 말해주기 위하여.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창피 당하지 않고 친구가 친구를 때리지도 않는다.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오지 않으며, 대통령이 무서운 얼굴로 '엄단'을 말하지 않는다. 보슬아, 이런 나라를 언젠가 이곳에도 만들고 너를 이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것이 아빠의 꿈이란다. 간절한 꿈이란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6일(수)

제 9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앞두고 각계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제주도에 상경한 최병모 변호사, 김삼근 목사(제주도 전자카드 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막지 못하면 결국 전자주민카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제주도지역 반대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 우선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반대여론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달 도의회는 전자주민카드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이같은 움직임과 7월 임시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속에 15일 서울과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각각 행사를 갖고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나섰다.

국민을 갈보는 정부의 오만

서울에서는 15일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연석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다음 법률 통과절차를 밟으려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갈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야 각당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관해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낮 12시 국회 앞 장기 신용은행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치러진 이 집회엔 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집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신한국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쿠르드족의 한 아버지가 이라크와 이라크 사이 국경에 아들을 묻고 있다. 그의 아들은 탈출 과정에서 죽었다고 한다.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의 광화된 도심을 걸어가는 두 모녀, 그들이 어디로 가고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70여 점의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어린 여자아이거나 중년과 노년의 여성들이다. 국가, 풍습, 나이 등 다른 점이 많은 이들이지만 한결 같이 아무런 표정이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탓일까. 두 손과 겨드랑이에 커다란 짐을 끼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한 남자의 무표정이 가슴 한구석을 찌른다.

15~20일까지 삼성역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에서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일보사 주최로 세계난민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난민의 실상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도 더이상 난민문제에 관하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사진전 개최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93년 3월 유엔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조약 당사국으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제사회에 부여된 긴급한 현안이라는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 시작된 이번 사진전은 이미 영국 등 약 50여 개 국가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엠네스티의 소장작품을 비롯하여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전은 서울 전시회를 마친 뒤 부산·광주 등 6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단체 대표들도 15일 오전 조찬모임을 통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전 9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단체들은 “국민적 합의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한다”며 “국민적 합의없이 법안이 졸속 통과될 경우엔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공대위에는 광주경실련, 광주민교협, 광주YMCA,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등 2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21개 사회단체들 역시 오는 25일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문규현 신부)를 구성한 뒤,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획: 안기부와 인권⑥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빛바랜 안보이데올로기가 빛어낸 희대의 웃음거리(문화일보 1993. 6. 17) ‘국가안보용’인가 ‘정권안보용’인가(조선일보 1993. 6. 18)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한겨레 1988. 8. 8 <워싱턴 포스트> 8월1일자 재인용)

‘둑’으로 전락한 ‘평화의 댐’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일제히 쏟아진 것은 93년 6월. 86년 10월 당시만 해도 북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대 2백여t까지 이를 것이라며 이를 수공에 사용한다면 12-16시간만에 수도권이 완전 수몰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연일 신문지상이 떠들썩했다. ‘올림픽 무산을 위한 북한측의 제2남침 음모’에 맞선 평화의 댐 공사 착공을 알리던 87년 2월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93년 6월 28일 안기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감사원(감사원장 이회창)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이었음을 밝혀냈다.

정부와 안기부는 무엇 때문에 북한의 수공 위협을 그토록 과장했을까.

86년 가을은 야당의 직선제 개혁투쟁, 유성환(신민당) 의원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는 국시발언, 86년 아시안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움직임, 건국대 사태 등으로 정국은 정말로 혼미했다. 정국을 돌파할 아무런 카드도 없던 정부는 ‘평화의 댐’으로 한동안 국민의 관심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 수도권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어린이의 저금통까지 동원해 6개월만에 무려 6백61억 원의 국민성금이 모아졌다. 온 국민이 정권안보 논리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셈이다.

정치공작엔 여당도 희생자

안기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권여 활동이야말로 안기부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김형욱 4대 정보부장의 정치공작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여당내 공작 사찰대상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로막을 지도 모르는 잠재세력과 김종필 공화당의장 및 그 계열이었다.

64년 10월 24일 공화당 초선의원 이만섭 의원(14대 민자당 전국구)은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재회를 주선하기 위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제안했는데,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 의원, 여당의 박준규 의원을 포함해 45명이 서명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외무부로 넘겨진 상태에서 결의안은 결국 사장되고 만다. 당시 김형욱 부장은 대북문제는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냉전시대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의원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①, 조선일보사, 1992, 116-117쪽).

훈령조작에 놀아난 이산가족의 아픔

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발생한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에서 우리는 안기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93년 11월 국회에서 이부영(민주당 부총재) 의원의 폭로에서, 11월 30일 감사원의 <훈령 조작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부는 동진호 선원의 송환요구를 북쪽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인모(당시 76세, 비전향장기수) 노인을 송환할 양보 의사가 있었다. 이 노인의 송환이 결정되면 이산가족방문단 상호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씨(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는 급히 서울의 안기부에 알려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담은 가짜 훈령을 만들어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남북대화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안기부가 갖는 위세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이동복 전안기부장특보는 공직에서 물러났다. 비록 한 사람의 안기부직원이 사퇴했다고 하지만 그가 가져온 여파는 크다. 8차 회담 결렬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차가워졌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단 실현과 판문점 면회소 설치는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정보위원회 제기능 못한다

문민정부 들어 이러한 안기부의 행동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나. 93년 12월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했고, 안기부가 행정각부의 업무에 개입하는 통로로 비판받은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로서 정보위원회의 설치에 국회가 안기부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정보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다음 한 비서관의 말은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회의 안기부 통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안기부 내 국회담당부실이 있는 듯하다. 안기부 직원들이 국회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물론, 이따금 아는 체도 한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는 안기부를 다룰 수 있는 곳인데, 대외비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통제가 이뤄지지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 밖을 안기부 요원들이 포진하면서 관계자 외의 출입을 막는 공포스런 분위기가 조성된다.”

지난해 12월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면, 정치공작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댐 사건,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 등은 국민안보를 앞세워 정권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잿더미로 만든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8일(금)

제 9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국보법 구속자 1백36명을 포함해 모두 4백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박종신부의 '주사파발언' 파동과 관련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0-60명 정도가 구속되었고, 부여무장간첩 사건이 발생한 95년 11월 60명 구속, 96년 10월 80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수치이다.

체포과정 인권침해 심각

또한 '이적단체' 혐의로 대량 구속된 이른바 '조직사건'은 6월에만 노동정치연대·참여노련·한청련·교려대 '청년' 등 무려 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직사건의 대다수 구속자들은 한청련, 참여노련 등 공개적인 노동·사회단체의 회원이거나, 이미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전북대 자주혁신대오 사건),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교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박정애(순천공업전문대학 96학번) 씨는 수업도중 "학생처에서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그곳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6월 24일 오대홍(전남대 사범대 회장) 씨는 사범대 3호관 교수연구동 내 교수연구실에

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3일 현재까지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시민·학생·군인·제야운동가 등 모두 3천6백6명이며, 전국 39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도 8백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민가협등 인권단체는 16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전·노사면 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면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민가협은 이후 매일 오후 1시에 거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의(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서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남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영(57·15년제 복역중) 씨의 부인은 "남편은 65년 휴전선 부근에서 조계잡이를 하다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남북된 뒤 22일만에 돌아왔다. 그간 아무 일이 없다가 18년이 지난 83년 10월 갑자기 안기부에

끌려갔다. 40일간의 고문 끝에 조각간첩이 되어 지금까지 복역중이다. 하지만 남편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며 "남편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조각간첩, 양심수의 석방없이 전·노사면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6공 피해 당사자들을 다시 한번 기만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데타적 음모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민가협, 유가협, 과거청산국민위, 전국연합 등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거리를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전·노사면 반대 서명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다.

한국타이어 애고노동자 이서광·김진중 씨등 6명 32일째 단식농성중

97년 월별 국가보안법 구속자(총 293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국보법	9명	20명	30명	61명	31명	136명	6명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은수미(강릉교도소 출소자)

재소자의 의료실태는 너무도 열악하다. 많은 재소자들이 그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난 6월 23일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은수미(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깊다. 특히 이것은 교도 행정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구속만 되면 재판 중이어서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이 간혹 재소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92년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5년 2개월의 형기를 치루었다. 그 기간은 한마디로 '병과의 전쟁'이었다. 안기부에서의 20일간의 조사와 고문으로 앓지도 못하지도 못한 정도로 허리를 심하게 다쳐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다친 허리는 두 달만에 회복되었으나, 10개월 쯤 지난 93년 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외부 진료 결과 폐렴이 나타날 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이었고 나와 가족은 대학병원에서의 재진료를 요구했다. 진료 결과는 일주일간의 입원과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으나 교도소 측의 반대로 결국 정밀 진단은 무산되었다. 또 통증도 자연 완화된 데다가 재판이 끝나 강릉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95년 4월 29일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오른쪽 하복부 통증으로 쓰러졌다. 교도소 의무과에서는 맹장으로 진단하고 외부 병원으로 나를 옮겼으며 외부 병원에서도 맹장으로 판단,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수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마취를 기다리며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동안 마취의와 수술집도의를 은밀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환자 폐가 나쁘네 마취해도 좋을까?" "그냥 하래 잠야. 간단한 수술인데..."

불안감이 밀려들었으나 마취약이 주입되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이미 6시간이 지나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상태였다. 늦게서야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다음날 새벽에 달려와서야 나는 위험한 순간을 넘겼음을 알게 되었다. 복부를 절개하고 보니 어른 주먹만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당황한 집도의를 교도소 측에 환자의 상태가 안 좋으니 봉합한 뒤 원주의 종합병원으로 데려가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교도소 측의 거부로 부모의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고 3시간 여의 장절제수술이

당황한 집도의를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 봉합한 뒤 종합병원으로 데려가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교도소 측의 거부로 부모의 수술 동의서도 받지 않고 장절제수술이 실시되었다.

실시되었다. 가족들은 개, 돼지도 아닌 인간을 아무리 재소자라 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다행히 수술경과가 좋은 것으로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집도의를 장절제수술과는 별도로 폐결핵이 의심되니 원주 종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진단서를 써 주었다. 하지만 교도소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5개월이나 지나 병원에 가보니 완화된 것이니 이상 징후가 나타난 후에 다시 와 보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듬해 96년 4월부터 감기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11월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감기약만 받아먹던 나는 종합병원에서의 정밀 진단을 다시 요구하였다. 처음 단순 감기에 무슨 외부진료냐며 반대하던 교도소

측에서는 결국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를 허가하였다. 대신 대학병원급이 아닌 의료원에서 이비인후과 조사만 의뢰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나는 일단 어느 곳에서든지 진단을 받아 보자는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 결과 원인 불명의 성대 마비로 평생 목소리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날벼락 같은 대답이었다. 나는 다시 종합병원에서의 재진료를 요구하였고 교도소에서도 허락하여 3개월에 걸쳐 정밀진단한 결과 결핵이 폐에서 후두로까지 번져 성대를 갇아 먹었다는 결론이었다. 이것은 95년의 장절제수술도 결핵으로 인한 종양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93년 당시의 폐렴도 결핵의 초기 징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정밀 진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탓에 일찍 나올 수 있었던 결핵이 악화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행사와동정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규탄대회
 - 때: 19일(토) 오후 1시
 - 곳: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본사 앞
 - 주최: 민주노총 ☎ 765-2010
- 세계난민사진전
 - 때: 15일(화)~20일(일)
 - 곳: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갤러리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등
- 유가협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 유가협은 전화 두 대 중 ☎ 763-4700을 반납하고, ☎ 764-1684만 사용합니다.
- 그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주요 인권회의 때마다 한국민간대표단의 잔일을 도맡아주었던 이우현(제네바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씨와 이완희(유엔인권센터 인권사무원) 씨가 최근 화족을 밝혔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주소: rue Maurice-Braillard 22, 1202 Geneve, Suisse 전화, 팩스: 41-22-733-496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19일(토)

제 9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질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질서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1심 선고량인 벌금 3백만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한 재판부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이들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방문한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6월 13일 전국연합 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김 대통령의 얼굴 가면을 들고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고 현장에서 한용

진(성남연합) 씨등 31명을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14, 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방문한 윤용배 씨를 포함해 90여 명 전원을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집시법) 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행사 때도 허가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푸른 옷(죄수복)을 입고 밧줄(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위행진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민가협은 “집시법 어디에도 시위용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 및 업호성 중 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중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했다. 또한 학부모 성 아무개 씨도 신 모 교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같은 날 기소조치됐다.

한편, 설립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윤 아무개 양(총학생회장)과 학부모 1명에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인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안과 노동허가제 및 노동3권 보장을 담고 있는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안탄압 분쇄와
부패정치 규탄 국민대회**
때: 7월 19일(토) 오후 3시
곳: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특별기고〉 재소자 인권 현실-의료실태 ②

은수미(강릉교도소 출소자)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인 의료비 해결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병원 진료는 병을 잔뜩 키우고 난 이후에나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사전 진료 같은 것은 아예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 의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보다 3배 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 아직 재판 중이라 무죄추정이 인정되는 미결 상태의 재소자들 역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미결이라는 이유로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째, 교도소 내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수백 심지어 수천 명의 재소자당 1인의 전문의와 1인의 공중 보건외과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 나는 결핵이 꽤 심했을 때도 1년내내 햇빛 한 점 들지 않고 온기 하나없는 독방에서 긴 겨울을 버티어야 했다. 게다가 의료 기구와 시설이 낙후하여 가슴 사진 촬영을 해도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본 진단마저 어려운 것이다.

넷째, 매년 3번씩 가슴 사진 촬영을 하나 워낙 형식적이라 결핵 등 질병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1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석방되지 않는 한 재소자들은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

다섯째, 양심수들은 외부 진료가 배나 더 어렵다. 양심수의 경우 계호상의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10여명의 교도관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도관이 부족한지라 교도소측에서는 외부 진료를 더욱 내켜 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멸절했던 사람들조차도 않는 경우가 생긴다. 스트레스에 열악한 환경이 겹친 탓이다. 그러나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또 자비 부담이 강요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항상 약을 많이 사 놓고 먹는다. 약물중독이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렇듯 재소자들의 의료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인다면 죄를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 행정관이 답습되어 오는 데서 그 원인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재소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의료 문제는 목숨의 문제이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교도소 수준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

감독: 크쥐시포푸 키에슬로프스키

주연: 말로스라프 바카, 크쥐시포푸 글로비츠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죽음의 도시 바르샤바. 잿빛 도시엔 불안한 기운이 어둠처럼 깔려있고 운명적인 선율은 이 도시 사람들의 머리위를 맴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혼자다. 그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언제 어디에선가 한 번은 만났던 흐릿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서로의 어깨를 기댈 사람을 찾지만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단절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 누구도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바르샤바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는 서로를 가로막고 자신이 철저히 외로운 존재임을 새삼 확신하게 한다. 깨지기 쉽고 불안한 이 굴레를 벗어나고 싶지만 누구도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굴레에 들을 던져라! 이 굴레를 깨버려야 한다! 그러나, 조심하라. 이 둘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떠돌이 청년 야체크는 자신이 던진 돌에 맞는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다. 돌을 던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 돌에 맞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은 다음 세대에서 그 희망을 찾는다. 유리 너머에서 환하게 웃는 소녀들의 웃음 속에서, 변호사 피도르의 갓난아기에게서.

키에슬로프스키는 TV시리즈인 10부작 <실계> 중 5부 '살인하지 말라'를 극장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으로 만들고 난 후 TV판보다 낫다고 자평하였다.

이 영화에선 두 가지의 살인이 존재한다. 이유없이 택시 운전사를 죽이는 야체크의 살인과 국가라는 이름하에 야체크를 죽이는 제도의 살인이다. 두 가지 살인에 저항하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한 마디뿐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에 유일하게 내뿜을 수 있는 단 한마디.

야체크의 살인은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이다. 그런 살인자가 사람들 틈 속에서 온당하게 살게할 수 없다는 것이 사형제도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온당한 제도인가? 키에슬로프스키는 아니라고 머리를 찌른다. 두 개의 살인을 병행하게 비교해 보여주면서 그것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한다. 제도적 살인도 역시 살인인 것이다. 천부인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제도 역시 온당치 못하다.

겨장들의 영화엔 내러티브 너머로 언제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은 살인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다. 화면 곳곳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다른 재미일 것이다.

[송덕호·민주인문운동협의회 영화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2일(화)

제 9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찰폭력 처벌, 또 하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하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민 이종호(38·사망)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안재화 순경(당시 인천시 산곡파출소 소속)은 지난 5월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에 이어, 청천2동 파출소로 재발령받아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종호 씨는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안 순경에게 가슴과 복부를 구타당한 뒤 쓰러져, 곧바로 뇌사에 빠졌다가 11일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안 순경을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지만, 검찰은 안 순경을 ‘단순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가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같은달 시민 민병일(38) 씨를 폭행치사케 한 혐의로 고발됐던 백용운 경장(용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6월 20일 수원지검 임춘택 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역 인권단체, 경찰폭력 수사속구 또한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시민폭행 사건의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의 ‘시간끌기’ 수사 속에 처벌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경찰폭력사건은 △1월 9일 ‘노동법 철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전경들에게 군화과 곤봉으로 폭행당한 장진호(35·해고노동자) 씨 사건 △1월 15일 대전역 앞 집회 참가 뒤 귀가하던 길에 뒤쫓아온 전경 10여 명으로부터 무차별 곤봉세례와 발길질을 당해 중상을 입은 김정화(54) 씨 사건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 및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다 경찰의 조준사격으로 중상을 입은 박상대 씨 사건 등

이다.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 등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충남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및 수사촉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 1일 시민 이철용 씨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한총련 시위과정을 구경하다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및 취재기자가 찍은 사진 등을 통해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고, 당시 진압전경들이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1050중대 소속임도 밝혀졌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도록 사건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타이어 애고노동자
이서광, 김진중 씨 등
6명 37일째 단식농성중**

.....주요 공판 안내

▶22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유덕상(한국통신 전 노조위원장, 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제3차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박호의 4(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박기서(살인등)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23일(수)

김학만(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최성봉(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3단독 317호 선고
조영준(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24일(목)

나현균(전해투 위원장, 폭력 등) 오후3시 4단독 524호 속행
정명아(국보법 위반) 오전10시 5단독 519호 선고
임진호(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김범준외1(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등) 오후2시 4부 418호 속행

▶25일(금)

함운경(국보법 불고지죄)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신승우(국보법 찬양·교무등) 오후3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장정일(소설가, 음란문서제조등)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신건

-서울형사지법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대검 공안부가 이달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사상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대 총학생회장 양창훈(경기남부총련 의장·수원구치소 수감중) 씨의 경우, 검찰은 부모와 친척은 물론 여자친구까지 동원해가며 양 씨에게 ‘한총련 탈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의 여자친구 심은정(28·경기대 수원캠퍼스 90학번) 씨는 지난 15일 밤 수원지검 정병하 검사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30분까지 검사실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심 씨에 따르면, 16일 오전 정 검사는 양 씨의 부모에게 “양 씨에게만 배부는 특별한 배려”라며 “한총련을 탈퇴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만약 거절하면 4-5년 동안 콩밥 먹을 각오를 하라”고 협박했다.

양 씨가 이를 거절하자, 검찰은 18일 다시 부모님을 비롯해 고모부, 심은정 씨까지 불러 재차 설득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정 검사는 그 자리에서 양 씨에게 “너는 소인배다. 얼굴마담일뿐이다”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양 씨는 “한총련을 탈퇴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 탈퇴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 이 과정에서 2년전 수술을 받고, 몸이 편찮은 그의 어머니가 울며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양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2시30분 수원시 영화동에서 흥재동 대공본실 직원에게 불법연행된 뒤,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집시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 민운탄대책위, 명동농성 돌입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오세철 교수, 민운탄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21일부터 일주일간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25일엔 ‘공안탄압·민생탄압 사례보고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운탄 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하며, “이제까지 공안탄압 분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양심적인 모든 민중들이 하나로 뭉쳐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인/권/호/름

(97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붙은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의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식발 선포식/제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회의, 제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 15일(화)

총무처, 경제부처의 6, 7급 공무원 2백99명 감축하기로 한데 이어 내무부와 국방부 등 32개 부·처·청 본부의 6, 7급 공무원 5백29명 감축키로/‘이랜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한 기도회 가져/청소년보호위원회, 유통중인 불량만화 1천7백종 5백10만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판정/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 개선방안’ 의결

◆ 16일(수)

현재, 지난해 국회 날치기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 1백 24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에서 “의장의 행위는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민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현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현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현재, 특수목적고교 학생들에 대한 현행 내신평가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삼육대, 한총련 주관 농촌활동에 참가한 학생 10명 무기정학 처분/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유엔기구 개혁안 발표, 인권센터 폐지하고 제네바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로 기능통합

◆ 17일(목)

대법원, 범민련 강순정 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보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첫 판결/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설문결과, 일선 경찰관 32% 일제검문검색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에바다농아원과 평택경찰서 발표, 농아원 원생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실종원생으로 추정되는 10대 소녀가 알몸 변사체로 발견/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부의 언론탄압 조처에 항의하는 군중시위 계속

◆ 18일(금)

정부, 소양호 상류 내린천댐 건설계획 재검토키로

◆ 20일(일)

대검 공안부, 7월말까지 한총련 탈퇴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8월1일부터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입건·수배방첩/서울지검, 이현세 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에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 적용방첩

인권
시평

좌경세력적결론과 인권적 관점

곽 노 현 (방송대 법학 교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는 우익, 우파, 우경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좌파, 좌경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좌'가 곧 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안기부와 검찰은 특히 '좌경세력 척결'을 다짐한다. 간첩신고 안내문에는 '좌익'이 신고대상으로 올라 있다. 언론이나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좌경세력이 몇만 명이라는 데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부추긴다. 이렇듯 국가기관의 발언

과 문건으로 좌익, 좌파, 좌경을 공식 단죄하는 경향은 이른바 공안정국이 오면 보다 기승을 부린다.

한 예로 작년 여름의 한총련 사태 직후 거리에는 '아름다운 민주사회 파괴하는 좌익분자'라는 글귀에 벌레가 감아 먹은 장미꽃을 그려놓은 포스터가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나붙었다. 메시지는 물론 좌익, 좌경, 좌파는 해충에 불과하니 모를지기 박멸과 척결에 힘쓸 뿐 행여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똑같이 치우친 것인데 어째서 좌로 치우친 좌파, 좌익, 좌경은 안되고 우로 치우친 우파, 우익, 우경은 좋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좌와 우가 공존하지 못하는 현실

이쯤에서 우리 정부가 무분별하게 싸잡아 매도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무엇인지 간략히 따져보자. 이념적으로 좌파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근대의 대표적 정치이념 중 평등과 연대를 중

시한다. 정치적으로 좌파는 보통사람이나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특권화한 기득권과 싸운다. 언제나 함구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좌파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견딘다. 현실적으로 좌파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등 수다한 명목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반인간적 차별에도 반대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열심이다. 그 결과 노동운동, 복지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은 모두 좌파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이성과 평등,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며 진보적이다. 반면 우파는 전통과 자유,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며 보수적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는 서로

립된 용어에 반한다는 점에서 반이성적이고 좌파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반인간적이기 그지없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유관 국가기구들은 척결대상으로 삼고 있는 '좌익, 좌파, 좌경'은 실제로 폭력혁명세력을 한정해서 가리키는 용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극우, 극좌세력을 경계하자'든가 '폭력세력을 척결하자'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좌경세력을 척결하자'고 할까? 공안당국이 무식해서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만 선진국형 좌파의 형성과 득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과 진보를 주창하는 좌파를 무조건 폭력혁명세력으로 매도하는 잘못된 언어관행의 최대 수혜자는 공안세력 기타 기득권세력인 셈이다.

우익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좌익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좌경세력 척결론

현실의 '좌경세력 척결론'은 실제로 폭력혁명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넘어 진보적 개혁 요구마저 냉각시키는 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다. '좌경세력 척결론'은 우리 사회를 극한적인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든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지극히 부분적 잣대로 모든 사람을 분류한 후 '좌'의 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교사하는 것이 바로 '좌경세력 척결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좌경세력 척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하나의 방안으로 '좌경 척결'과 같이 무분별한 국가기관들의 언론관행에 대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좌파, 좌경, 좌익을 폭력세력과 등치하여 매도하는 국가기관의 발언이나 문건에 대해 표현 정정, 배포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행동을 기대한다.

사회 진보를 가져온 좌파의 산물

이렇게 볼 때 좌파의 존재는 우파의 존재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현상이다. 다만 좌파권 우파권 다양하기 짝이 없는 인간성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이고 치우친 것이기 쉽다. 그러나 어찌랴. 인간은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무튼 좌파를 싸잡아 타도와 척결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국가와 관변의 언론행위는 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3일(수)

제 9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전국연합 인권위, 사면복권 요청서 접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둘러싼 찬·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 인사들은 양심수의 석방과 출소한 민족민주인사들의 복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22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를 접수했다. 인권위원회는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를 통

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취합했으며, 요청서에는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임기란(민기협 상임의장)·김승훈(천주교인권위 고문) 씨 등 사회·인권단체 대표 11명이 서명했다.

석방 대상자는 서경원(전 국회의원, 89년 6월 구속, 10년형 선고) 박노해(본명 박기평, 91년 3월 구속, 무기형) 황석영(93년 4월 구속, 6년형 선고) 강용주(85년 9월 구속, 20년형 선고) 씨 등

29명이며, 사면복권 대상자는 강경원(금호타이어 대의원, 94년 7월 업무방해등으로 구속, 집행유예) 씨등 민주노총 소속 회원 4백75명과 김은주(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징역 2년 집유 3년 확정) 씨등을 포함해 모두 4백 81명이다.

전국연합은 "이번에 선정된 석방 대상자들은 지난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형기의 70%이상을 경과했거나, 국제앰네스티등 국제인권단체로부터 풀기차게 석방요청을 받고 있는 양심수"라고 밝혔다.

대학생 상대, 전쟁 치르는 경찰 충남대생 연행 과정, 충성 8발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검거활동이 갈수록 난폭해 지고 있다.

21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는 오전 6시경 수송차량 2대와 승용차 10여 대를 동원한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전경 및 경찰 1백여 명이 학내로 들어가 학생회관에서 농성중이던 학생 30명을 연행했다. 충남대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경찰은 진입 및 연행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기 8발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자주화주진위원장 진 아무개(24) 씨는 "경찰이 2층 총학생회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권총 2발을 발사했으며,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3발, 2층 복도에서 3발 등 총 8발을 쏘았다"고 밝혔다. 진 씨는 또 "총기 발포에 놀란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화장실 쪽으로 밀려났고, 그중 다섯 명의 학생은 화장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진 씨는 "경찰 가운데 2-3명이 총기를 들고 있었으며, 충성에 놀란 학생들은 자리에 주저

앉거나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연행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일보 송광석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탄흔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측으로부터 '가스총을 발사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연행한 30명 가운데 전재형(자연대 부학생회장·93학번) 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명은 훈방조치했다.

또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낮 12시 30분경 한양대학교 학생회관까지 들어가 이 학교 부총학생회장 신선호(23·행정학과) 씨와 사무국장 윤성도(22·무기재료) 씨 등 다섯명을 연행했다. 총학생회는 "사복을 입은 경찰 1백여 명이 곤봉과 권총으로 무장한 채 학생회관에 난입했으며, 1시간전부터 학생회관 아래층 등 주변에 잠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행된 신 씨 등은 제5기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받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양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공동위)는 "이번 결정은 관련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인식하고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와 다양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인정하겠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위는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고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 안기부와 인권 [7] -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계약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 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 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노동법 철회만 주장하지 왜 안기부법까지 들먹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당시 항의 시위에 참가한 이들 대부분은 안기부법 계약 철회 보다는 노동법 철회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으며 안기부법 철회를 주장하는 구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낮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시 많은 이들은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법은 자신과 별로 관련이 없는, 즉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순한 사람들 -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든가 불순, 좌익사범 등 -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국가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기부는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보안 업무와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권한 외에 안기부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논리를 앞세운 국민 감시, 통제 활동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며 안기부는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대공요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9일, 10일 기사 참조)

더우기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안기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 회선의 도청 장치이다.

96년 1월 국회의원회 김대중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안기부 도청 회선 보유 사실은 이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안기부측이 '도청 회선 보유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통해 간접 확인되었다. 이 도청 장치의 사용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안기부원에 의해 당신의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고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세련된 국민 통제 방법 말고도, 때로는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안기부는 당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날 예기치 않은 안기부 직원의 방문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 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29명에 달하는 일가족을 영장없이 간첩혐의로 연행하여 무려 50일에서 1백일에 걸친 불법구금속에서 간첩 자백을 강요하며 물고문과 잠 안재우기를 비롯하여 각종 구타

등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송씨 일가족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했지만,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진통 끝에 인권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안기부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95년 11월 박충렬 - 김태년 씨 간첩 무죄 사건, 96년 12월 경희대 김형찬 씨 오인 연행 분신사건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안기부로부터 사과를 받은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 93년 이후 96년 8월 31일까지 안기부직원이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불허등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것은 모두 39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에서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안기부의 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기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국가보안법 7조 및 10조 수사권을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혐의자를 모두 수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간첩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를 일단 이 혐의로 연행한 후 이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96년 안기부법이 계약되기 이전 안기부는 수사권 회복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강변하였다.

그러나 실상 안기부의 이러한 주장이 야말로 향후 심각한 인권유린과 누구나 예기치 않게 안기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안기부의 근거없는 의심만으로 철저히 파괴된 송씨 일가 사건만 돌아보아도 언제 누가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천형과도 같은 간첩자백을 강요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4일(목)

제 9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용역강패 물러가라”

한국후포꾸 노동자 8일째 단식농성

한국후포꾸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한국후포꾸(사장 권순목)에서는 지난해 9월 용역회사 직원 30여 명이 경비로 고용된 이후,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 계속되고, 운동만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 15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1개월 동안 안산지역에서 투쟁을 벌여오던 후포꾸 노조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6일 상경,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운동만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은 23일 현재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각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후포꾸 조합원들과 전국민주금속연맹(위원장 단병호) 소속 노동자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무산당했다. 시위가 봉쇄되자 문성현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시위 대표단 3인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이를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가지려 한 것은 이 회사의 실질적 사장이 일본인 가마모또 씨이기 때문인데, 한국후포꾸는 권순목 현 사장이 20%, 일본 사장 가마모또 씨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면 반대 캠페인·공청회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를 위한 1차 캠페인을 오후 6-7시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는 전·노씨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를 갖는다.

(문의: 522-7284)

<인터뷰> 운동만 한국후포꾸 노조위원장

지난 1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한국후포꾸 노조의 운동만 위원장을 지난 22일 명동성당에서 만났다.

- 단식농성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회사측이 용역강패를 철수시키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측에 즉각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9일 제5차 노사협의회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 한국후포꾸 사태의 발단은
- = 96년도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끝난뒤, 회사측이 쟁의기간중 임금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발중에서 노조 사무실에 관리자가 불법침입하고 일방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노조간부들이 구두로 항의했으나 묵살당했고, 96년 8월 22일부터 공장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노조탄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 = 지난해 9월 회사측이 용역강패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이들을 경비로 고용하면서 본격적인 노조탄압이 진행되었다. 조합원에 대한 폭행과 회사 내 감금행위가 벌어졌고, 현재까지 15명 해고에 연인원 95명이 징계를 당했다. 당시 1백60여 명이던 조합원 중 70여 명이 회사를 나가 현재는 60여 명만이 남아있다.

- 용역강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 '승화'라는 용역회사 직원들이다. 이 회사는 95년 반월공단 내 우신공업 노조를 깨는데 악명을 떨친 용역업체 '가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용역경비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이다. 그리고 자체조사결과 용역강패들은 저마다 폭력·특수절도·강도상해 따위로 징역을 살고온 전과자들이 많이 드러났다.
- 경찰·노동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 = 안산경찰서는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을 방관하거나, 용역강패의 주장만 듣고 해고자를 폭행죄로 구속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계속해 왔다. 용역강패들은 경찰이 나타나면 자해를 해 우리측을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노동부에는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임금체불·교섭거부 등과 관련해 20여 건이 접수되어 있지만, 97년 7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 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 정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용역강패의 폭력행위를 여러 차례 인권단체에 제보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섭섭하다.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나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법민권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법민권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실는다. <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협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협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일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 1995.7.28. 선고, 95도1121 판결, 1995.9.26. 선고, 95도1624 판결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별개의견】은, 종전 판결을 유지하고, 종전판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신중성 있게 해석하지는 것임.

【종전대법원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차이】

- 1. 2. (생략)

3.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가 말하던 '기밀' 중에서 공지된 사실들은 기밀로 보지 않고(예나하면 기밀이란 그 자체의 어의로 비추어 보면 이미 공지된 것은 기밀이 아니기 때문임), 또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기밀로 보게 된 점에서, 종전판례와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고 실시함으로써, 공지여부의 판단기준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되므로 남한 안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공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함.

어떤 경우가 과연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언론매체나 통신수단(인터넷 등)에 보도된 내용, 그 신문의 발행 부수(독자의 범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 철 수 있는 것이어서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즉,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따라서 인터넷 등에 올라있는 것, 해외에까지 배포되는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것들은 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한정된 지역내(예:세미나, 전담회 등)에서만 알려진 사실 등은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지의 사실은 아닐 것으로 보여짐. 구체적인 사례는 향후 판례의 집적으로 밝혀질 것임. 또한, 실질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 특히 북한과의 대치상태 및 오늘날 총력전의 개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협성이 명백하다면 실질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의 개념 및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의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음.

5. 이번 판결로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밀수집 전달 등의 행위는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죄, 편의제공죄, 통신연락죄 등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면 될 것임.

따라서 이번 판결로 국가기밀의 범위를 축소해석함으로써 국가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6. 이번 판결로 변경되는 종전판례는 현행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밀'에 관한 판례뿐만 아니라, 구 국가보안법(1991. 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밀'에 관한 판례로 변경된 것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5일(금)

제 9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연말 대선에서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 사면논의가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 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면문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현(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정부 여당은 반드시 전·노 사면을 추진할 것이다. 그 시기는 8·15 광복절이나 대선 이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데 있고, 또 김 대통령은 퇴임 이후 대선자금과 관련해 소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의 여지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면에 앞서 전·노 씨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뒤 국민대화합의 입장에서 사면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홍신(민주당) 의원은 "전·노는 정치범이 아닌 역사적 죄인이며, 현행법이자 민족반역자"라고 전제하며 "이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또한 5·18 피해자를 비롯해 5·6공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없이 사면논의는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대선을 앞두고 득표전략에 사면이 악용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전·노를 처벌한 것은 현정권의 의지가 아닌 국민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관용과 화합은 현정권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허히 반성을 하면 사면하겠다는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사면을 해주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엠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함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장엽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엠네스티는 "당국이 황 씨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반정부 인사를 구금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등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엠네스티는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92년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며, 남한 정부는 국보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기획: 안기부와 인권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두꺼비가 잡혀갔다.

73년부터 십여 년간 한국일보의 간판 시사만화였던 '두꺼비'의 작가 안익섭 씨가 86년초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55회 생일이던 1월 19일 자에 실린 4단 만화의 내용 때문이었다.

문제의 4단 만화를 소개하면,

1단 "대통령각하, 오래 오래 사십쇼!" (목소리만 들림) ... (두꺼비가 고개를 돌린다)

2단 "하는 것이 마음에 속 듭니다" (역시 목소리만) ... (두꺼비 놀라는 모습)

3단 "건강하십시오" (계속 목소리만) ... (두꺼비 매우 놀라는 모습)

4단 "레이진" (기도하는 두꺼비의 아내)

김 대통령이 수시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97년의 시각에서 보면 어이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안기부는 이 만화를 '국가원수모독'으로 규정해 안화백을 연행했고, 안 화백은 87년 6·29 선언 이후까지 1년 7개월간 질필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안기부 언론통제 여전

87년 6월 항쟁 이후 광목할 만한 변화로 '언론 자유의 확대'를 꼽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김영삼 정부도 93년 안기부 내 제4국(정치언론 담당부서)을 폐지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보기관의 통제를 중단하겠다는 적극적 제스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안기부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감독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는 95년 '안기부 언론탐'의 존재가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되면서였다.

당시 <미디어 오늘>의 취재팀은 "안기부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에 40여 명 규모의 언론탐을 별도기구로 운영하면서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95년 5월 17일자). 취재팀은 주요언론사 전담기관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이들 요원들이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언론사에 출입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언론

사 밖에서 언론인들을 만나 정보수집 및 '보도조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신은 '보도의 성역'으로

실제로 언론에 대한 안기부의 압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95년 SBS가 특집으로 제작한 <해빙>은 미국교포출신 기자와 북한 여성의 교관의 사랑을 통해 통일의 문제를 다루려던 드라마였다. 당초 이 드라마 대본에는 89년 임수경 씨의 평양출전 참가 모습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안기부원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질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사대로 한총련에 대한 비판이 들끓던 96년 10월 <추적 60분>은 '긴급입수-한총련 북에 간 대학생들'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이 발췌를 일으켰던 것은 '안기부의 제작지시'에 따른 방송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의 기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제공한 필름을 가지고 긴급 제작·방영된 것이었다. 당시 노조와 제작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프로그램 제작·방영된 것은 '안기부 외압'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편, 96년 5월 KBS의 <추적 60분> 팀은 성혜림 씨 망명사건과 관련해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안기부 대북정보력의 허점' 등을 심층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기부의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안기부 관련 부분은 삭제된 채 방영됐다. 문민시대의 안기부는 '사전검열' '보도통제' '제작지시' 등의 형태로 언론을 주물러 오는 한편, 안기부 자신만은 '보도의 성역'으로 남아 있으려한 것이다.

평양전경, 안기부 '통제'로 방영 안돼 무엇보다도 안기부가 언론을 통제하

는 대표적 영역은 북한관련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의 북한 관련 정보는 안기부가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안기부가 제공하는 자료만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고, 이렇게 여과·선택된 정보만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설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자료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형편 또한 아니다.

평양시내에 있는 높이 1백70여 미터의 주체사상탑에 오르던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 나라엔 주체사상탑에서 바라본 평양시내 전경 화면이 없는 걸까? 95년 6월 한 북한담당 기자는 <미디어 오늘>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체사상탑에서 찍은 시가지 화면이 방송사에 있다. 그러나 평양시가지 화면은 늘 우중충한 옷을 입은 북한사람 몇 명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방영된다"고 밝혔다. 주체탑에서 바라본 전경 화면에 대해 안기부에서 방영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기부 '특수자료지침'에 따르면, 모든 북한관련 자료의 보도에 있어 안기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거름'을 들여 필름을 구한다 해도 안기부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북한' 보도에 있어 언론은 '독점 공급자'의 '요청'과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이다.

노골적 언론탄압, 언제든 부활 가능

68년 언론인을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시킨 '신동아 필화사건', 66년 동아일보 권오기 차장 폭행 사건을 비롯한 숱한 언론인 테러사건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자행되어 왔다. 문민정부 들어 그렇게 노골적인 언론탄압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왔지만, 아직도 정보기관의 감시·통제 욕구는 집요하다. 지난해 '청와대 밀가루 복송 사건 보도'와 관련해, 취재기자를 구속하고 기사를 삭제한 <시사저널>파문은 정보기관을 앞세운 폭력적 언론통제가 언제든 부활할 수 있음을 경고해 준 사건이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6일(토)

제 9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해고자들의 단식투쟁이 종료됐다.

24일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은 민주노총과 회사측 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6월 16일부터 39일간 충남 신탄진 공장 정문 앞에서 벌여온 농성과 단식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에 걸쳐 발생한 테러 및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사업장 내 탄압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투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해고자들은 '복직'과 '손해배상 철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회사측은 합의안에서 △해고자 7명을 복직시키되 계열사로 2년간 발령 △해고자를 상대로 한 2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노사간 고소·고발건 취하 △단식농성자 회복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동안 신탄진 지역에 고립된 채 묻혀왔던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민주노총이 문제해결을 위해 결합하게 된 것 역시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 16명 가운데 7명만 복직되고, 이마저 계열사 2년 근무라는 단서를 붙인 점과 그동안의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몸담아왔던 현장에서 분리되어 계열사로 근무발령이 난 점에 대해 해고자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 감시·노동강도 강화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권영인(29) 씨는 "지금도 신탄진공장 관리자들 사이에서 '활동가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말

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계속

농성을 마친 해고자들은 26일부터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일상투쟁에 재결합할 예정이다. 권영인 씨는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가지만, 현장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씨는 "한국타이어 5천명 조합원 가운데 노조 민주화를 갈망하는 노동자가 1천여 명 이상 있다"며, "이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한다면 한국타이어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은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95년 한국타이어 해고자를 지원하던 중 강간테러를 당한 박 아무개 씨의 사건에 대해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진상규명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인권정보화의 문이 열린다

-사랑방 자료 "하이텔 01410 참세상" 통신 서비스-

인권운동사랑방이 3년여 동안 추진해온 데이터 베이스 사업 드디어 결실! 25일을 기해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료 검색 가능!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이 보유한 자료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체계화된 인권정보화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한국 인권운동의 오랜 산고 끝의 결실입니다. 사랑방은 이 자료를 보다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에 검색망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원자료 검색방법

- >하이텔 01410, 참세상 접속
- >참세상 ID 또는 GUEST 입력
- >참세상 TOP 메뉴에서 56 한국인권정보자료센터 접속
- >[인권자료센터] 선택
- >주제검색과 단어검색 중 선택하여 관련용어를 입력

현재 검색 가능한 내용은 각 자료의 내용요약, 발행처, 발행일, 저자, 언어, 자료형태, 쪽수 등 기본적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걸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단순 검색만이 아니라 자료의 모든 내용(FULL TEXT)을 통신상에서 볼 수 있게끔 계속 준비중입니다. 당분간 통신으로 자료 검색을 하신 후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사랑방에 요청해 주십시오.

'92년 대선 흑색선전' 항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

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고등 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과 비교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지만, 전국연합의 강령 일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당시 김 후보 진영이 아무런 증거없이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을 넘어 전국연합을 죽이려는 범죄행위"라며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도, 막연히 강령의 일부와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국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당시 김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

한 것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라빛 손수건> <해고자> 아미가타 영화제 후보 올라

감독에 갇힌 자식과 남편의 석방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며 이평을 살아가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보라빛 손수건> (푸른영상 제작, 김태일 감독, 96년작)이 오는 10월

6-13일 열리는 일본 '아미가타 기록영화제' 아시아 부문 후보작에 올랐다.

김태일 감독은 "기쁘다. 작년 6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동원 대표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끈기있게 작품활동을 벌여왔는데, 이번 초청은 그런 의미에서 큰 힘이 되었다. 계속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양심수·장기수 문제를 외국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라빛 손수건>과 함께 후보작으로 오른 국내작품으로는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대우정밀) 씨의 죽음을 통해 93년부터 치열하게 투쟁해온 해고노동자의 발자취를 그려낸 <해고자> (노동자뉴스제작단 제작, 이지영 감독, 96년작)와 서울단편극영화제 수상작 <생감> (정지우 감독)이다.

· · · 새로 나온 논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 87쪽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제기된 2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임 씨는 "김일성 사망이후 '조문논쟁'과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던 94년과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95년에 인격권이 침해되어 언론중재 신청 및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15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정정 혹은 반론 보도문이 게재된 경우는 92.2%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이유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피의사실을 보도해왔던 관행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임 씨는 "뉴스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와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소홀히 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의 사례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인격권이 보호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그 대안으로 "언론기관은 인격권의 보호기능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갖춘 자율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쳐 기사를 작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 국가기관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 형사피의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의 행사

-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전·노 사면 반대 캠페인'
- 오후 1시-2시 명동/3시-5시 마로니에 공원/5시30분-7시 광화문빌딩 앞
- 한국후교구 집회
- 오후 1시 광화문 로타리
-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명동성당 농성투쟁
- 오전 10-12시 선전전(명동 상업은행사거리, 을지로역 지하광장) / 오후 1시 집회 및 농성 해단식
- 공안탄압 분쇄와 한반도 평화실현 결의대회
-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전국연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29일(화)

제 9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민가협 어머니 강제연행 전·노 사면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박정기(고 박종철 씨 부친) 씨 등 민가협·유가협 소속 어머니·아버지들이 청와대 앞에서 강제연행 당했다.

28일 오전 11시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유가협(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상임의장 박정기) 소속 회원 15명은 청와대 앞길에 위치한 대교각에서 '전·노 사면 반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려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어머니들은 "집회를 하려한 것도 아니고 신문고를 통해 전·노 사면 반대의 뜻을 알리려는 것 뿐이었다"며, 강제연행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대해 한 경호원은 "이곳 신문고는 상징물일 뿐인데다 대통령도 휴가중이어서, 복을 두드리면 우리가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연행된 회원들은 낮 12시경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자마자 다시 수송버스에 태워진 채 감제로 1시간 30분 동안 서울시내를 옮겨다녔으며, 이후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뒤에도 종로서 구내식당에 감금되었다. 종로서측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구금한 뒤 '신문고를 두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요구하다가 4시간 만인 오후 6시경 풀려났다.

민가협은 회원들의 강제연행 및 구금에 항의하는 성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과 달리 국민이면 누구나 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며 문민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출입기자에 "쌍년" 옥실하며 폭행 한편, 종로경찰서에서는 이날 오후 2

시경 <한겨레신문> 사회부 송현순(28) 기자가 진경원(58) 경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 기자는 민가협 회원들의 연행 사건을 취재하던 중, 진 경사에게 머리통을 붙잡힌 채 때밀려 넘어지는 등 행패를 당했다. 진 경사는 송 기자에게 "가방 치워!" "넌 뭐냐?" "쌍년이 어디서 지랄이냐?"는 등 시종 반말과 욕설을 지껄였으며, 송 기자가 출입기자임을 밝히며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경사는 나중에 송 기자를 찾아가 "출입기자인 줄 몰랐다. 민가협 회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송 기자는 종로서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으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송 기자는 "취재기자가 아니면 폭력

을 행사해도 되느냐"며 "이번 사건은 경찰서 내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운동" 모색

참여·자치·연대 학생대회

이화여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97 참여·자치·연대 학생대회'를 서울대에서 가졌다.

'6월 항쟁 10년의 우리, 90년대 세대의 모색과 실험'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학생대회는 인권, 반핵, 정보, 노동과 경제, 통일, 성, 국제연대 등 10가지 영역을 주제로 다루었다.

29일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건물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늦어졌습니다.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로 보이며, 다행히 발다른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30일 오전까지 ☎ 741-2407만 가능합니다.

.....주요 공판 안내

▶ 7월 28일(화)

이성현·박하근(특공치상, 한총련-이하 한)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하은경·이돈범의 1(기차교통방해등, 한)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최은진의 2·최세규·박진영(특공치상등, 한)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이용석·최인기(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광수(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한)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조한혁(특공치상등, 한)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기태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한) 오후4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7월 31일(목)

최영일의 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박관조(국보법위반 찬양·고무등, 한)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김은희의2(폭력행위등-법률위반등, 한)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강경태·김민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영훈(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한)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최지혜·김영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송하문(폭력행위등-법률위반등, 한)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남용욱(사문서위조등, 한)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경민(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한) 오후3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박기서(살인등) 오전10시 3부 303호 선고 -서울형사지법

경찰, 병원주변 검문검색 강화 부상당한 전농동 철거민 3명 구속

지난 25일 철거과정에서 숨진 박순덕 씨의 시신이 안치된 경희의료원 주변에서 경찰의 삼엄한 검문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검문이 벌어지고 있으며, 28일 하루 동안에도 최소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검문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철거과정에서 18미터 높이 철탑(일명 골리앗)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전농동 주민 세 명이 응급치료 후 경찰에 연행·구속되었다. 전철연은 구속된 사람이 김병식, 김일준, 이재식 씨 등이라고 밝혔으며, 이들은 어깨, 팔의 골절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순덕 씨의 사망이후 긴급히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1일 청라지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방화책임자의 처벌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농동 화재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철연측은 "용역업체들이 신나를 묻힌 타이어를 골리앗 쪽으로 굴러보낸 뒤, 거기에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며 "골리앗 1층 철판이 뜯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지난 24일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본실(서울지방경찰청 보안4과)에서 구속자들을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잡혀왔는지 모르며, 이적단체 가입·구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강신호(음악 90) 씨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작년부터 임용고시를 준비중이었으며, 강민영(체육 94, 작년 교지편집장) 씨도 올해부터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경욱(과학 94) 씨는 작년 1학기에 과학생회장으로 활동했을 뿐이며, 현재 집안사정으로 휴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배중인 임진식(총학생회 투쟁국장, 91학번) 씨는 컴퓨터 통신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은 통일학교를 준비중이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봐서 작년 인천부천지역의 각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중적인 통일학교를 놓고 대대적인 연행, 검거를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구속자: 문은주 윤창배(기획부장, 사회 92) 김미자(연사부장, 과학 93) 이소현(문화부장, 윤리 95) 강민영(체육 94) 김인숙(윤리와 학생회장, 95) 강신호 담경욱(과학 94)
검거대상자: 임진식 김향미 삼현(컴퓨터과 학생회장, 95) 원상희(93) 박상덕(94, 임용고시 준비중)

주간/인권/호름

(97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 21일(일)
대전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전경 등 1백여 명 총합대 교내 진입, 총기발포하며 학생 30여 명 연행/민중운동단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안탄압 분쇄와 전·노사면 반대를 위한 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돌입/서울시, 건설 중인 지하철 6-8호선 65개 역에 장애인 편의 시설 크게 늘리기로/20개 시민단체, '기아살리기범국민운동연합' 결성/전국 24개 대학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동포 돕기 전국순례단 추진위원회' 전국 22개 도시에서 북한동포 돕기 위한 방학지원활동 벌여/김현철 씨 비리사건 2차 공판에서 자신이 92년 대선직후 당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의 활동자금 중 남은 돈 1백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 시인

◆ 22일(화)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공룡의 '등급의' 판정받아/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만화가 이현세 씨를 소환해, 그의 만화 <천국의 신화>의 음란·폭력성 혐의로 조사/전국연합,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국회 내무위, 임시국회서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마이니치신문>, 걸프전 당시 미국이 우라늄탄의 유효성을 알고도 이를 대량 사용했다는 의혹제기

◆ 23일(수)
<한겨레신문> 보도,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통계청 발표 자료, 우리나라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년 9.9%로 세계 꼴찌 수준/다이옥신 과다배출감소 위한 시설공사로 가동이 중단됐던 부천시 삼정동 중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로 무산/전남경찰청, 정명기(한총련 전 의장)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 24일(목)
한국타이어 해고자 민주노총과 회사측 간의 합의안 수용하기로 하고 39일간의 단식투쟁등 농성풀어/민변, 기독교회관에서 전·노동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관련 공청회 개최

◆ 25일(금)
97 춘천만화축제 조직위가 입수한 북한 애니메이션 33편과 5백점 안팎의 출판만화가 공영의 상영금지 결정으로 상영 안돼/서울지검 형사1부, 만화가 이현세 씨 사법처리 당분간 유보/동대문구 전농3동 재개발지구서 적준용역 직원 3백여 명에 의한 철거과정에서 18미터 철탑망루에 불붙어 농성중이던 철거민 10명 철탑 아래로 투신해 9명 중상, 박순덕 씨 26일 새벽 사망

◆ 7월 26일(토)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씨에게 사형, 백충범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 7월 27일(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예정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인권
시평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다. 국기, 국가, 국장, 국호와 더불어 국법(국헌)은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애국가는 4짚까지 지어놓고 1짚만 부르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그나마 생각하는 국민의례가 대부분이다.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한심하다. 무궁화강산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뽕잎이 이 땅을 뒤덮고 있으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망언과 망발을 일삼을 만하다. 나아가 국헌에 이르러서는 아예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 헌법을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법전공자들이나 알 일이 일반국민이 알 바 아니라고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헌법, 뒤틀림의 역사

헌법은 초등학교때 부터 알기 쉽게 가르쳐야 한다. 헌법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헌법을 국가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의명분은 그동안의 치욕스런 헌정사에 의해 묵살되었다.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려는 애국적 자세보다는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킨 미국적 작태의 악순환이었다. 이른바 제헌헌법부터 뒤틀림이 시작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의 군림야욕에 휘둘려 내각제헌법만이 대통령중심제 헌법으로 급조되는 진통을 겪었다. 그것도 모자라 박정희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수차례의 흔적을 쌓아가다 결국은 4월혁명으로 무너져 내린 이승만 정권은 쓰레기통이었다. 4월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은 못할 망정 훼손시키지나 말았어야 할 박정희의 이른바 군사쿠데타는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인가라는 반문을 하게 만들었다. 후진국·미개국의 전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황폐시킨 박정희 정권은 악취가 진동하는 두엄자리였다. 삼선개헌,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헌법유린사태는 국민들에게 헌법이

란 독재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유신헌법이라 불리는 72년 헌법은 이름이 좋아 헌법이지 독재 권력의 인권폭압장치였다. 남과 북이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권력집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70년대 한반도의 상황을 극명하게 들어낸 남과 북의 헌법은 민주화의 여정에서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출변수였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의 자칭 제5공화국 헌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약간의 각색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 박정희의 작자를 자임한 전두환은 헌법 개정에서도 그 본성을 그대로 들어냈다. 7년 단임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했고 국민을 속였다. 6월항쟁

이여 한다.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몇 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한 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국가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헌법이 있는 것이지 집권자의 편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헌법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상식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지름길이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상치받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더기 헌법을 새롭게 깎자

지난 17일은 4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었다. TV 프로그램으로 2개가 방영되었고 기념식 장면을 방영한 것 말고는 이날이 왜 공휴일인가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중앙종합일간지들도 의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념식 주관이 국회로 바뀌었고 조출하다 못해 초라한 기념식으로 전락했다. 제헌절 노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제헌절이 무슨 날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은 편은 아니다. 명색이 4대 국경일의 하나인데도 부끄러운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의 헌법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는가. 만신창이된 누더기 헌법이라고 천대만 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민주화수준은 인권의식수준이고 헌법인식수준이다. 모래성같은 경제발전이 희희낙락하는 골빈 작태는 속으로 끓고 있는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은 비록 30개 조항이 채 못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권보장의지는 헌법전체에 이른 다. 헌법은 나를 지켜주는 인권의 등불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살맛나는 세상은 제대로 된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 헌법이 생활화된 사회이다.

인권의 등불

의 산물인 현행헌법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헌법도 상처뿐인 영광인 셈이다. 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반수득표라는 마지노선을 무시하고 한 표라고 더 많은 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40%도 되지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을 하게 되고 그만큼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60년 헌법과 87년 헌법을 그나마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된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두 헌법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민주적 헌정질서로 평가될 만 하다. 독재권력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고 난 후의 불가피한 선택. 이제는 더이상 어리석은 뒷걸음질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인식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권력구조부문의 개헌을 들먹이는데 그 목적이 불순하다.

국민기본권 보장을!

앞으로 개헌을 생각하려면 기본권 부분부터 먼저 적극적 보장차원에서 검토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30일(수)

제 9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전·노 사면반대, 전세계 호소 인터넷 통한 국제서명운동 시작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과거청산국민위)는 국제사회에 사면반대운동의 의의를 널리 호소하고 나섰다.

과거청산국민위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환)는 지난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에스오에스투처(SOS-Torture) 등 전세계 1백여 인권·사회단체에 전·노 사면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면반대운동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다.

과거청산국민위 등은 이 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방지·복인하는 반역사적 태도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 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청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각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대사관과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각국 언론을 통해 사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몇몇 국제인권단체들은 전·노 사면반대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내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노 사면반대' 국제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면논의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주소-http://www.interpia.net/~rights

청소년인권현장 채택 제안 여연, 청소년문제 긴급토론회

최근 청소년이 음란비디오물을 출연·제작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음란문화에 노출된 청소년! 누구의 책임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을 억압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가 오늘날 청소년 문제를 낳았다"며 "가정,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청소년은 인격과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책 마련 △지역사회의 역할 활성화 △성교육 강화 △청소년 놀이공간과 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인권현장 채택 △청소년 인권 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토론에 나선 감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사이에 존재하는 음란문화는 결국 기성세대 음란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기성세대의 음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을 공급하는 유통업소 주인, 만화잡지 제작자와 음란물을 보는 수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을 동시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 국회, 언론사,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공판 안내

- ▶ 8월 1일(금)
 - 손재무의 3·나체현·김명철·주재현·봉미숙(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김용현(집시법 위반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박윤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인화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유병서(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인권정보화의 문이 열린다

인권정보자료 '하이텔 참세상' 통신서비스 개시

인권운동사랑방이 3년여 동안 추진해온 데이터베이스 사업 드디어 결실!

■ 인권자료 검색방법

- 하이텔 01410, 참세상 접속
- 참세상 ID 또는 GUEST 입력
- 참세상 TOP 메뉴에서 56 한국인권정보자료센터 접속
- [인권자료센터] 선택
- 주제검색과 단어검색 중 선택하여 관련용어를 입력

■ 문의:인권정보자료실(담당:엄주현, 741-5363)

기획: 안기부와 인권 [9] - 마지막회

안기부의 개혁방향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안기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짚어 보았다. 지난해 낱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에 대한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개혁을 준비했으나,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개혁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낱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임지를 강화하려 했던 기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게도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을 짚는 한계를 나타냈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안기부의 강력한 로비와 여당의 힘으로 낱치기 안기부법의 내용이 정식 통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황장엽씨의 기자회견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안정국 조성에 집착했던 안기부가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기부법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접근하기 어려웠던 안기부

이번 개혁을 연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부딪친 문제는 자료와 연구의 부족이었다. 자료는 기껏해야 언론기사와 그간 안기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례집, 몇 권의 단행본이 있을 뿐이었다. 본격적인 연구서는 석시논문 하나밖에 없었다. 하기가 국회의원들조차 안기부 요원들의 신원확인을 통과해야만 정보위원회에 입장할 수 있고,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처리되며, 기자들도 기껏해야 공개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만을 브리핑받는 정도니 민간 인권단체로서 안기부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이다. 어쨌든 안기부의 인권침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이제는 보다 장기적으로 안기부와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인식하게 된 것은 소중한 성과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정리를 통해 필진들은 인권이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려 했고, 안기부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전국민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누누히 강조하고자 했다. 필진들의 호소가 연재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돌아왔을 때는 미흡한 것임에 틀림없다.

안기부에 대한 안이한 경계심

"모든 공안정보기관은 독재와 폭압, 전쟁과 내전, 이념과 대립의 소산이다." 안기부도 군사독재의 집권, 폭압

안기부 감시모임'을 제안한다

정치의 소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도 안기부는 어떻게,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권력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최초로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현정부도 안기부의 정보력과 공포의 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안기부의 조직보존을 위한 몸부림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주사파 파동, 95년의 김동식 사건, 96년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사태와 북한 잠수정 사건, 올해 황장엽 사건 등을 통해 안기부는 자신들의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경주했고, 급기야 보수세력의 지원 속에 공안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기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것이다. 그 결과 과거엔 '안기부의 해체' 주장도 제기됐었지만, 이제는 '안기

부의 개혁' 주장마저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공포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안기부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공포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기부를 공포의 권력기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수집관행을 단호히 바로잡고 엄격한 통제장치를 확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기부의 과거 불법비행에 대해 진상규명과 문책, 기타 필요한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둘째 그에 바탕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민주적 법적개혁을 이뤄내는 일, 셋째,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평화구조로 정착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곽노현, 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997. 2. 27. 60쪽>

우선은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박탈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를 해외정보만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대다수 논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당장은 낱치기된 안기부법을 원상대로 돌려놓는 일만이라도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안기부는 언제고 다시 자신들의 '화려했던 과거로의 복권'을 획책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기부 감시모임'을 제안한다. 쉽지 않은 것지만, 꾸준히 안기부의 행태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보태지고, 안기부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사법적인 수단까지 포함하는)하여 국민여론을 안기부의 권한 축소와 통제로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안기부가 개개인의 파일을 만들고, 그를 통해 국민들을 공포로 장악하듯이 국민개개인이 안기부를 감시하는 눈이 되고, 항의하는 입이 될 때만이 안기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7월 31일(목)

제 9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 개막 전 작품 '사전심의' 거부, 무료상영

"영화를 통해 인권을 생각한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관은 동국대 연극영상학과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맡았으며, 한겨레신문사와 기독교방송이 협찬, <키노> <씨네 21>이 주관체제로 함께 한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전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기업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20여 편의 작품 가운데는 유대인학살 문제를 다룬 <쇼아>(SHOAH, 다큐멘터리, 플로드 랑즈만 감독, 86년작), 50년대 대만사회의 모습을 조명한 <호남호녀>(극영화, 허우샤오시엔 감독), 파테말라 원주민 학살 현장을 그린 <푸마의 딸>(극영화, 톰 윈더 감독) 등 세계각국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작품 중에는 87년 6월항쟁 당시 병동성당 농성자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명성 6일의 기록>(김동원 감독), 제주도 4·3항쟁의 증인과 자료를 소개한 <레드헌트>(제작 하너영삼)가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다. <레드헌트>는 지난 4월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의 본선진출작이었으나 작품의 소재를 문제삼은 주최측의 결정에 의해 상영을 취소당했던 작품이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보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선택했으며, 화질을 비롯한 기술적 부분도 월등히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증언, <쇼아> 특히 플로드 랑즈만 감독의 <쇼아>는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이다. 11년이라는 긴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쇼아>는 9시간 30분의 상영시간 내내 출연자들의 인터뷰만 들려주는 파격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랑즈만 감독은 이 작품 속에서 아우슈비츠나 트레블링카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나찌 친위대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엮어냈다. <쇼아>는 86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칼리가리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서 집행위원장은 <쇼아>를 통해 유대인 학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기대한다. 또 일제의 만행과 광주 학살 등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

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쇼아>의 상영에 맞춰 유대인 문제에 대한 강연회(감사: 이상빈 외대 불문과 교수)도 가질 예정이다.

'문민정부의 인권' 단편영화로 제작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밖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권 사진과 판화를 전시하는 '인권이미지전'이 영화제 기간 내내 개최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 하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4분 분량의 단편영화가들이 분야별로 제작되어 본 영화의 상영에 앞서 관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인권영화제 역시 무료로 상영되며,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약 5천 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후원회원의 후원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1회 인권영화제는 총 4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 가운데 50%가 후원회비로 충당되었다.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 인권영화제는 독점자본이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영화마니아들만의 잔치도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입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이름과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제일은행 110-20-342272

농협 033-02-119388 (이상 예금주 서준식)

인권영화제 번역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작품의 자막작업을 위해 일어·영어·스페인어·불어 등의 번역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7월분 총목차 (915-93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15	7/1	1	전자주민카드법, 여론도 안 물어 보고 국민합의없이 통과 우려/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2	전국연합 등, 북한동포돕기 '의도적' 흡집내기 중단,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성명/범민련 2명, 북한성금 관련 연행/주간인권호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주요공판안내
		3	<인권시평> 전·노 사면 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안된다(곽노현, 방송대 법학교수)
916	7/2	1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불쟁, 경찰 가해전경·부모 합의 종용/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주요공판안내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④-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917	7/3	1	임시국회,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안기부법 날치기대로...전자주민카드 도입 등/과거청산국민위·5정협, 정략적 사면논의 중단 촉구 성명/행사와 동정
		2	<세계의 인권>⑤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918	7/4	1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과파괴 현장 방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새로 나온 책-민주법학동권 12호,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 안된다"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⑤-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919	7/5	1	전해투,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공청회 통해 '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미산동부서 경찰서 구내서 시민 의문사, 경찰출 "술 취해 2층서 뛰어내렸다"
		2	납득 안가는 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민자통 의장 연행/새로 나온 책- '1997년 북한인권백서'
920	7/8	1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용역강제와의 전쟁' 시급/김병균 목사 류재를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 요구, 집시법 위반 구속/주요공판안내
		2	기획-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주간인권호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3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김동한, 광주여대 법학 교수)
921	7/9	1	한국 타이어 취업규칙, 현대관 노비문서, 노동기본권 임금/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기자회견,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2	기획: 전자주민카드②-예산집행과 법적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안기부, 하남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시 미란다 원칙 무시
922	7/10	1	잡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새로 나온 책- '1996 노동관계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2	기획: 전자주민카드③-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923	7/11	1	경찰, 한달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학교·농활현장등 안하무인/범민련 대전충남연합 의장 연행/충남대 총화 간부 7명 연행/전국연합, 황장엽 발언 탄압도구 이용 우려
		2	기획: 전자주민카드④-국민편의인가, 행정·통제 편의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감요/행사와 동정
924	7/12	1	대변충남지역 올 상반기 경찰폭력 사례조사, 불법·부도덕 배대/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성명,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행사와 동정
		2	유기협, 마석 모란공원 앞 고층 아파트 건설에 거센 반발/인권영화⑨ 빠드레 빠드로네 (My Father, My Mother), 사회를 향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925	7/15	1	한국타이어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전국연합 성명,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해야
		2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씨 등 4명 8-17년 복역중/KNCC, 양심수 석방·악법개폐 요구/주간인권호름 (7월 7일부터 13일까지)/주요공판안내
		3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며,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하루소식〉 97년 7월분 총목차 (915-93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26	7/16	1	"전자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적으로 확산/〈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⑥-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927	7/18	1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민가협, 전·노 사면 지지 거리 캠페인 선포,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2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은수미, 강릉교도소 출소자)/행사와 동정
928	7/19	1	서울지법 형사6부, "신고없는 항의방문 불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울지검,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정부 "외노관련 상정 약속"
		2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은수미, 강릉교도소 출소자)/인권영화제⑨-〈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929	7/22	1	경찰폭력 처벌, 또 하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주요공판안내
		2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민운탄대책위 명동성당 농성 돌입,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주간인권흐름(7.14-20)
		3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930	7/23	1	전국연합 인권위 사면복권 요청서 접수,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대학생 상대 전쟁 치르는 경찰-충남대생 연행 과정에서 총성 8발/입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않기로",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⑦-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931	7/24	1	"용역깡패 물러가라", 한국 후썬꾸 노동자 8일째 단식농성/〈인터뷰〉 윤동만 한국후썬꾸 노조위원장/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면반대 캠페인·공청회
		2	범민련 강순정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932	7/25	1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김대통령 제임중 사면반대/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 리스트 대신 이용" 우려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⑧-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933	7/26	1	한국타이어 해고자 부분복직, 현장탄압 잔존·성폭행 사건 미해결/〈광고〉 인권정보의 문이 열린다, 사랑방 자료 "하이텔 01410 참세상" 통신 서비스
		2	서울고법, '92년 대선 흑색선전' 혐소 기각, 전국연합 강령·구성원 문제삼아/〈보랏빛 손수건〉 〈해고자〉, 야마가타 영화제 후보 올라/새로 나온 논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오늘의 행사
934	7/29	1	전·노 사면 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린 민가협 어머니 경찰 강제연행/참여·자치·연대 학생대회, "지속가능한 운동" 모색/주요공판안내
		2	경찰, 부상당한 전농동 철거민 3명 구속, 경희의료원 주변 검문검색 강화/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주간인권흐름(7월 21일부터 27일까지)
		3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김동한, 광주여대 법학교수)
935	7/30	1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노 사면 반대 국제서명운동 시작,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호소/여연 청소년 문제 긴급토론회, 청소년인권현장 채택 제안/주요공판안내
		2	기획: 안기부와 인권⑨-마지막회, 안기부의 개혁방향; 안기부 감시모임을 제안한다
936	7/31	1	제2회 인권영화제 9월 27일 개막, 유대인 학살 다룬 〈쇼아〉 등 20여 편 상영
		2·3	〈인권하루소식〉 97년 7월분 총목차 (915-936호)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
(제937호 - 제957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일(금)

제 9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총련 문제, 자물에 맡겨라”

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30일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가진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통해 7월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한총련 중앙조직원 7백여 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마녀사냥식 학생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은 31일 각각 규탄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만일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 각 대학의 수십만 학생들이 전부 소환,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 모임인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도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부 구성원의 성향이나 활동만을 빌미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운동 스스로 반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총련등, 자율적 해결 보장 요구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검찰의 탄압 중단'과 '한총련 스스로의 개혁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전북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한총련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보장하라"며, 지난 30일부터 전주 중앙성당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대, 서울대, 경북대 등 [전국 학생대표자 연석회의] 소속 20개 대학 총학생회는 "검찰의 학생운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강경대응은 학생운동내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총련에 대한 무리한 구속과 탈퇴압박은 진정한 사태해결에 부합할 수 없고, 오히려 극단적인 저항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연석회의는 "학생운동 혁신을 논의할 수 있는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할 것과 이적단체 규정에 의한 구속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총련과 대표자연석회의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출범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과 범청학련 축전 계획의 중단"등을 촉구했다. 전북총련은 "현시기에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성과 변화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한총련의 가

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대표자 연석회의도 △한총련 중앙집행위의 전원사퇴 △범청학련의 자진 해소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적극 전개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12.12, 5.18재판 역사적 쉼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게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쉼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확실하게 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는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기화재 복구, <인권하루소식> 다시 보내드립니다.

지난 28일 화재로 중단되었던 업무가 7월 31일 오후 늦게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못받아 보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팩스를 통해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한총련 개혁 보장을 위한 전/북/총/연 성명서(발췌)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무분별한 학생 연행 반대!

1.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암으로 입원해 계신 단체 학생회장의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을 한총련 탈퇴시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며 설득을 빙자한 폭언으로 지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부모님을 협박·희롱하여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총련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각 대학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며 각종 이권을 미끼로 대학본부에 압력을 넣고, 매일 이다시피 한총련 탈퇴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본부·부모님의 압력 속에 한총련 대의원들은 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한총련 탈퇴는 이처럼 대의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기 보다는 각종 협박과 압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한총련은 한국대학 총학생회의 연합단체로서 현재의 이적단체 규정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한총련의 폭력성과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화하여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을 탄압하고, 학생운동을 아예 씨를 말리려는 하는 정부당국의 무차별적인 처벌방식은 과장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벌이고 있는 한총련 개혁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한 건강한 변화의 노력을 외면한 채 7월 31일 까지 탈퇴하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들을 전원 연행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총련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안정국을 통한 보수화 흐름 만들기의 하나로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2. 한총련 지도부는 출범식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범청학련 축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진정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중략> 현시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

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통일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후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과 변화의 진솔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한총련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3. 정부는 개강 후 학생총회를 통해, 한총련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각 대학은 여름방학 중입니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총학생회의 연합단체이므로 탈퇴 여부 및 개혁의 내용도 학우들의 의견과 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무리한 협박과 탄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전북지역은 이미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평화적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또한 양로원·고아원 방문, 수해복구 작업, 거리청소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하였습니다. 전북지역의 그동안의 노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한총련 출범식 사태 또한 학생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한총련에 대한 개혁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학생운동의 자발적인 개혁과 변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한 학생운동세력과 각 대학 총학생회의 노력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변화할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힘에 의한 강제'는 군부독재와 다름없는 행위이며 이는 문민정부 하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희 전북지역 대학생들은 정부가 과도한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개강 후 학생총회를 통해 한총련 불신인 여부를 물을 것이며, 이후 한총련의 변화에 따라 학우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21C 미래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인인 대학생들 스스로 문

제해결 능력이 있음을 믿어주시지요. 반성과 변화를 통해 다시금 국민들의 희망으로 일어서겠습니다.

1997. 7. 30

사랑과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청량동 주민들 길거리로 가수용시설 예고없이 철거

동대문구 청량동 61번지 가수용시설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조미경 씨 등 주민 10여 세대는 지난 29일 오전 철거용역 4백여 명이 들이닥쳐 가건물(일명 콘센트 막사)을 철거해 버림에 따라 현재 길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5년여의 철거투쟁 끝에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의 공증을 받은 가수용시설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임대아파트 입주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가수용시설을 비워주어야 하는 처지였다. 처음에는 30세대에 달하던 가수용단지 입주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증금(8백만원)을 마련해 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10여 세대는 보증금 마련이 안돼 입주가 어려운 처지이다. 한 주민은 "철거 강대들이 자기 기저귀조차 챙겨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을 철거해 버리면 어떡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량동 철거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가수용시설을 헐고 그 자리에 놀이터와 정구장을 만들어야만 1천세대대의 입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철거를 실시한 것 같다"며 "시공업체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수용시설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를 권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 회원과 대학생, 한국후포노조 회고자등 4백여명은 31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청량동 강제철거와 전농동 박순덕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일(토)
제 9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공포를 몰고 다니는 철거용역 (주)적준, 철거폭력 대명사

회사인가. 강대집단인가.

철거지역에서 으레 출현하는 철거용역회사와 그 직원들은 철거민들에겐 소름끼치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폭력과 방화, 성추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철거민의 죽음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농동 철거지역에서의 박순덕 씨 사망사건은 철거용역원들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빚어진 대표적인 참극이다. 18미터 철담뱀루를 쌓고 그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 10명은 강제철거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불길을 피하지 못한 채 투신, 박순덕 씨가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 화재원인에 대해선 철거민들과 용역직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농동 철거용역을 맡은 (주)적준(대표이사 정숙중) 측은 "주민들의 화염병에서 나온 신나가 화재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망루 주변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타고 있었다. 주민들이 던지던 화염병에서 신나가 유출되어 삼시간에 불이 확산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 측은 "용역직원들의 방화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전철연 측은 "두더지잡기라도 하듯 용역강대들이 망루 주변에서 못가지와 페타이어를 태워 철거민들의 질식을 기도했다.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해 설치된 1층 방벽을 뜯어내고는 기름이 묻은 페타이어를 던져넣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망루는 2층의 취사용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가스로 가득찬 상황이

였고, 페타이어에서 나온 불길이가스에 옮겨 붙으며 5층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아직 경찰에서 화재의 발생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농동 사태는 강제철거와 철거폭력의 악순환에서 비롯된 비극임이 분명하다.

철거폭력 방지대책 절실
특히 이번에 전농동 철거용역을 맡은 (주)적준에게는 '폭력'의 꼬리표가 끊

이지 않고 붙어왔다. 지난 4월 용산구 도원동에서 주민들과 서울지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집단폭행당한 사건을 비롯해 4-5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의 방화사건, 성동구 행당동에서의 주민협박·폭행 사건 등 철거폭력 시비가 있는 곳마다 적준의 이름이 등장했다. 또한 적준은 95년 4월 봉천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원이 여성주민의 음부에 연탄재를 쑤셔넣은 사건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올 4월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지구는 모두 96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주)적준이 용역을 맡은 지역은 무려 42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철거폭력에 따른 제2, 제3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로나온 논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1996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원웅 298쪽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국제인권레짐'의 실천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씨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며 "비정부기구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비정부기구에게 희망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개별국가가 인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국가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힘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지금보다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비정부기구에게 보다 많은 협의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서구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비정부기구의 숫적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씨는 논문에서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노 사면 반대 서명운동 천리안 희망터(go pp)

인터넷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과거청산국민위)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서도 사면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과거청산국민위 사무국의 이민우 간사는 "요즘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 씨 등의 사면에 대한 반역사상과 반민주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청산국민위는 사면 반대 서명운동과 더불어 통신상에서 △5·18 진상규명과 철저한 명예회복 사업 △5·6공 시절 인권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인권피해 증언의 장 운영 △5·6공 시절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과 명예회복 운동 등의 진행사항을 알리고 통신인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사면 반대 서명이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리안 희망터(go pp)로 접속해 14번 외부단체 & 대학소식에 들어가면 된다.

제2회 인권영화제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듭니다.

- 제2회 인권영화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 인권영화제는 독점자본이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영화마니아들만의 잔치도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입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이름과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제일은행 110-20-342272
농협 033-02-119388(이상 예금주 서준식)

인권영화제 번역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작품의 자막작업을 위해 일어·영어·스페인어·불어 등의 번역을 맡아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인권영화 II <블레이드 러너>

감독: 리들리 스콧
주연: 헤리슨 포드, 손 영, 룯거 하우어

한시절 여름 영화관을 주름잡았던 귀신과 악마와 괴물들이 90년대 들어서 힘을 잃고 있다. 대신 요즘 스크린을 활보하는 주인공은 괴상한 몸골의 외계인들이나 초매가 톤급 액션이 장기인 서양 용병들이다. 이들의 험난한 활약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까지가 '인간' 혹은 '인간적인'의 기준인지가 점점 모호해진다. 거기다가 인간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인간보다 더한 생명에의 애착을 갖는 합성인간들까지 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걸까. 이 한편의 영화를 진지하게 본다면 쉽게 '없다'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는 2019년 LA, 거리는 온갖 불빛에 싸여 있지만 어둡고 칙칙하다. "우주 식민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심상하게 흘러나오고 대형 전광판에는 한자와 일본 여인의 얼굴로 가득하다. 이 암울한 도시에 노예로 제작된 레플리칸트(합성인간) 6명이 우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구로 잠입한다. 제품명은 넥서스, 수명은 4년. 이들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레플리칸트 전문 경찰인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헤리슨 포드)에게 차례로 '제거'당한다. 최후까지 남은 자는 로이라는 이름의 전투용 레플리칸트.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과 괴력을 갖춘 그는 데커드와 '목숨'을 건 멋진 게임을 시작한다.

인간과 레플리칸트는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레플리칸트들은 외형만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유년의 추억까지도 이식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단단하게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쯤 되면 존재의 정의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블레이드 러너인 데커드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개프는 계속해서 종이 유니콘을 잡고 데커드는 달리는 유니콘 꿈을 쫓는다. 데커드에게는 유독 과거를 증명하는 흑백사진만 있고, 개프는 데커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과연 블레이드 러너는 누구인가. 물론 해답은 관객에게 맡겨져 있다.

■ 감상포인트: 완벽한 레플리칸트인 로이를 연기한 룯거 하우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데커드마저 레플리칸트라는 판단이 선다면 과연 생명의 가치와 인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진지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내다 보는 미래사회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관객을 위한 퀴즈 하나. 죽음을 맞이하는 로이의 행동과 모습에서 연상될 수 있는 인물은? (힌트: 못에 찔린 손바닥, 가슴에 안은 비둘기,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제거하려던 인간을 구해준 것)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김경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5 일(화)
제 9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장 고소

경찰서 출입기자가 관할 경찰서장과 소속 형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 7월 29일자 참조>.

<한겨레> 사회부 송현순(28) 기자는 지난 7월 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진경원(58·종로경찰서 수사2계) 경사를 4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나희성 수사2계장과 김대식 종로경찰서장도 각각 폭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송 기자는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다 종로서로 연행된 민가협·유가협 회원들을 취재하던 중이었으며, 진 경사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지껄이자 이에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현장에는 나 수사2계장과 형사 1명이 같이 있었으나 이를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 결과, 송 기자는 다발성 좌상(우상완부 배부)과 요부염좌, 우견관절염좌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 지팡이 자격 없어"

송 기자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반말에 항의하는 시민(기자든 민원인이든)

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이 엄격히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진 경사가 '기자인줄 몰랐으며 민가협 회원인줄 알고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은 경찰이 얼마나 시민을 하찮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며, 시민이 자신의 하급자에게 두들겨맞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수사2계장은 '민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4일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앞으로 각각 공개질의서를 보내 5·18 관련자들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 대표에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된다면 사면을 검토할

중의 지팡이'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또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러내야 할 경찰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의해 버젓이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이 나타난 만큼, 경찰서 최고책임자인 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경 관행상 이례적 대응

출입처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의 관행상 기자가 관할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이번 송 기자의 고소는 "경찰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수 있다"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의 언급이 당의 공식입장인지 △사과와 반성'의 기준이 무엇이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아무 때라도 사면이 가능한지 △두 사람의 사면에 앞서 5·6공 당시 피해자나 양심수들의 명예회복이나 석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를 던졌다. 김종필 총재에게도 전·노 씨의 사면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에 대한 의견 및 사면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어느 당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즉각 범국민적 항의를 벌일 것"이라며 "전·노 씨에 대한 사면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단식농성 등 강도높은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시평'은 필자 사정으로 내일(수)자에 실립니다.

“통신에도 몰래카메라?”

통신검열철폐 서명운동 계속

최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사회비평동호회인 ‘희망터’는 지난 5월말에서 6월초에 걸친 대대적인 ID, 글 삭제사건 이후 통신자유 수호를 위한 ‘검열철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터’ 대표 이경수 씨는 “특정사건이나 정치성을 띠는 사건이 발생하면 서명운동이 확산되었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검열철폐’에 대한 통신인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 다시금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간격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인 ‘희망터’는 4일 현재까지 1차로 1백5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통신인들은 “지금도 이 글을 보고 있겠지, 총 쏠된 두 눈으로...”(ID:STARTLIN), “통신검열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LIMJONG), “나를 감시하지 마란 말이야!”(IZPMBIE), “내입을 막지마!”(HAMSONG), “제발 남의 집 좀 넘보지 마세요. 존말로 할때”(river96) 등 마치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처럼 강한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정부의 통신검열행위에 맞서 민주노총, 민변, 전국연합등과 함께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판 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5일 (화)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병주 의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성광 의 1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신종봉 의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장민호 (건조물침입등)

오후 2시 319호 법정

김법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황승일 의 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최지희 의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8일 (금)

-오전 10시 311호 법정

박종윤 의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권형상 의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김선우 의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김태엽 (특수공무집행방해등)

- 이상 신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기타 공판>

▶ 7일 (목)

김유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8일 (금)

한영진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2시 합의5부 425호 선고

주간/인권/호름

(97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 7월28일 (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진경원 경사, 취재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중앙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

◆ 29일 (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민회인 비상대책위’,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 “마구잡이 단속과 무차별적 규제 중지할 것” 촉구

◆ 30일 (수)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희 대검공안부장), 한총련 미탈퇴한 대학생 7백여 명 사법처리키로/서울경찰청, 1천5백명 규모의 시위진압용 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이들에게 1백80센티미터 길이의 진압봉 등 지급키로/안기부, 북한의 지령받고 ‘구국전위’에 공자금 전달한 혐의(국보법 상 회합·통신·편의제공)로 제일동포 유용범(40·일본 2여행사 과장)씨 구속/안기부, “황정엽 씨의 진술을 근거로 국내 여러 곳에서 간첩 혐의를 포착해 대공수사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원주시 명륜교회 김광림(55) 권사,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서울고법에 ‘대통령의 사면권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제기

◆ 31일 (목)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 탄압에 항의하며, ‘한달간 절필’ 선언/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 강철수 씨 등을 음란물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국제엠네스티, “한국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반대자들을 체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서울고법 형사3부, 안두희(김구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징역 3년 선고

◆ 8월 1일 (금)

건설교통부, 5일부터 지방중소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최고 1백% 인상하기로

◆ 2일 (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반은 최영섭(38·창해산업 이사) 씨, “검찰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며 전치 5주의 진단서 공개

◆ 3일 (일)

서울북부경찰서 미아2동 파출소 소속 안원섭(28) 순경 등 경찰 4명, 주택가 골목에서 시민 김영광(37) 씨와 시비 붙자 김 씨를 음주운전자로 몰아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과잉대응/말레이시아 일간지 <스타>, 북한주민 돕기 위한 자선기금 모금에 착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6일(수)

제 9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기부 주사파 조작” 의혹

‘외대 주체사상연구회’ 사건 재연 조짐

또 조작사건인가?

최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용인 교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방학이 시작된 이후 김형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간부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일제히 모습을 감춘 것이다. 이들이 몸을 피한 채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안기부가 외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7일 안기부는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해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9학번) 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6일엔 군복무중이던 김기우, 김병준, 임민혁 씨 등 외대 출신 3명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94년 발표됐던 이른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주사연)’의 조직원으로 지목받았으며, 특히 김진성 씨는 ‘93년 주사연을 결성·배후조종한’ 혐의와 ‘졸업 후에도 주사연 출신들을 규합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행사실이 확인된

뒤, 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1차 반박자료를 통해 “안기부가 밀실감압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김진성 씨는 면회과정에서 “안기부가 외대에서 학생회 간부나 운동을 했던 2백여 명의 명단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밝혔으며, 김병준 씨도 “94년의 수사기록 안에 주사연의 각종 기록과 중앙위 구성표가 들어 있었다”는 말을 했다.

외대 총학생회는 “이미 졸업한 과거 운동권을 무차별적으로 검거대상에 올려 놓았고, 안기부의 주장외에는 어떤

한 물증도 없다”며 “안기부가 대규모 주사파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년이 지난 사건을 지금에 와서 수사하게 된 배경 △도청 가능성이 상존하는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주사연을 결성했다고 말하는 안기부의 비상식적 설명 △20여 일이 넘게 밀실 수사를 벌인 채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까닭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안기부가 김병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의 진술을 허위로 제시하며 이를 시인케하는 등 함정수사를 폈고, 3일 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진성 씨 구속사건은 안기부가 ‘부활한’ 수사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었으며, 이번 외대 학생회측 주장에 따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반대하는 ‘특이한(?)’ 사랑

명동 향린교회, 전·노 사면반대 서명운동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라는 ‘교회’에서도 ‘전·노 사면’에 반대하는 까닭은 뭘까?

서울 명동에 위치한 향린교회(담임목사 홍근수)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3일 두 주일에 걸쳐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해 교인 1백82명이 서명을 받았다. 교회측은 “얼마전 로마 가톨릭 교회측과 불교측의 인사들이 전·노 사면청원서를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는 보도와 대통령 후보들의 사면 운운에 놀란 향린 교우들이 때마침 시작된 ‘사면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서명지를 본 교우들 거의 모두가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또 “지금까지 한 주일치 서명운동에 이렇게 많이 참가한 예가 없었다”며 “이는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향린교회 교우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유죄판결, 징역, 사면, 석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인들과 일부 종교인들은 국민들의 의혹부터 말끔히 씻어내야 하고, 전·노 두 하살범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노 사면반대” 결의대회

· 때 : 8월 6일(수) 오후 3시-5시
· 곳 : 여의도 신한극당사 앞
· 주최 :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문의: 782-4194)

남북교류협력금 3천4백억 북한지원 촉구 97민족대회 추진위, 동포돕기 단식운동

8·15광복절을 맞아 정부의 대북동포 지원을 촉구하는 단식운동이 전개된다. 97 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등)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단식운동을 통해 정부에게 "남북 교류협력기금 3천4백억원을 대북 동포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액수는 정부가 2년 전 대북식량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이번 단식운동은 97평화통일민족대회(약칭 민족대회)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운동 계획'의 하나로 준비됐으며, 단식대표단은 오는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순례단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단식단에는 허장 위원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30여 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함께하며 전국 각 지역과 부문단체들도

하루씩 단식운동에 결합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 기치

한편 97 민족대회 추진위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시기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이 필요하다"며 대중참여형 통일운동, 대중적 민족대단결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민족대회는 '북녘동포돕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민족화해의 기류 형성'을 중심 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모금사업, 수도권 순례단 활동, 15일 동포돕기 걷기대회등을 갖기로 했다. 또한 12일엔 '평화·통일 민족도론회'가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열리고, 15일에는 8·15기념식 및 민족대회 본행사가 여의도 한강교

수부지에서 개최되며, 이어 '97평화·통일 문화한마당'이 문화예술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여권이 전두환·노태우 씨를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대신이 끝난 뒤 사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5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참회가 없는 한 전·노 씨에 대한 사면논의는 거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전·노 사면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진한 과거청산작업과 민주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7일(목)	8일(금)	9일(토)	11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시 선포식 및 기자회견 ■ 11시 ·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하루감옥 체험 ■ 오후 12시~2시 만민공동회 (전·노사면 반대) ■ 2시~4시 캠페인 참가자를 위한 인권강좌 ■ 6시~8시 목요집회 ■ 8시 시민가요제 예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시 하루감옥 체험 ■ 오후 2시 양심수 희망그리기 (만화가, 양심수 자녀들과 함께) ■ 6시 제4회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시 하루감옥 체험 ■ 오후 12시~2시 만민공동회 (전·노사면 반대) ■ 5시30분 1천여 성당의 종울리기 (삼중기도, 양심수 석방 기원) ■ 6시30분 콘서트 (양심수를 위한 희망의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7시 양심수 우선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장소> 명동성당 일대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3층강당
<주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인권
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학가를 '마녀 사냥'의 회오리가 감타하고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 아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투항 기한'으로 정한 7월 31일까지 206개 한총련 가입대학 중 132개 대학 총학생회와 1,658명의 한총련 중앙대의원 중 1,124명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한다. 남총련 의장과 조국통일위원장이 한총련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제 공간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보적인 교과서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가를 '마녀 사냥'의 회오리가 감타하고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 아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투항 기한'으로 정한 7월 31일까지 206개 한총련 가입대학 중 132개 대학 총학생회와 1,658명의 한총련 중앙대의원 중 1,124명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한다. 남총련 의장과 조국통일위원장이 한총련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제 공간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보적인 교과서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음으로 탈퇴행위는 대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결성된 한총련 전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분명 자기기만이다. 한총련 지도부가 심각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는 것 좁은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탈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도덕성의 실추로 인하여 궁지에 몰린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총련을 속죄양 삼고 공세를 가하는 지금인가? 공간세력과 언론들이 동방 들고 일어나 탈퇴하지 않으면 모두 구속하겠다고 살벌하게 설치는 바로 지금인가? 탈퇴가 폭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사실을 탈퇴한 본인들은 누구 보다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대량 탈퇴에 만족하는 공간세력은 폭력을 '역시 써볼 만한 수단'으로서 재인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량 탈퇴는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인간이란 어차피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냉소를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한총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물론 대학생들 개인의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대학생 개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을 마음대로 탈퇴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밥을 먹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 우리의 일상 생활조차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구조와 따로 떨어진 완전한 개인사일 수가 없다. 하물며 '한총련 탈퇴'의 결단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날 단순한 문제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탈퇴행위가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자기 합리화를 돕고 있다는 점이다.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늘 취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자기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을 고립시키고 말살하기 위하여 그 '적'을 집중적으로 음산하고 위험한 이미지로 재정의(再定義)하는 행위다. '한총련'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바야흐로 '폭도', '살인', '패륜' 등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혐오어(嫌惡語)로서 '재정의'되고 있다. 언어는 결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다. 이런 유의 혐오어는 언제나 지배세력의 부도덕성이나 비

대학가를 '마녀 사냥'의 회오리가 감타하고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 아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투항 기한'으로 정한 7월 31일까지 206개 한총련 가입대학 중 132개 대학 총학생회와 1,658명의 한총련 중앙대의원 중 1,124명이 한총련을 탈퇴했다고 한다. 남총련 의장과 조국통일위원장이 한총련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제 공간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보적인 교과서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생 사회에 만연시킬 것이다. 나아가 몸을 내던진 정의의 주장을 희화(戲畫)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정의와 진보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평생에 한번 좁은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내던져질 때가 있을 것이다. 고립무원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희망과 믿음을 저버리기 위한 핑계를 찾게 마련이다. 정의와 진보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저버리는 데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만큼 편한 도피처는 없다. '한총련?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은가?' '감옥에 가느니 뭐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 더 겸허해야 한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 대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한총련 탈퇴를 거부하고 한총련을 '재재정의'해내는 일 만큼 엄청난 의미를 지닌 투쟁은 없다. 권력의 폭력을 뜻없이 견디며 기꺼이 감옥에 감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때”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석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인권단체들도 전·노 씨 사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6일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AI)를 비롯해, 스위스의 OMCT 고문 반대세계단체,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 권위원회(AHRC) 등은 일제히 성명서 또는 탄원서를 발표해 전·노 사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광주학살을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 이러한 과거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광주학살과 고문, 부당한 재판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인권침해조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노사면 ‘국제적’ 망신 세계 최대의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도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전·노 씨 사면은 인권보장의 심각한 후퇴로서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면설이 철회되도록 공식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홍콩의 인권단체들도 “전·노 씨의 사면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청산위, 신한국당사 앞 시위 또한 국내에서의 ‘사면 반대’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민변, 전국연합, 민교협 등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과거청산위)는 6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전두환·노태우 사면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여당의 전·노 석방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영수(삼척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사면은 과거 여당의 보스인 전·노 씨에 대한 탈출구일 뿐”이라고 비난했으며, 김상근 목사는 “전·노 사면을 통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5·6공 당시의 학정과 악행 때문에 단죄된 전·노 씨를 사면한다는 것은 곧 학정과 악행을 모두 인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면문제에 대한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표명 △전·노 사면논의의 즉각 종단을 촉구했다.

과거청산위는 두 전직대통령의 석방이 예상되는 15일까지 ‘사면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한다는 방침 아래, 각계 각층의 사면 반대 선언과 단식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없이 장례 못치러 박순덕 열사비대위 규탄집회

[철거민 고 박순덕 열사 방화살인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 비상대책위] (고 박순덕 열사 비대위)는 6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철거민, 노동자,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거권 쟁취를 위한 2차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김창수(고 박순덕 열사 남편, 전 전농동철거대책위 위원장) 씨는 “죽어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내의 영정을 지키면서 수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며 아내의 한을 풀기까지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어 2부는 포철의 정리해고에 맞서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노조탄압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국 후포구, 덕부진흥 노동자들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1997년 8월 7일(목)

제 9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국제화 시대의 개막을 받맞으로 전광판에 내보내는 어느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대학입학 시험에 무슨 과목을 넣느냐 마느냐가 교육을 고민하는 출발점이고, 과외를 풀어주느냐 마느냐가 교육의 기회에 대한 고려이다. 청소년을 번역 들어서 뒤집어 흔들며 아이들의 죄상과 도덕성의 타락을 털어 내는 것이 청소년 선도 교육이고, 한층련 탈퇴 강요를 통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생생한 학습장을 조성해 주는 것도 빼놓아선 안될 일이다.

여기에 ‘인권교육’이란 걸 들이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인권교육! 그대 그거야! 도덕교육이 강화돼야지,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법 착실한 시민이 되는 법을 배워야 돼” 라는 맞장구가 나오지는 않을까?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무슨 인권교육이 되겠어”라는 반응은 어떨까?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와 요구의 수준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94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안 49/184를 통해 ‘유엔인권교육 10년(1995-2001)’이 선포됨으로써 인권교육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유엔 인권교육 10년

훨씬 이전인 45년부터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문서에 등장하여 왔다. 이들 문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 고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사국에 부과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할 국가의 책임을 만들어냈다. 최근의 예로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선언과 행동계획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인권교육과 훈련, 대중홍보야말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관계와 상호이해, 관용과 평화를 증진시키고 성취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격의 발달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국 정부

에 촉구하였다. 여기에는 인권과 인도주의법 등을 다루는 교과목이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대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듬해에 결실을 본 것이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인 것이고, 유엔은 ‘유엔 인권교육 10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그 주요목표로서 1)인권교육의 욕구를 평가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 2)국제적, 지역적, 전국적, 지방적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하는 일 3)인권교육 교재를 상호협력 속에서 개발하는 일 4)대중매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 5)세계 인권선언을 전파하는 일 등을 내걸었다.

위의 선언과 행동계획에 뒤따라 여러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역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인권교육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가 선보여 왔다. 개중에는 산수, 지리, 역사 등 학교의 각 교과목과 결합시킨 내용도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도 많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일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호기심과 교육욕구가 적지 않은 한편, ‘인권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장애물에 대한 거론도 지나칠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기정사실화 시킨 수많은 ‘종이 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물음에 시원스럽게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위의 약속

인권교육의 불가능성과 동시에 가능성을 내포한 걸림돌을 감지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실현을 방해해온 역사적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인권교육은 ‘개발’의 의미와 개발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는가에 대해 문제제기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개발을 주도하는 사회·경제 세력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세계경제의 지구화에 시급히 강조점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국제사회가 오로지 종이에서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강조점을 두고 이 점을 전달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세계무역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5백여 다국적 기업, 국제재정기구, 무수한 원조와 투자 기관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었는 것은 아닌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권리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을 더욱 주변부화 시킬 뿐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사회세력과 권력관계를 읽어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출발점

우리는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인권의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충분히 깨닫고 있지 않은가.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제2회 인권영화제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듭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등극대에서 열립니다. 개인후원은 1구와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와 5만원이며, 1구와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인권영화제 번역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작품의 자막자임을 위해 일어·영어·스페인어·불어 등의 번역을 맡아주시길 필요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8일(금)

제 9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그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전두환·노태우 씨 등 5·6공 인권침해 주범들에 대한 석방이 논의되는 한편에선, 양심수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절절하다.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열린 '97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선포식에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김승훈 신부, 허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재야·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해 민가협 어머니, 5·6공 의문사 희생자의 가족, 고문피해자, 출소장기수,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양심수의 석방과 5·6공잔재의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9백여 명, 이 가운데는 83년 안기부에서 40일 간의 고문수사를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정영 씨 등 5·6공 때의 구속자도 50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주항쟁 기간 동안 사라진 수백 명의 행방불명자, 3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의문의 죽음을 당한 41명의 희생자, 그리고 1천3백여 명의 해직언론인과 5천명에 이르는 해고노동자 등 5·6공의 인권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널려있다.

유명인사들 하루감옥 체험

참석자들은 “전·노 사면을 논하기 전에, 고문·실종·의문사·조작간첩·삼청교육대·언론통폐합 등 5·6공 인권범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희망과 화해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포식이 끝난 뒤엔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이 1시간 가량 명동일대에서 벌여졌으며, 이어 '양심수의 고난을 경험하는' 하루감옥체험이 시작됐다.

하루감옥체험은 캠페인 기간 내내 명동성당 입구에서 진행되는데, 첫날 체험에는 김형태 변호사, 최영미(시인),

정범구(CBS시사자키 진행자) 씨 등 7명이 참여했다. 체험을 마친 뒤, 김홍신 의원은 “안에 계신 사람들을 생각하면, 체험도 아닌 체험이었다”고 말했으며, 윤동환(영화배우) 씨는 “김대통령에게 ‘전·노 사면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8, 9일엔 이두호(만화가), 권혜효(영화배우), 정성일(영화평론가), 이기욱(변호사), 문대골(목사) 씨 등이 하루감옥체험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가협·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주노총 등 17개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파란색 수의를 입은 어머니들이 또다시 명동성당을 찾았다. 감옥에 있는 자식과 남편의 고난을 대신함으로써, 그들의 석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엔 수의차림의 어머니들 뿐 아니라, 의문사한 아들의 영정을 든 아버지, 통나무를 짊어진 삼청교육대 피해자, 쥐인 붓을 들고 항변하는 해직언론인들도 함께 했다.

“어느날 갑자기 안기부, 보안사에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끌려가 60일에서 1백80일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입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명동 일대를 행진하는 인권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이가 예닐곱이나 됐을까? 한 아이가 수의를 입은 할머니의 손을 꼬옥 잡은 채 함께 행진에 나선다.

“어지럽게 들려오는 전두환·노태우 씨 사면소식. 갇힌 양심수는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란과 내란의 두목’ ‘세기의 도둑’ 전·노는 사면한다고 합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계속됨에 따라 호기심은 안타까움으로, 안타까움은 분노로 변해갔다. 행진대열 사이로 이내창, 허원근 씨의 영정도 눈에 들어왔다. 한참 피어날 청춘에 군사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잊으려고 해서,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결코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어둠속에서 잠자고 있고 가해자는 안개 속에 숨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분노와 절망속에서 흐느끼는 세월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렬을 인도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을 때, 수의를 입은 어머니의 눈가에 자꾸만 눈물이 고였다.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7월 중순경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자기 동생(중학교 2학년)이 교사에게 보호받기는커녕 교사의 이지메 조장으로 학교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유기정학)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징계사실을 학부모에게 통고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반성문만 쓰다 왔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야 징계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은 학생의 누나가 가져온 상황지리 글과 교사와의 대화, 동생의 반친구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서 그가 느낀 압박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교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형이라 할 그 누나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언사(“나도 어린 사람이 지금 담임한테 따지는 거야?”, “나 박사면 동생교육이나 잘시켜, 동생은 그따위로 키워가지고...” 등)를 서슴치 않았다. 또한 증거없이 말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골초라서 항상 눈이 풀리는 아이”이며 “학교내 불법 상행위를 일삼고”, “절도”를 저질렀다고 몰아붙였다. 반아이들 앞에서 “차퇴를 하던지 전학을 가버리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담임 선생, 친구에 이지메

문제의 학생은 평소에 반아이들이 모두 자기를 놀리는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담임선생님 기피증을 보였다. 휴업문제로 학생부에서 조사받던 중 3학년 형의 이름을 대게 된 탓으로 이틀날 그 형에게 뒷산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고, 그뒤 담배심부름과 담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학생은 협박을 받게 두려워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고, 결국 유기정학을 당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담임선생님이 주장한 ‘학교내 상거래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는 징계결과도 통보받지 못하였다.

가족의 항의가 지속되자 학교 측은 ‘일단 전학을 가면 유기정학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가족은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일단 ‘징계사유’를 따져보는 것을 미뤄두고 주소지를 옮겨 인근 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주소지 옮겨 인근 학교 전학

담임선생님이 무서워 학교가기 싫다는 동생을 보고나서 누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반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흠뻑뻑했다는 호소하는 계단에서 주운 것이었고, 담임이 주장한 40여건에 이르는 문제의 ‘상거래 행위’도 친구에게 1백원 2백원을 꾸어 다음날 갚았거나, 문제집을 도난 당해 돈을 꾸어서 사거나, 학급비를 내려는데 돈이 없어서 1천원을 꾸는 등 그 나이 또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는 문제의 비교사와 전화취재를 하였다. 다음은 교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집에 가선 자기가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집에서는 피해자인 줄 안다. 그뿐 아니다. 그 아이 하루에 한 건 이상 말썽을 안부린 적이 없다. 나도 모르게 학생과에서 유기정학을 당했다. 전학한 것으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셋째 누나가 ‘못먹는 감 썰러나 봐라. 옛 좀 먹어 봐라’는 식으로 자꾸 꾸셔대는 것 같다. 징계도, 전학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학교를 상대로 해야지 왜 나에게 이리느냐.”

그리고 며칠 뒤 그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권리로 취재하느냐?” 대뜸 따지는 말이다. “내가 8월 7일 당직을 서는데 학교에 찾아와 교장, 학생주임을 만난 뒤 날 만나. 만약 이전에 취재하면 가만있지 않겠어. 나도 힘있는 사람이며 언성을 높였다. 어차구니 없는 것은 “그 누나와 어떤 사이길래 취재를 하느냐?”는 질

문이었다.

이 가족은 민사소송을 결심하는 데까지 갔다. 아이의 일이 전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나 인격은 아랑곳 않는 교사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교장 선생님의 조정을 통해 담임선생의 사과로 마무리 지워졌다.

‘사과’만으로 그 교사의 태도가 과연 개선될지는 의심스럽지만 학생의 권리를 찾아 뛰어다닌 이 가족에겐 무척이나 긴 여름이었을 것이다.

“신임 교육장관 전교조 인정을”

전교조 개각논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6일 정부의 8·5 개각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명현 신임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를 인정하고, 전교조와 대화하는 열린 자세를 통해 교육개혁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신임 교육부장관이 5·31 교육개혁안의 입안 당사자였음을 상기시키며,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교사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입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인권영화제 번역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인권영화제 작품의 자막자막을 위해 일어·영어·스페인어·불어 등의 번역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9일(토)

제 9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북녘동포의 아픔을 함께하자

‘굶기운동’· 동포돕기 순례단 발대식

북녘동포의 아픔을 함께하는 ‘굶기운동’이 8일부터 15일까지 벌어진다. 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공동대회장 이창복 등)는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굶기운동’ 및 동포돕기 순례단 발대식을 가진 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상근 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격려사에 나선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논리나 정치적 계산을 떠나 북녘동포들에게

한 뜻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단식단장도 “배고픔에 동참하는 굶기운동과 북녘의 실상을 알리는 순례활동을 통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화의 댐 성금’을 동포에게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3천4백여 원을 동포지원을 위해 즉각 방출할 것 △평화의 댐 성금 가운데 남은 2백여

원과 스터어 미사일 구입비로 책정된 4천여 원을 동포살리기에 써줄 것 △김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적 선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날 ‘굶기운동’엔 허장 단식단장을 비롯해 17명이 참여했으며, 단식단은 발대식에 이어 국민회의를 방문, “국민회의가 동포돕기에 적극 나서줄 것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대북지원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단식단은 13일부터 통일원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각 지역·부문별로도 속속 단식참여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대학생 30-40명이 참여하는 순례단은 15일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북녘실상알리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8일엔 명동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만화가들과 함께 그리는 양심수 석방 캠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만화가와 양심수, 무엇이 다른가”

이두호, 김수정, 이희재, 백성민, 이상무, 박제동, 주완수, 배금택, 허영만……

이름만 들어도 만화주인공이 떠오르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만화가들이 대거 명동성당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8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은 만화가들과 양심수 자녀들,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만화가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7월말부터 벌어진 스포츠신문 연재작가의 소환, 만화가 이현세 씨 소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검열강화 등 청소년보호법을 발미로 한 당국의 탄압에 맞서 만화가들이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행사장 입구 주변에는 만화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만화표현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 서명작업을 받고 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만화가 사인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양심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그림 그리기가 한창이다.

또한 만화가 이두호·원수연·장태산 씨가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하루감옥 체험’에 참가하고 있어 지나가는 여중생들과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앞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받는 등 수난 끝에 절필선언을 한 이두호(55) 씨는 감옥체험 소감 대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과 양심수와 무엇이 다른가”고 반문했다.

전경들만 북적북적

보랏빛 수건과 보랏빛 풍선이 하나 가득 수놓은 행사장 주변은 만화가들과 3, 40명의 꼬마아이들 외에는 전경들만이 북적거릴 뿐이었다. 숨막히는 띄약별에 민가협 어머니들과 행사진행자들이 땀방울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이 이렇게 한산한 것은 성당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전경들이 진을 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무조건 신분증 제시요구와 함께 이름을 적고,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한충련 소속 학생들이 집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이러한 불심검문에 민가협 등이 거세게 항의하는 틈을 타 가까스로 행사장에 들어온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는 “한충련 핵심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런 민주화운동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후포우 농성장을 찾아>

휴가도 반납한 채 농성장을 찾는 동지에

농성 24일째. 8월의 폭염 속에서도 한국후포우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들처럼 변변한 휴가 하루없이 후포우 노동자들의 여름은 명동성당의 천막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농성장의 기상시간은 아침 7시. 아침 제조와 성당주변 청소를 마치고 나면 하루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제는 신한국당, 오늘은 일본대사관, 내일은 입구정동의 권순목 사장집까지. 말 그대로 강행군의 연속이다. 집회장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벌써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강행군을 거듭하는 속에 후포우 노동자들은 무려 10만장의 유인물과 스티커 2만부, 벽보 4천장을 소화했다고 한다.

신혼의 단꿈마저 빼앗긴 채

그러나, 장기간의 농성과 폭죽 찌는 더위 속에 농성자들의 피로도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힘들다보니 때로는 격한 감정대립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기혼자들은 보고 싶은 아내 생각에 밤보다 곱절은 힘든 모양이다.

몇 안되는 기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형(28·교육부장) 씨는 지난 5월 결혼식을 올린 초보신랑이다. 하지만, 농성기간 동안 아내를 만난 것은 딱 두 번. 그것도 총각 농성자들의 눈치

를 보며 몰래 농성장을 빠져나온 덕이었다고 한다.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전엔 ‘한두 달이면 끝나니까 참아달라’고 했다가 이젠 ‘어태까지 해 온게 아까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사내커플이었던 덕에 많은 것을 이해해 주면서도 때론 눈물을 보이는 아내 앞에선 “다 때려치울까”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틀린 것은 끝까지 고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농성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신혼의 단꿈마저 빼앗긴 이 씨는, 투쟁이 마무리되면 무엇보다 “가족한테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된 투쟁에도 현장상황은 진전없고 힘들고 지친 농성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밤낮으로 찾아오는 격려 방문객들이다. 안산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의 사업장 노조원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5-10명 단위로 농성장을 찾아왔다. 대학생들도 20-30명씩 찾아와 숙식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고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안산 현장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회사측은 아직도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 15-20명은 회사측의 특별감시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사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8일로 단식농성 24일째를 보낸 윤동만 위원장과 이승환 편집부장은 처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꺾마른 모습이 되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방문객들

을 맞아 몸을 일으켜 보기도 하지만, 힘겨운 모습은 역력하다. 지난 7일엔 이승환 편집부장의 혈압이 80/40까지 떨어져 농성단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농성장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모아두었던 투쟁기금도 이미 작년 12월에 바닥나 버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물음에 한광수(30) 사무장은 한마디로 “개졌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하철이나 명동주변에서 벌인 모금운동과 각계의 지원금 덕분에 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성단은 재정사업의 하나로 오는 13일 안산시 원곡동 기숙사 단지 내에서 ‘하루주점’을 열기로 했다.

매일 저녁 8시. 후포우 노동자들은 명동성당 입구에서 정리집회를 가지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이어지는 평가회를 끝으로 명동의 하루일과는 마무리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광수 사무장은 “발로 뛰는 일밖에 없다”며 “외부단체와의 연대, 언론홍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를 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김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행사와 동정

■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 때: 9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 곳: 명동성당 입구

하루감옥체험(오전10시-6시)/전노사

면반대 만민공동회(낮12시-2시)/양심수 석방을 지원하는 1천여 성당의 종울리기(5시30분)/콘서트-양심수를 위한 희망의 밤(6시30분-)

■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 때: 11일(월) 오후7시

· 곳: 명동 기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제2회 인권영화제 기자회견 및 설명회

때: 12일(화) 오전 11시/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내용: 1.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의 의의
- 2. 조직위원, 집행위원 소개
- 3. 제2회 인권영화제 로고 발표 및 설명
- 4. 상업적 발표(8월 12일 현재 확정작)
- 5. 부대행사 소개 및 설명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2 일(화)

제 9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이번 8·15 광복절 거석방 명단에는 몇 명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인가.

제52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11일 오후 7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는 2백여 명의 사제·수녀·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엄숙하게 치러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천주교 1천 7백인 사제 수도자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노 씨의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세력의 견해도 반대하며, 8·15를 맞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성명에서 "(전·노 씨) 진정한 참회와 개전의 정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법적으로 응당 치러야 할 최소한의 사법적 형량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사면을 탄원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심판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전·노 사면을 반대했다. 동시에 "정작 사면되어야 할 사람들은 전·노 씨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86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43·대전교도소, 13년째 복역중) 씨의 어머니 정동희 씨가 나와 "아들은 63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었다. 88년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심장마비 증세 등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다. 또 정 씨는 "5, 6공 군사독재정권 시절 불법체포되어 60-1

백80일간의 밀실수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간첩 장가수들이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8백90여 명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성명에는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사제 1천59명, 수도자 6백50명 등 전국 1천7백9명의 사제·수도자들이 참가했다. 이는 전국 2천3백여 사제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9일 오후 6시 전국 1천여 성당에서 일제히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성당 중우리기 행사도 가진 바 있다.

대북지원촉구 굿기운동

신한국당 방문

정부의 북핵동포 지원을 촉구하며 굿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통일민족대회 북핵동포돕기 사업위원회 대표단이 11일 오후 2시 신한국당을 방문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단식단장 등 대표단은 신한국당 김영일 통일외

교전문위원과의 면담자리에서 남북협력기금 약 3천4백억원 및 83년도 평화의 댐 모금 잔액 2백억원을 북한동포 지원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굿기운동은 15일까지 명동 향린교회에서 계속된다.

5·18단체, 전·노 사면 반대

"사면 주체는 국민이어야"

11일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등 5·18 유관단체들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노 씨의 처벌은 국민적 염원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사면의 주체 역시 정치권과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사람의 진정한 참회가 없고 △5·18학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양심수들이 존재하는 등 아직 청산해야 할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2회 인권영화제 기자회견 및 설명회

때: 12일(화) 오전 11시/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내용 : 1.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의 의의
- 2. 조직위원, 집행위원 소개
- 3. 제2회 인권영화제 로고 발표 및 설명
- 4. 상영작 발표(8월 12일 현재 확정작)
- 5. 부대행사 소개 및 설명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정범규(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자)

감옥으로 '출근'하는 날 아침, 우리 아이들은 왜 멀쩡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감옥살이'를 하러 가는지 여러동질한 표정이다.

남들은 휴가다, 피서다 하는 철에 명동 어귀에 들어서니 푸른 수의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민가협 어머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푸른 '관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포승줄에 묶일 때까지만 해도 요새 흔하다는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기분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다.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교도관들에 의해 '입방식'이 치러지면서 이제 장난이 아니라 곧 알았다. 교도관들의 폭행과 폭언, 그에 항의하는 민가협 어머니들.

옆방에 있는 감방동기 김홍신 의원은 "겁 없이" 환기통 개방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별 험악한 꼴을 다 당했다. 한 교도관은 내게 영치금도 안 들어 오느냐고 빈정거린다. 앞쪽에 있는 시인 최영미씨나 영화배우 윤동환씨 같이 "얼굴이 팔린" 죄수들에게는 영치금도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내 '담담'은 나보고 영치금도 안들어 오는 '법자'라고 하는데 '법자'는 법무부 자식이란다.

'빵'에 앉아 생각해 본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면이야기가 어디선지 나오면서 '교령'에다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전직 대통령 자리가 어떻게 올라 간건지 기가 막힌다. 수조원의 은행돈을 자기 찜질돈처럼 써버린 정태수나 미국까지 가서 몇십만 달러의 귀한 외국돈을 하루 밤 노름으로 날려 버린 철딱서니 없는 그의 아들에게도 그러면 이 나라 경제발전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교령' 운운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장기수들의 나이는 나이가 아니라 말인가?

'한보'와 김현철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몇 년씩 줄여 놓은 비리 관련자들은 무슨 '지병'이 악화됐다는 핑계를 대서 병원으로 떠돌았다가 적당한 때 거석방 형식으로 풀어준다. 한때 명명거리던 사람들이 쇠고랑찬 지 얼마 안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에 이젠 많은 국민들도 익숙해 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교정 당국이 재소자들의 건강상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가? 만삭의 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교예순 씨는 많은 사람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아 결국 아이를 사산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양심수들은 각종 '지병'에 시달리면서 이 한여름 한증막같은 감방생활을 이겨 내고 있을 것이다.

8월이 제일 견디기 힘들다는 양심수 가족들. 혹시나 8.15 특사에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를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올해 8.15 역시 '역시나'로 지나가 버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주간/인권/흐름

(97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 4일(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49차 유엔 인권소위 본회의에서 아시아그룹을 대표하는 부의장에 박쌍룡 전 의무차관 선출 /〈한겨레〉 송현순 기자, 7월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 휘두른 진경원 경사 '폭행혐의'로 고소/과거청산위, 3당 대표 앞으로 5·18관련자 사면에 대한 의견서 발송/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 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5년만에 최고치 기록/유엔식량계획(UNDP), 북한의 가뭄피해 실태 조사키 위해 방북 예정/〈마이니치신문〉 보도, 옛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 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묘공원에서 2차 투쟁결의대회/기아그룹 협력업체 임직원 8천여명, 정부청사 앞에서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켈기대회/교육부와 교육개혁추진위원회, 98년도 예산서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대비 5% 확보건의/미국의 한 보고서 발표, 동아시아지역의 군비지출이 95년보다 119억 달러 증가

◆ 7일(목)

민가협·민주노총 등 7-9일까지 명동성당에서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벌여/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일본정부에 북한에 대해 1백만명의 잉여미 지원요청

◆ 8일(금)

6월 전경에게 폭행당해 입원했다가 12년전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씨 집행유예 2년에 선고/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 명동성당에서 '굿기운동' 및 동포돕기 순례단 발대식 가저

◆ 9일(토)

〈뉴욕타임즈〉 보도, 8만명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들이 현재 아사 직전의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적어도 80만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미국 육송 소화물 운송의 80%를 차지하는 UPS의 6일째 되는 파업 사태로 미국 전역 흥역치러

◆ 10일(일)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26-30일 중국 연변과 단둥 지역에 조사단 파견해, 북한 식량부족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용용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

인권 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곽 노 현 (방송대 법학 교수)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국민인권기구를 머지 않아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가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었다. 거듭된 국내외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실제로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아직까지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다. 혹시 내년이면 들어설 새 정권에 진상할 생각으로 일부러 시간을 끌며 급년을 그대로 넘길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대응태세가 미흡한 것은 인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연구 하나가 간신히 진행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준비는 없는 상태다.

정부, 거듭된 공약(空約)

거절해 말해서 국민인권기구는 한 나라의 헌법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의 임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행정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설게 들리는 기구이지만 대총 인권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이해하면 무방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국민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아시아만 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국민인권기구를 두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신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법치구조를 모색 중인 동구권 국가에서도 인기품목의

하나다. 가장 체계가 잡히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로는 호주인권위원회가 꼽힌다. 같은 국민인권기구라 할지라도 구성원리와 권한내용의 차이로 말미암아 실제의 기능과 위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인권외교적 제스처의 하나로 급조된 측면이 큰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의 경우 독립성과 조사권이 미흡해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작다고 지적된다. 분명한 것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르는 추세라는 점이다.

동남아, 동구에서도 필수

국민인권기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유엔 국민인권기구 시민으로 이어지는 촘촘하고도 단단한 인권보장의 그물망

다. 첫째, 인권교육과 홍보. 예컨대 사법관리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을 담당하거나 사회전반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그것이다. 둘째,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시 정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 예컨대, 기존의 인권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개정안이나 신규법안의 기초를 지원한다든가 국제인권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을 하고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하는 일이 그것이다. 셋째,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피해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국민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원의 전심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법원의 권한

경합문제가 있어 제도 구상시 이를테면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위한 조사절차는 어떻게 정할지, 권고 권한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것인지 등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셈이다.

독립된 인권침해 구제기구

국민인권기구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인권기구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한다. 국민인권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매개, 그리고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때 국민인권기구는 유엔-국제인권기구-지역인권기구-국민인권기구-인권단체-시민 개개인으로 이어지는 촘촘하고도 단단한 인권보장의 그물망 한가운데 존재하면서 위와 아래, 안과 밖을 잇는 가교 노릇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나 힘없는 비정부단체에만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내인권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하루 속히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가올 입법공청회에 대비하여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 원칙에 관한 심도 있는 내부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3 일(수)

제 9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10월4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인권’ 의식이 깊숙히 스며들게 하고,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의 인권영화제가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작년 11월초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로 제1회 영화제가 열린 데 이어,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동국대(예정)에서 ‘인간을 위한 영상’이라는 부제로 20여 편의 소중한 영화들이 우리들을 찾아온다.

제2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정지영, 이돈명, 한상범)는 12일 오전 11시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회 인권영화제의 출발을 알렸다.

올해도 사전심의 거부

사전심의의 거부했던 작년 영화제는 상영장소 물색에서부터 영화제 폐막 때까지 줄곧 정부당국의 압력을 받아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사전심의 거부에 따른 탄압이 우려되고 있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집행위원장은 “여러 압력 속에서도 제1회 인권영화제를 무사히 치러낸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사전심의의 거부하는데 이러한 견열에 대한 싸움은 일반사람들이 얼마나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70여 편의 후보작품 중에서 시사회를 거쳐 20여 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상영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영작으로는 후 샤오시엔 감독의 대만 3부작의 완결편에 속하는 <호남호

녀>(극영화, 95년작), 나이지리아의 환경파괴를 충격적으로 고발하면서 더불어 환경운동가 켈 사로 위와(95년 사형) 씨의 활동을 담은 <델타 포스>(글렌 엘스 감독, 다큐멘터리, 95년작),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하라 카즈오 감독, 컬러다큐멘터리, 87년작, 87년 베를린 영화제 칼리가리상 수상) <미나마타-환자들과 그 세계>(쓰찌모토 노리아키 감독, 71년작, 73년 제1회 세계환경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쇼아>(폴로드 랑즈만 감독, 다큐멘터리, 86년작) 등 유명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10개 지방도시 순회 예정

시민의 참여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를 지향하는 제2회 인권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비영리 영화제로 모든 영화가 무료로 개방된다. 영화제 재정은 약 3천5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민의 개인후원금(1구좌 1만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단체후원금(1구좌 5만원)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영화제 운영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영화제는 서울 상영을 마친 뒤 10여 개 지방도시(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동국대 연극영상학부가 공동주관하며, 주관매체로는 주간 <씨네 21>, 월간 <키노>가 참여하고, 한겨레신문·기독교방송·불교방송이 협찬한다. (문의: 741-2407, 2407 김정아)

천주교광주교구 “사면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전·노 씨의 사면논의에 앞서 과거역사의 청산과 국민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평위는 “광주민주항쟁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며,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화합과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로잡습니다>

12일 ‘대북지원 굿기운동’ 기사중, 단식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신한국당 김영일 통일외교전문위원입니다.

아시아인권워크샵 참가자 ‘전·노 사면 반대’ 국제연대 요구

지난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인권워크샵의 참가자들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움직임에 매우 실망했다”며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화해라는 구실로 전·노 사면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화해는 반관과 집권과정에서 자행한 모든 행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사면을 저지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을 위한 중대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워크샵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천주교 국제인권단체인 파스 로마나 주최로 열렸으며, 10여 개국에서 30여 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특별기고>

“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이 동수 (만화가,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사무국장)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로 어수선했던 올해 초, 민주당 박종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안은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둑으로 전제하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의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간통)가 - 공룡의 영화 사전심의가 현재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법적 기구로 승격하였다. 또한 사후심의체계의 유통단계의 규제강화를 내걸면서 일부 만화가들을 현혹했지만 최종결정권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의의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전에는 만화 창작자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형국으로 오히려 검열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검찰의 만화사냥과 만화가의 분노

그러던 차에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던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소위 (일진회) 사건으로 갑자기 사회이슈화 되었고 검찰은 이들이 일본 불법폭력만화로부터 이름을 따왔으며 만화를 보고 흥내를 내어 폭력학생이 된 듯 몰아갔다. 그리고 이전에 그랬듯이 대대적인 만화사냥이 시작되었다. 당대의 최고의 만화가중의 한 사람인 <공포의 외인구단>의 작

가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가 4편까지만 나온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음란물로 규정받아 소환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소식은 검찰의 과격한 만화사냥을 우려 속에 숨죽이고 지켜보던 만화가들과 시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한편으로 한 기독교 관련단체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3개 스포츠신문의 만화 등 연재작가들이 '음란조장 연재작가'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대적으로 만화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결국 7월 25일



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임격정)의 작가 이두호 씨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화가들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도대체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일본만화를 들여오기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유해매체를 목록 발표

그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더욱 정확하게는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만화작품 중에서 사단법인이었던 간통이 이미 심의하였던 자료를 그대로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을 발표했다. '성인만화 = 청소년유해만화'라는 단순무식한 등식으로! 이 목록표에는 이희재 씨의 <성질수난>을 비롯해 허영만 씨의 <오, 한강!>과 <오늘은 마요일>, 그리고 문체부 직원들이 흠뻑 빠져 읽었던 허영만 씨의 <들개이빨> 등이 치욕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이는 그야말로 정부가 만화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만화가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결국 만화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가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권력 앞에 상납하던가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무식한 검열은 결국 그들이 표방하는 청소년보호도 하지 못하거나와 전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웅증한 틀거리에 가둬 줌으로써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4 일(목)

제 9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무리한 수사로 사건을 만들어 내려던 안기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기부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성 (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씨가 검찰 기소과정에서는 다른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안기부법 날치기를 통해 부활된 수사권에 의한 첫 구속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초 안기부는 김 씨가 지난 93년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한다'는 강령을 가진 [외국어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배후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나, 검찰 (서울지검 박창수 검사)은 7월 31일 김 씨를 기소하면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교무' 편의 제공'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검찰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성 씨 외에도 김기우 씨 등 군복무중인 외국어대 졸업생 3명이 외에도 주체사상연구회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며, 이들은 현재 군 영창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외국어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가 주사파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김진성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김기우 씨 등의 기소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북한동포에게" 이창복·권영길 씨등 단식

13일 '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 (공동대회장 이창복 등, 민족대회추진위)는 북녘동포의 이름에 동참하는 굶기운동 6일째를 맞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족대회추진위는 호소문에서 "남북협력기금 3천4백여 원으로 북한동포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3천여 원의 미국 무기 구입을 확정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8일부터 현재까지 허장 (민주노동부위원장) 단식단장 등 30여명이 굶기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지 2박3일간 공동대회장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권영길 (민주노동부위원장) 씨 등을 포함해 40여 명이 굶기운동에 동참했다.

행사와동정

■ 이랜드 파업사태 조기해결을 위한 노동부 항의집회

·때: 14일 (목) 오전 11시
·곳: 방배동 서울지방노동청 앞 (방배역에서 남부순환도로 쪽)

·주최: 이랜드 투쟁지원 공동대책위

■ 8·15 기념식 및 '97 평화통일민족대회 개막식

·때: 15일 (금) 오후 5시 (오후 7시부터 평화통일문화한마당)
·곳: 용산가족공원 (지하철 4호선, 1호선 이촌역 하차 도보 5분거리)

·주최: 전국연합·민주노동당

■ 한국후포구 노조 투쟁일정
·14일: 탑골공원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 항의투쟁 ·15일: 광복절 행사 갖고 일본대사관 투쟁 ·16일: 대검찰청 항의투쟁 (오전 11시) ·17일: 서울역 캠페인

■ 학단협 정책토론회 -15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때: 23일 (토) 오후 2-6시
·곳: 서울대 문화관 국제회의실

·내용: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우리' 진영의 과제 (이종우 계명대 교수)/15대 대통령 선거와 각 정치세력의 선거 전략 (정영태 인하대 교수)

·주최: 학술단체협의회 (747-0338)

■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상담 전문교육(야간)

여성의 전화는 제27기 여성상담 전문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7-9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 문의: 269-2962

한국후포구 단식농성 29일째

일본 약력기업의 노조 탄압에 맞선 한국후포구 노조 운동만 위원장, 이승환 편집부장 명동성당 단식 29일 경과, 유복중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의장 (전 한국후포구 위원장), 이승진 문화부장 단식합류 4일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날 더 이상 눈물 나게 하지 말라

지난 7월 25일 재개발지역인 동대문구 전농 3동 철거과정에서 화재발생으로 박순덕(35) 씨가 사망하고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아직까지 화재발생 원인을 비롯해 사인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부상자 중 김명식 씨 등 3명이 7월 27일 구속되었다. 현재 김용인·이윤창·김태영 씨가 인근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데, 화재발생 당시 철탑에 있던 김용인(38·성바오로병원 입원중) 씨와 김태영(39·위생병원 입원중) 씨에게 그녀의 슬막한 상황을 다시 들어본다(편집자주).

25일 오후 6시경, 포크레인 3대가 주민들이 있는 철탑쪽으로 접근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층에 있던 주민 5-6명이 포크레인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철거반원들이 철탑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포했다. 잠시 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철탑 입구의 2중문 중 바깥쪽 문이 부서졌다.

"무슨 소리가 해서 1층으로 내려가봤어요. 철탑 앞에는 철거반원들이 웃가지며 가재도구, 책등을 쌓아놓았고 신나냄새 같은 것이 진동했지요." 당시 철탑에 있었던 김용인 씨의 말이다.

그는 잠시 후 다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놀라 1층으로 내려가던 주민들은 갑자기 밀려올라오는 시커먼 연기에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철거반원들이 주민들이 바리케이트용으로 모아둔 페타이어에 신나를 부어 불을 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철탑화재와 관련해 철거반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거 던지면 제가 죽지요"라며 어이없다는듯 말했다.

철탑에 불이 나자 철탑에 있던 김용인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들은 철탑 5층으로 대피했지만, 철탑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철탑 안에는 단전에 대비해 발전기를 가동시키려고 준비해둔 휘발유가 있었는데, 이러한 인화물질 등으로 인해 철탑은 삼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윽고 더 이상 불길을 피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은 5층 철탑에서 뛰어내렸고,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철거반원들은 뛰어내린 주민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날 사고로 왼쪽 무릎뼈가 부서지고 오른쪽 무릎뼈와 골반뼈에 금이 가는 등 가장 심하게 다친 김용인 씨는 최소 6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불길에 5층에 뛰어 내려

마찬가지로 18m의 철탑에서 뛰어내린 김태영 씨. "뛰어 내린 뒤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병원이더군요. 얼굴이 2배로 부어 있었고 감각이 없었어요. 허리에 멍이 들어 있었구요. 떨어지지만 했다면 이렇게 멍이 들고 붓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김태영 씨는 아직도 부기가 덜 빠졌었고, 눈에는 멍이 들어 있었는데, 연골이 파열되었고 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노모에게 병수발을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태영 씨는 "선량한 사람에게 눈물을 주지 않는 재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한숨섞인 소리로 말을 맺었다.

감독: 장선우, 주연: 나쁜 아이들

나쁜 감독(?)이 나쁜 애들을 데리고 '나쁜 영화'를 만들었다. 다크 형식을 빌려 궤양인 대본을 무시하고 거리의 아이들에게 무작정 들이댄 카메라는 용감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저녁뉴스의 카메라 고발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 그래도 '빨간 마후라' 때문에 요즘 우리 애들이 도매급으로 비행청소년이 돼버렸는데 영화에서도 온통 나쁜 애들만 보여준다. 그게 목적이거나 한 듯이.

벽돌로 사람을 쳐죽이는 애, 춤시합에서 졌다고 휴지로 입코를 틀어막고 자살하려는 애, 술취한 행인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지갑을 터는 애, 폭주족을 보고 미치도록 소리치며 태워달라는 애... 아! 정말 우리 애들이 저렇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래 자진 분명히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야.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해'라는 생각을 못 갖게 만든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려느냐" 하시면 구경꾼 모두가 던질 것 같은 분위기가.

영화의 후반부는 도시의 지하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려자들의 일상에 비중을 둔다. 나쁜 아이들과 행려자들은 단지 같은 거리의 인생들 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질감이 들 정도로 서로 무관하게 걷는다. 나쁜 아이들의 결국을 보여 주려는 것도 아닐테고...

영화는 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학과 풍자라도 그려 할진대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땐 더더욱 그래야 한다. 비록 그것이 재미있이 아닌 우울한 미래일 망정 카메라가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상' 그 자체만 나열하는 것은 필름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왜 그들의 고민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의 이유있는 불만은 어디다 빠뜨렸나? 도대체 그들의 눈물은 어디에 흘려버렸단 말인가? 사회의 귀퉁이에 버려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규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쁜 영화 속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전혀 별개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행려들을 빼고는 모두 미성년자만 등장해서 적나라한 삶을 드러내는 영화인데, '미성년자 절대 관람불가'라는 자극적인 문구하며, 불량기 가득한 팝플랫은 참 나쁜 영화답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 아닌 장선우 감독의 필름이란 것이 더더욱 보는 이들을 속상하게 만든다.

전경일 (민주연론운동협의회 영화반 회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6 일(토)

제 9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에 양심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전망이다. 52돌을 맞는 8·15를 앞두고 14일 정부는 무기수 9명을 비롯한 수형자 3백 18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제일동포 장기수 이현치·김태홍 씨를 석방한 것을 빼고 줄곧 양심수들을 석방 및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특사에서 1백44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광복 50주년을 맞는 95년 8·15 특사에서 김선명(45년 복역) 씨 등 양심수 25명을 석방하는 등 몇차례 양심수 석방조치를 단행했으나, 전체 양심수에 비추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8·15특사에서 김종휘(울곡비리 관련), 안영모(동화은행비리 관련) 씨 등 11명을 대거 사면·복권하는 등 부패비리사범들에 대해선 오히려 관대한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5·6공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가 58명에 달하며, 정부출범 당시 5백여 명이던 양심수가 현재 9백80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한 사실 등은 야당총재 시절 "양심수 석방"을 부르짖던 김 대통령의 약속이 허울 뿐임을 드러내 왔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가 빠진 것을 규탄하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가협은 "은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화합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 등 5·6공 군사독재정권하의 악법과 제도로 피해를 당하거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

다 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9백여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완전한 5·6공 잔재청산을 재촉했다.

"남북 어린이를 살리자"

전교조, 8·15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14일 52주년 8·15를 맞아 "정부가 북핵살리기 운동과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남북의 청소년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북한 어린이 8만명이 아사

직전에 있고 80만명이 기아를 해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북핵실상을 바로 알리고 북핵살리기 운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민족주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과서 개편 등 교육내용 마련과 교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 마련을 부탁했다.

전·노 사면반대

부산지역 215명 성명

부산 민가협,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등 부산지역 7개 사회단체 소속 회원 2백15명은 13일 전·노 사면반대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림>

8월15일자 <인권하루소식>은 쉽니다

만화가 이동수작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 전망 노조전임자·근로조건 개선 합의

사장의 해의도파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이랜드 파업사태가 13일부터 노사 대표 각 3인의 교섭이 시작되므로써 타결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은 이랜드 투쟁지원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성규, 문대광)가 계획했던 밤배동 서울지방노동청 앞 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노동부의 조정으로 시작되었다.

13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 전임자문제는 회사측의 3명안과 조합측의 5.5명안이 조정을 통해 6명으로 잠정합의되었고,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 소개시간 보장 및 월요모임시 광고는 포기한다. 둘째, 비전임간부는 월 8시간·조합원 교육은 연 12시간으로 보장한다. 셋째, 아울렛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노사 양측은 14일 위의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고, 해고자 복직문제·토요일 오전근무·시간외 수당지급 문제 등을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난 뒤 단체협약에 조인할 예정이다.

노조창립 이래 단체협약 전무

이랜드 파업의 실질적 발단은 지난 4월 12일 회사측이 이랜드 노조가 결성된 94년에 체결한 임시협약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전임자 일방해지 공문을 통보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회사측은 시간외수당 지급 및 복지시설 설치 등 한시하고,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며, 노조 창립 4년이 넘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는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94년 당시 8백여 명(직원 천오백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2백 20여 명(직원 3천5백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이랜드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전임자 수, 신입사원 교육시 소개시간 보장, 조합활동의 보장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수당 지급 △아울렛 중계분회 근로조건 개선 및 약덕관리자(순학길 과장, 박영섭 중계동 아울렛 부지점장)의 인사이동 △1년 이상된

계약직 직원의 정직원화 △2달동안 미지급된 전임간부의 임금지급 및 파업 참가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취하 등을 요구하며 14일 현재 52일째 긴 파업을 벌여왔다.

홍윤경(30) 사무국장은 14일 회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당산 아울렛 지점으로 확대농성·본사 출근 관리투쟁·불매운동·항의 기도회·노동부앞 집회 등의 실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은통 전경들 세상이다.

전국의 대학가는 물론, 기차역·지하철 주변과 도심 한복판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검문검색이 진행되고 있다. 테러리스트가 입국한 것도 아니고, 무장군인이 탈영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단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의 명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불심검문은 명백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경들은 최소한의 법적절차(검문목적의 설명과 경찰 신분·소속 및 성명의 고지 등)조차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고, 가방과 핸드백을 강제로 뒤지고 있다. 검문에 응하지 않거나 대학생 신분인 드러날 경우엔 영장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하고, 뒤늦게 혐의가 없다며 슬그머니 풀어준다.

이 뿐만 아니다. 현재 경찰은 전국 각지의 대학을 벌집 쐬시듯 들쐬고 있다. 8월들어서만 연세대, 부산대, 단국대, 경북대, 충남대 등 곳곳이 흉역을 치렀으며, 심지어 홍익대에는 세 차례나 연이어 경찰이 투입됐다. 14일 새벽 부산대에 진입한 경찰들은 잠자고 있던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 무릎 꿇린 채, 전기봉과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소지품을 수색했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이 학교 신 아무개 씨를 연행해 가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엔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공안당국이 자리하고 있다. 공안부의 사령탑인 주선화 검사장은 허버드법대를 나온 일류 엘리트 출신이다. 남보다 많이 공부한 그지만, 합리와 상식은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가 주최하는 97평화통일민족대회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학생은 이 대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참석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 합법적으로 승인한 집회에 왜 대학생만 참여해서는 안되는지,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왜 대학생만 제한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내용은 최근 주 검사장을 좌장으로 하는 공안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도 있다. 양심을 자처하고 정의와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조차 공안당국의 광란에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에 침묵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에겐 인권이 없다.

<농성일지>

- 4월12일: 이랜드회사측 노조전임자 7명중 6명 해지 공문 발송
- 4월17일-5월 15일: 조합측의 단체 교섭 제의를 회사측이 번번히 거절
- 5월27일: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 6월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23일 조정 결렬)
- 6월15일: 결의대회 및 판매지부 아울렛 중계분회 결성대회
- 6월25일: 파업돌입(투표율79%, 찬성율88%)
- 6월28일: 97임단투 승리 및 노조발 실행동 분쇄 1차 결의대회
- 7월 5일: 2차 결의대회
- 7월7일: 텐트농성 시작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19 일(화)

제 9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기자가 회사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월간 <말>지 7월호에 실린 「봉건시대를 달리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글을 문제 삼아,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기자는 이 글을 통해 부당해고와 강제노동, 폭력테러 등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행위 및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전면고발했으며, 특히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 당한 김민주(가명) 씨 사건을 심층추적한 바 있다. 취재과정에서 사측의 미행을 받기도 했다는 김 기자는 "봉건적 노무관리를 중단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해명할 때만 노예공장, 교도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측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김 기자에게 20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18일 현재 소환장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기자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먼저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부터 처방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고발조치로 나온 것에 황당하고 비애감을 느낀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구독료 납부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다"고 말했다.

또한 김 기자는 고발되기 전에 한국타이어 인사팀장과 생산팀장으로부터 "회사방침이 고발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니, 반론기사를 써달라"는 회유를 받은 바도 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그러나, "소신과 양심 대로 쓴 기사였기 때문에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타이어측은 기사를 게재한 <말>지측에 대해선 현재까지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말>지의 김 아무개 기자는 "지금까지 혐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 기사게재에 책임이 있는 회사를 제쳐두고 기고자만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 조치가 개인협박용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후교구 단식농성 34일째

"용역강제 철폐" 촉구

새책소개

<빛장을 여는 사람들> (장간호) (비매품/ 문의: 521-5364)

여성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여성잡지

94년 12월 처음 시작된 여성 장애우 모임 '빛장을 여는 사람들'(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여성분과, 빛장)이 <빛장을 여는 사람들>을 펴냈다. 이 소책자는 비록 50여 쪽에 불과하지만 여성장애우란 특수층을 위한 최초의 여성잡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채은하(빛장 위원장) 씨는 발간 취지와 목표를 네가지로 밝혔다. 그것은 △여성장애우들의 현실과 문제를 동정이 아닌, 하나의 사실로 알리는 역할을 하며 △여론조사와 기초 연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겸비해 여성장애우의 문제를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하며 △여성장애우들의 연대와 배움의 장으로 자리하고 △세계 여성장애우와 단체들이 동향과 소식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있다.

자신도 장애우면서 다른 장애우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강복희(뇌성마비) 씨 탐방,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애환을 담백하게 그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담 등 여성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전문가 2명의 글을 통해 "여성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사회생활과 결혼생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사회생활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차별현황과 여성장애인지원 대책을 위한 노력과 활동 등을 위한 제언을 내용으로 한 오혜경(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과 결혼과 기존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분석한 성숙진(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의 글은 비장애인들에게 여성장애인이 겪어가는 이중고의 문제를 짚어보게 한다.

이밖에도 6월 중순 미국에서 열린 세계 장애여성 리더쉽포럼 참가기등이 실렸다. 잡지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현재 무크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

경찰에 구속된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구속수감된 박기호(38) 씨는 자신이 혐의와는 무관하며, 수사과정에서 '빨갱이 녀석'이라는 등의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인 박 씨는 지난 14일 '전농동 박순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차에 싣고 운반하던 중, 불심검문에 걸려 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경찰서로 이송된 뒤, 곧 구속됐다.

박 씨는 지난 6월 24일 전농동 철거민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농동 철거현장에는 가 본 적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수사기관의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다 경찰에 집단폭행당해 부상을 입은 이철용 씨의 간병인이었으며, 당시 이대부속 병원에 입원중인 이 씨를 경찰들이 강제후송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 바 있다.

한편, 박 씨가 구금되어 있는 노원경찰서에는 최명동(38) 씨 등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9명과 수원대 변 아무개 씨 등 10명도 구속수감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전농동 철거 과정에서 박순덕 씨를 숨지게 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새벽 전농동 철거지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전원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일 현장에서 연행됐다가 풀려난 오 아무개 씨는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동대문구청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선경건설·적준개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철탐을 세우려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 주요 공판 안내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등) 신건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제3차 개인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신건

▶20일(수)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한영진(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선고

주/간/인/권/호/름

(97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 11일(월)

천주교 1천7백여 명의 사제·수도자, 전·노 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밀입북(국보법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송유진(53) 씨 조사중이라고 밝혀

◆ 12일(화)

통계청 2/4분기 고용동향 발표, 취업기간이 1년미만 1개월이상 일용근로자 6.8% 증가한 반면 1년이상 상용근로자 2.0% 감소/이인호 주 판란드 대사등 2백4명,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5년제 복역중인 황인욱(31) 씨의 석방탄원서 제출/한총련 소속 11개 학생회 기자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13일(수)

유엔측 발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논의 합의도출 단계에 이르렀다고/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42개 사회단체, 백범 김구 선생묘역에서 매국노 이완용 재산물수와 안두희 처단자 박기서 석방추구 결의대회

◆ 14일(목)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범민화인비상대책위」, 만화가들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방침과 관련해 삼성동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운동 벌여/경남도, 학생지도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교사경찰제' 도입안 건의/문화방송 주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동, 8만7천여명 참가, 1억7천4백여만원의 성금 건립/「바른역사를 위한 국민연합」, 친일 매국노들 재산환수 운동과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기로/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대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마이니치신문) 2차 대전중 일본과 일본 점령지에 있었던 중립국 스위스 국민에 대해 일본군대와 경찰이 학살등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문서 발견

◆ 15일(금)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방재판소 하마다 지부, 일본 영해 침범 이유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 씨에 대한 공소 기각/'97 평화통일민족대회', 3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려/(뉴욕 타임즈) 미국의 96년 무기판매 23% 늘어난 113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무기판매고 318억달러 중 35.5% 차지/유엔 인권소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제6의제로 위안부 문제 채택돼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 예상/주한미군·국방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저장돼 있던 열화우라늄탄을 한국에 이송했다는 <마이니치신문> 보도와 관련해 한국배치 사실 부인

◆ 17일(일)

검찰,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마약·조직폭력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뇌물사건 등을 영장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법원에 전달키로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김 동 한(법과 인권소장, 광주여대 교수)

8·15는 광복절이고 국경일 인가?

엊그제 8월 15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 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침략주제만 바뀐 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빛을 되찾은 광복절로 명명하고 국가의 4대 경축일의 하나로 나아가 국경일 중 최고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날이 그렇게 기뻐할 만큼 민족적인가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리의 힘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면서 단순히 필박에서 해방되었다는 피상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환호만 할 것인가?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하고 한심한 자들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저 좋아만 하는 사이에 일제의 자리를, 포장만 달린 채 미국이 차지했고, 36년 뒤 다시 보자면 일본도 각 분야에 제정락을 완수한 지경이다. 일본관화회의 폭력·잔인성·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평화헌법을 전쟁을 인정하는 전쟁헌법으로 개헌 움직임, 전범을 기리는 신사 참배·위안부문제에 대한 적면하장격 여지 등등 변형된 식민 상태는 여전히 대 국경일이라니 누구의 경축일인가?

태극기를 몇 집이나 게양했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왜곡된 인식의 표상이다. 정말 아직도 멀었다. 굳이 8·15를 기념하려면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반쪽이지만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차원에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일을 더 경축해야 할 터인데 광복절로 겹쳐 희석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반쪽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민족정신도 꺾이기만 있고 알맹이가 빠진 지 이미 오래다. 독립운동가는 버림받고 천일 세력들은 훈장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직 시정되지 않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회복하여야 한다. 집권의 단맛에 빠져 역사의 매국노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는 곳곳에 산재한 인권모순의 완전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청산은 역사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사면제도는 전제시대의 잔재

이번 8·15엔 설로 끝났지만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설은 심심하면 터져 나온다. 왕이 전권을 행사하던 시대에 병주군 약주군 식의 사면제도가 민주시대에도 버젓이 살아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사례중 또 하나이다.

전두환·노태우 씨 두 사람이 우리의 80년대를 유린한 죄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이 휘두른 폭력의 후유증으로 오늘날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잊지 말자고 자진증언하고 있는 대표적 인 단체가 80년 해직언론인협회이

다. 이 단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최초로 백서를 발간하여 전·노의 인권유린을 증언하고 있다. 7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백서(「80년 5월의 민주언론」)는 언론에 국한된 것이지만 전·노의 폭력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단체들도 시대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전·노 사면설의 원천봉쇄와 연결되는 것이다. 전·노 사면은 국민의 가슴에 못을 하나 더 박는 셈이다.

대통령을 지냈으니 그만큼 했으면 됐다는 값싼 인정론은 아직도 민주와 인권의 참된 뜻을 모르거나 왜곡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 집벌들보다 더욱 철저한 형집행이 요구된다. 그들은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악랄했던 범죄자였을 뿐이다. 우리 헌정사에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곡된 동정심은 불식되어야 한다. 이 땅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못된 망나니들의 죄과를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전·노사면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말에서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전·노 시기의 숫자와 맞먹는 다니 역사의 발전론을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문민정부로 포장하여 여론을 왜곡시켜 자행하는 인권유린은 더욱 더 악랄하다. 전경과 최루탄 그리고 진압봉과 닭장차가 행사 때마다 지하철입구나 행사장 주변을 누비는 97년 8월 현재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나 민주정치, 민주사회 그리고 참다운 인권보장은 없다. 준전시 상태의 남북관계, 준전제군주시대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의 전횡, 준식민지로 전락한 우리사회 등등 이러한 결과는 모두 왜곡된 인식의 산물이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는 없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0 일(수)

제 9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농성 중인 친구에게 옷을 전해 주려 갔다가 연행된 한 여대생이 조사과정에서 발가벗기운 채 알몸조사를 받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과잉강제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여대생(21)은 지난 15일 새벽 0시 3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농성중인 조계사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 정문에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난 데모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친구에게 옷을 가져다 주려던 것이었고 말했지만, 경찰측은 농성을 하러간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 또 몸 수색을 한다며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여형사 1명이 속옷과 양말까지 다 벗기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연행 직후부터 오전 11시까지 조사를 쓴 뒤, 오후 3시까지 종로 일대를 끌려다니며 알리바이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16일 오후 8시에야 불구속 입건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차병지 변호사는 "농성 중인 사람도 아니고, 옷을 전달해 주려간 사람을 체포한 것 자체가 과잉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약 현행 법이나 긴급체포의 형식으로 체포했다 하더라도 묻거나 만져 보는 등 다른 수색방법이 있을 텐데도 옷을 벗기고 조사를 한 것은 지나친 수사"라고 말했다.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뺀 한총련 조계사 농성 9일째

지난 11일부터 19일 현재까지 한총련 소속 대학생 40여 명이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데, 경찰이 귀가학생까지 연행하고 있어 농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한총련 소속 대학생 54명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회와 외해책동 중단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권 퇴진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평화 통일민족대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원천봉쇄되고, 평화통일민족대회마저 대학생 참가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15일까지 예정되었던 농성은 연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측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방에서까지 식구들이 올라와 해산을 종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19일 오전 8시 한 여학생은 "밖에 엄

마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조계사 문밖으로 가까이 갔다가 들이닥친 전경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때 이 여학생의 연행을 막으려했던 대학생 3명도 함께 연행되었다.

경찰, 가족등원 해산종용

정하철(농성단 대표·전남대 조경학과 4) 씨는 "법당 내에는 10-20여 명의 사복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의사를 주장할 수도, 농성할 자유마저 없다.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껏 사회민주화를 위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당 내에서 노숙을 하며, 현재 선전전과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연행된 학생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농성할 예정이다.

대우조선노동자 직업병 무방비 노출 61% 중추신경장애 등 ... 발암성분 도장재 사용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이 발표한 대우조선 유기용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노동자 6백79명 중 60.8%가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 직업성 피부염 등의 직업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업장의 유기용제 농도가 허용농도의 최고 10배까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암성분이 포함된 도장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노·사 공동연구팀이 96년 5월부터 97년 6월까지 실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해마다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우조선측이 95년까지 매년 실시해온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타난 노동자 역시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민주금속연맹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금속연맹은 "이번 조사결과가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도장작업장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실시 △환경평가와 건강검진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제의 전면 개선 △부실 측정기관 조사 후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몰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35일째 명동성당 단식농성 중인 한국후포주 노조를 비롯해, 안산의 덕부진흥(사장 홍인표), 대구의 동산의료원(원장 박승복) 등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농성투쟁과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기본 생존조건인 고용·임금 문제와 폭력·구속 등 인권침해사태가 맞물리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덕부진흥 회사 앞 단식농성

덕부진흥의 경우, 이성권 노조위원장과 탁충남 노조 문화부장이 지난 18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덕부는 지난해부터 공장이전계획과 외주처리, 작업 배치전환 등에 따라 노조원들의 일거리 및 고용문제가 불거져왔으며, 노동자들은 수당의 감소에 따른 생계부담과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껴온 상황이었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측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해 왔으나, 회사측이 줄곧 이를 거부함으로써 극한투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올초 3백80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이미 70여 명은 생계부담 속에 자진 퇴사했으며, 회사측에 의해 경비원으로 고용된 용역직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용역강제 문제까지 더불어 제기되어 왔다(본지 1월8일자 참조).

동산의료원 단식농성 29일째

동산의료원에서도 19일 현재 44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강희철 노조위원장이 29일째, 해고자 권금자 씨가 2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산의료원의 농성은 병원측이 임금인상 교섭과정에서 93년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액 5천만원을 빌미로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조합 간부들을 형사고발한데서 야기되었다. 당초 노조측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14%의 임금인상과 병실 TV 무료시청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병원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해오다 최근 3%인상안을 가지고 교섭을 끌어왔다(본지 1월28일자 참조).

..... 주요 공판 안내

▶ 21일(목)
·김준범(출판물예외한명예훼손)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최재일(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 3부 선고

<한총련 사건> :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하균/이성현/최은진외2/최세규/박경민/김광희외1/강경태/김민수/최영일외4/최기해/김영태(특수공무집행지상등)
·하은경/이돈범외1(기차교통방해등)
·김기태외1/김은희외2/송하문(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북산 한달 이상 농성

이밖에도 마산시 중소기업체 (주)북산(사장 김항복)에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조치에 의해 노동자들이 생계와 신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조합원 26명은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7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산 1백억의 건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지난 6월 노동조합이 최초로 결성된 이후 한달만에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회사측의 폐업 조치 이후, 조합원들은 해고수당을 반납한 채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특히 12명의 병역특례노동자들은 3개월 내 취직이 안될 경우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편, 지난 8일 부평본사에서 농성 도중 이영원 강남지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던 대우자동차판매(사장 정해영)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9일부터 전국 8개 지부 2천5백여 조합원이 총파업 상쟁투쟁에 들어갔다.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소수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

19일 새벽 2시30분 파업 59일째를 맞는 이랜드 노조가 4년을 끌어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회사측은 장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파업기간중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3천5백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파업기간의 임금을 1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랜드 노조는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 합의안을 보면 당초 회사측이 아울렛을 분리하려던 입장에서 후퇴해 협약체결 당사자를 이랜드노조와 이랜드의 전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활동이나 인사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신설되는 진전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노조전임자 6명,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조합활동 부분에서 회사와 노조측은 △현장간부의 조합활동 월 8시간 확보 및 조합원 교육시간 연 12시간 확보 △조합 전임자 6명 등에 합의했다. 인사 부분에 있어 △조합간부 인사시 조합과 합의 △조합원 배치전환시 15일 전 본인과 합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시 60일전에 조합과 협의, 고용 및 노조 승계를 원칙으로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시 동일 근로조건으로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 등 노조가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울렛의 근로조건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 파업승리에 대해 흥윤경 사무국장은 "4년간 고차되어온 문제를 이번에는 기필코 깨겠다는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의 의지가 높았다. 파업참가자는 50여 명 밖에 안되는 소수였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기독교대책위원회의 도움이 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기독교대책위는 오는 21일 낮 12시 신촌 본점에서 노사화합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본지 8월16일자 참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1 일(목)

제 9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한총련 사냥엔 인권 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공안당국의 한총련 와해작전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소한의 법규정조차 무시하며 인권 유린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4일 이이무게 씨(여·26·하원감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쓴 뒤 정오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총련 조통위원회 소속, 수배자) 검거에 협조할 것을 종용당하며, 매일 한차례씩 경찰로부터 호출연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관적무집행법? 나 몰라라

이날 오전 7시10분경 이 씨는 직장 앞에서 자신의 신상명세(집주소·주민등록번호등)가 적힌 쪽지를 들이대며 '협조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을 받았다. 수사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을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했으나, 수사관들은 이를 묵살한 채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갔다. 이때 수사관들은 이 씨와 그 가족에게 경찰관 신분과 동행장소, 목적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 법(경찰관적무집행법)규정도 완전히 무시했다. 강제연행된 후 이 씨는 호출기 추적

구독료 납부 하겠습니까?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을 통해 수사관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호출기는 이 씨의 이름으로 등록해 남자친구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씨가 호출기를 제공한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가택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은 오전 7시30분 가택수색을 통해 대증문예단체 '신바람'의 회지(17-19호)와 민중가요를 수록한 노래책을 압수한 뒤, "민중가요책만으로도 이적표현물 소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몇 달 살게 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이 씨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알아들시다! 경찰관적무집행법>

-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 장소·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했다.

“애인에게 호출하라”

이 씨는 대공분실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신바람의 창립목적, 조직체계,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들은 “한번 봐준다”며 이 씨에게 “신바람에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또한 수사관들은 수배자인 남자친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애인이라 같이 갔나”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남자친구의 호출기에 녹음해서 지금 만나자고 약속해라. 너 모르게 잡겠다’고 강요한 뒤 수사관 8명의 동행아래 인사동 찻집에서 잠복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신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 씨에게 호출번호를 적어준 뒤, 그를 풀어 줬다.

제2회 인권영화제 와제작 쇼아 <SHOAH>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스는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러나 플로드 랑즈만 감독의 <쇼아>는 현장에서 살아 남은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참혹한 역사의 굴곡을 일깨워준다. 아니, 오히려 이 영화는 그 동안 머리에 담고 있던 지식을 마음과 육신으로 체험하게 해 줌으로써 유대인 학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11년이라는 긴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충격적인 영화 <SHOAH>(‘쇼아’-히브리어로 ‘절멸·파괴’이라는 뜻)는 아우슈비츠나 트레블링카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전 나치스 친위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인터뷰가 9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대장편 다큐멘터리이다. 85년 세상에 나온 이 영화는 미국에서 아침 9시부터 9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방영됐을 때의 시청자 수가 8백만 명에 이르렀을 만큼 유럽과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86년 베를린 영화제 갈리加里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나치학살의 생생한 증언

우리는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입은 상처를 생생하게 체험한다. 지금은 신록으로 뒤덮인 곳이지만 과거엔 유대인 시체를 쓸어놓곤 했던 구덩이, 가스실로 수십만명을 몰아가던 ‘담프’ (강제수용소 내의 열차 플랫폼),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인 주인 없는 여행가방 이야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는 계속된다. 열차의 도착하고, 화물차의 문이 열리자 무너져 쏟아지는 시체들, 무서운 갈증, 공포와 마구 뒤섞인 무지·탈의·소독·가스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야기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유대인 생존자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되풀이된 살육 과정을 차갑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트레블링카의 SS 하사관, 남의 일이란 듯이 냉담하게 수용소 내의 일을 이야기하는 폴란드 농민들...

시몬느 드 보봐르는 <쇼아>를 “현장과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이라는 놀랍게도 절악된 수단을 가지고 과거를 훌륭히 재 창조해낸 완전한 걸작”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끝없이 뻗어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재 창조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집단학살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가 아닐는지...

·매주 두차례 인권영화제 상영작이 소개됩니다(편집자주)

인권영화제 후원 바랍니다

- 개인구좌는 1만원 이상, 단체후원은 5만원 이상입니다
- 후원구좌:국민은행 822-21-0276-824/농협 033-02-119388
- 제일은행 110-20-342272(이상 예금주 서준식)
- 문의: 741-2407, 741-5363(김정아)

“법이 처벌해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어” 한국타이어 고발 기자 경찰 소환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진(대전국도일보) 기자가 경찰에 소환됐다(본지 8월19일자 참조).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소환된 김 기자는 월간 <말> 7월호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취재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받았다. 이번 수사는 한국타이어측이 지난 4일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며, 고발장의 요지는 “김 기자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기자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공정하게 쓴 기사이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을 묻어둔다면 언론이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기사는 확인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아직 회사(국도일보)측에 고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기고한 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혼자서 싸운다 해도 외롭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곧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2차 소환을 받게 되는 김 기자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쓴 글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당당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 주요 공판 안내

- ▶ 22일(금)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이교관 외1(사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0단독 525호 속행

- <한총련 사건>
- 김태엽(특수공무집행방해등)
- 정하준/김병주외1/최지희외2/김소영/김봉민/박종윤외2/김선우외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김유상/강호준외1/이금일의1/박은주/김광희/최주철/신종봉외1/정화숙/황송일/김창현/국희숙/권현상/김선우외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박성광/이경훈/김범기(집시법)
- 이상 오전 10시 합의 23부 311호 선고
- 정세영/박윤경/안은경(특수공무집행방해등)
- 김명규(가차교통방해등)
- 우현희외2/곽정희외1/손재무외1/나채현/김명철/주자현/봉미숙/유종은/이영석/김남윤외1(특수공무방해치상등)
- 김용현(집시법 위반)
- 이상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2 일(금)

제 9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됐건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지난달 25일 발생했던 전농동 강제철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용역회사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되어 가도록 화재 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 채, 오히려 피해 주민과 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구속자는 15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엔 화재 당시 부상을 당한 환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화재 발생 당일 농성자들에게 음료수를 전달하려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화를 당했다는 김재열(48·청량1동 주민) 씨는 당시 입은 부상 때문에 경희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20일 오전 병실에서 경찰에 연행당했다. 사건발생 직후 곧바로 구속된 김명식(전농동 주민) 씨도 여전히 곱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중이지만, 기초적인 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편향수사 못지 않게 철거민측의 대응 양상도 사태 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측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방화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 등의 투쟁을 벌여왔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진상조사 작업과 민·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힘으로만 해결하면 결국 계지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가수용시설 합의서 파기'건은 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농동 사건의 발단이 된 가수용시설 합의서는 지난 96년 5월 3일 선경건설과 용역회사인 적준토건, 재개발조합, 철거민대책위원회 등 4자가 합의 공증한 것으로, 96년 5월까지 주민 52세대분의 가수용시설을 짓고 그해 9월까지 입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측도 이 합의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선경건설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97년 6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강제철거 계고장이 발부됨에 따라, 주민들은 6월 23일부터 철담망루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7월 25일 박순덕 씨의 사망을 가져온 강제철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2백여명은 21일 을지로 선경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가지면서 "방화책임자의 처벌"등을 거듭 촉구했다.

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듯

범민련 부의장 정동근(기독교노동자총연맹 의장, 새벽교회 집사) 씨가 21일 낮 1시경 신촌 부근에서 안기부 인천분실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정 씨는 이날 낮 12시 이랜드노조교육대책위 주최로 열린 이랜드 노사화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것이다.

윤인중(인천 새벽교회) 목사는 "정동근 씨는 95년 9월부터 범민련과 통일사업과 관련해 비공식으로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행지후 윤 목사는 신원 확인을 위해 안기부 인천분실로 문의했으나 "정동근 씨는 장기수배를 받아왔고,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와 동정

-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 보고대회
 - 때: 25일(월) 오후2-4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단(3411-1502, 459-2143)
- 우리땅 미군기지퇴찾기전국공동대책위 발족식
 - 때: 22일(금) 오전9시30분
 - 곳: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 주최: 우리땅 미군기지퇴찾기 전국공동대책위
-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인권활동가 교육
 - 때: 23일(토) 오후6-10시 24일(일) 오전9시-오후1시
 - 곳: 숲정이성지 사회관 교육실(문의: 0652-76-1253)
 - 내용: 인권의 개념과 서로 다른 시각(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국내인권현안과 쟁점(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후포구 단식농성 34일만에 고심 세계 2차 단식자 등 명동 농성 계속

한국후포구의 노·사가 20일부터 교섭을 시작함에 따라 운동단 노조위원장과 이승환 노조편집부장의 단식농성이 34일만에 끝났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2차로 단식에 합류한 이승진 문화부장, 윤복중 금속연맹경기남부지부 의장(전 후포구 노조위원장)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며, 노조원들의 명동성당 농성도 지속된다.

금속연맹과의 공동교섭을 거부해 오던 회사측은 20일 노조측과 단독으로 가진 협상에서 회사측에 대한 고소·고발의 취하를 교섭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노조측은 임금·단협안의 타결과 용역강제 철수가 이뤄진 뒤에 고발취하 문제를 언급하지는 입장을 전달했다.

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합동추모제 9월1일-7일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숨진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이번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추간"은 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열사의 거리' 선포 및 문화제 등으로 이어지며, 6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유기협, 추모단체연대회의 등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각계 각층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 인권영화제는 독점자본이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영화마니아들만의 잔치도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입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1구좌 5만원이며, 1구좌 이상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해설책자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이름과 주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41-2407, 741-5363)

후원구좌: 국민은행 822-21-0276-824
제일은행 110-20-342272
농협 033-02-119388(이상 예금주 서준식)

제2회 인권영화제 학제작 2편

호남호녀 好男胡女

《호남호녀》는 후 샤오시엔의 전작 《비정성시》(1988, 국내 개봉), 《희몽인생》(1993)을 잇는 대만 3부작의 완결편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대만 역사에서 백색테러라 알려진 1950년대로, 당시 대만사회는 정권의 폭압통치로 인해 많은 지식인들이 투옥되거나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다.

〈비정성시〉 〈희몽인생〉 잇는 대만 3부작

《호남호녀》는 '영화 속의 영화' 식을 취하고 있다. 리양칭이라는 젊은 여성 코미디언이 《호남호녀》라는 영화를 찍으려 한다.

그 내용은 일본점령기 동안 대만의 은신처에서 내란죄로 체포되기까지 공산주의편에서 싸웠던 두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리양 칭이 기록하는 과거와 기록자의 시점인 현재를 병행하게 오가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괴리는 점점 심해진다.

역사를 통찰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자신만의 스타일로 상상력을 표현해 왔던 감독은 한 인물의 개인사에 전체 역사를 겹쳐놓은 구성방식으로 대만의 역사와 현재를 살아가는 대만인들의 관계와 정체성을 되묻고 있다.

- 대만·1995년·후 샤오시엔 감독·108분·컬러·극영화-

루치아 Lucia

현대 쿠바 영화의 대표작으로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만나게 될 20여 편의 작품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작품.

'루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주인공으로 3편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 영화는 쿠바 역사에서 해방 투쟁의 주요한 세 시기를 다루고 있다.

감독은 각 에피소드의 시대와 주제에 따라 영화의 스타일을 바꾸어 가는데, 1890년대의 이야기는 서사적 멜로드라마로, 1930년대에는 복고풍의 화면으로, 그리고 혁명 이후 1960년대의 쿠바는 경쾌한 코미디로 그려내고 있다.

마르크시스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 급진적 영화이며, 혁명후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풍자한 페미니스트 영화로 쿠바의 역사를 인권적·여성적 측면에서 보게 한다. 또한 다채로운 영화어법을 구사한 1960년대 진보적 영화의 성과로, 현대 영화의 교본으로 불린다.

- 쿠바·1969년·움베르토 솔라드 감독·161분·극영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군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한총련 외곽에 나선 당국의 과잉 수사가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성군관대학교 수련장을 급습해 이 학교 총학생회장 정시철(정외과 94) 씨를 연행했다. 이 수련회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측의 지원 아래 열리는 공개 행사로서, 정 씨는 한총련 탈퇴 거부로 인해 수배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정·사북 경찰 20여 명이 수련장을 급습해 정 씨를 연행하자 물불이름 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 경찰과 학생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 일부 학생이 경찰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이 권총을 들어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정재(울전교정 96학번) 씨는 "지위가 높아보이는 한 형사가 '말 안 들으면 썩 버려'라고 말했으며, 잠시후 내 이마에 총부리를 갖다 댔다"고 밝혔다. 또한 급작스런 연행에 항의하던 학생과 직원 한 명의 안경이 깨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당시 수련장에 파견됐던 학생과 직원들은 경찰 책임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은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 탈퇴만 하면 풀어 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22일 새벽 4시경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및 전주경찰 5백여 명이 총학생회 사무실 및 신문사, 방송국 등 각 건물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학생 36명을 연행해갔다. 연행자들 가운데는 정성태(인문대 학생회장) 씨 등 수배자 4명 외에도 신문사 기자, 테니스 및 바둑 동아리 회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 오 아무개 씨는 "수배자들이 검거된 공대 건물 옥상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학교직원들이 이를 서둘러 씻어 버렸다"고 밝혔다. 목포대 총학생회는 이날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가졌다.

"노동자 생존권 압살"

현재 판결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과산신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

고 있는 만6천여명 노동자의 총 체불

임금 1천5백92억원중 48%를 차지하는 퇴직금 7백31억여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땅되찾기 전국공대위 출범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촉구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우리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단일한 전국조직 아래 벌어지게 되었다.

서울, 인천, 대구, 평택 등 전국 11개 지역의 우리땅되찾기 운동단체들과 녹색연합, 전국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22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병수 의정부시민공장 사무국장은 "각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대응해오던 미군기지 문제를 전국조직을 통해 단일하고 상시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족식에는 니시요 박사, 시라마쓰 도쿄 사회운동가 등 오끼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온 일본인 20명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일본인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135차 금요시위에 참가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열화우라늄탄(저준위 핵무기)의 한국 반입을 규탄하고,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한일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발족식에 앞서 21일 우리땅되찾기 공대위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안(소개 의원, 김근태)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사용에 임대료를 징수하고 그 사용 기한을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범선언문 2면>

<출범 선언문>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를 시외곽이나 시골로 이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만은 안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징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미군이 현재 안 쓰고 있는 기지를 담당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필리핀이나 호주처럼 하자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 오끼나와처럼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듣는다. 그들은 분단되지도 않았고, 동족끼리 전쟁을 한 경험도 없다는 것이다.

맞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다. 유럽에서 전범국인 독일을 나눠 가진 승전국들이 아시아에서는 역시 전범국인 일본을 나눠 갖지 않고 우리나라를 나눠 가졌다. 승전국 미국의 감시를 받는 전범국 일본의 미군기지도 임대기간과 임대료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기한이다. 통일 후에도 주둔하겠단다. 아니, 주둔해야 된단다.

그러나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다.

독도가 우리땅인 것처럼, 미군기지도 분명 우리땅이다. 불났을 때 꺼 주고, 도둑도 지켜 주는 일은 분명히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가 집에 들어와 어머니, 아내나 딸을 겁탈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온갖 미군범죄! 공짜로 쓰는 1억평의 미군기지! 그런 미군기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잠깐이라도 사용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이따금씩 인상에 주어야 한다.

공짜로 집 한 채를 빌려 주었다가, 밤 한 칸이 필요해서 쓰자니까 방세를 내라는 격이다.

평주인도 모르게 국가가 미군에게 쓰라고 준 땅이 시 전체 면적의 51%가

넘는 곳도 있다. 길도 못내고, 도시개발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은 너무나 많다. 소음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도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한다. 이래서는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미군기지 반환운동"이나 "미군기지 되찾기"라고 부른다.

전국에는 96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그 가운데 11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그 11지역의 미군기지 반환운동 지도자들과 미군기지의 환경과 폐를 막기 위해 애쓰는 녹색환경운동의 지도자들, 미군범죄를 뿌리 뽑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름하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 이름으로 우리는 주인된 권리의 극히 일부분을 되찾았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만세!

97년 8월 22일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연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터는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아무런 통로를 갖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을 이루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센터는 또 "한대연 지명자는 헌

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뚜렷한 소신과 용기를 결하고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로 주로 이루어진 현재의 헌재 구성으로 볼 때 이번 지명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무난하고 흠없는 법관생활을 해 온 사람"이라고 평했다.

헌재 재판관 보수성향 일색
사법센터는 한대연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노동관계 성향에 대해 "논리정연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일반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연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 서유서대필사건의 미결수 강기훈 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처분에 대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효력정지기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한달 전인 92년 6월 16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세학 부장판사)는 미결수의 수감 장소를 임의적으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대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1천명 서명 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선주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신한국당 의원 대한 로비작업 등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한타 '올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해소송 철회

95년 노조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이후 폭력테러, 부당해고, 성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한국타이어(사장 흥건희)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위원회」(위원장 이성광)와 회사측이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 대상자 7명 중 윤보희 씨 등 3명은 충청권 내에 위치한 계열사에, 김진종 씨 등 4명은 충청권 이외 지역 계열사에 10월중으로 복직시키며 △복직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손해철회 및 노사 양측이 현재 계류중인 진정, 고소, 고발건에 대해 취하하며 △단식농성자에 한해 입원치료비와 개인별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미복직자에 대해 회사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복직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의서 아닌 항복문서
이에 박희태(한국타이어노조민주화추진위 조직국장, 복직대상자) 씨는 "합의서가 아닌 항복문서"라고 딱잘라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1)본 합의서에 서명날인 후 복직 대상자 및 미복

이번주 <인권시평>은 필자 사정으로 쉽니다. 9월부터는 집필자가 교체되어 격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직 대상자 중 누구라도 본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농성·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처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 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박 씨는 "이는 해고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조생존을 맞바꿔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직자 중 4명이 서울·부산·춘천 등 생활권 이외 지역으로 배치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계열사로 배치될 거면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타측, 취재기자 고발
한편 한국타이어의 인권 유린을 기사화한 김동진(국도일보) 기자가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6일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판결 백지화 촉구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 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 낮 12시 서울

역 광장에서 '퇴직금 우선 변제위헌 판결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를 연다.

또한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한국여성노동자회의(대표 이철순)·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갑자 등)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현재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전·노사면 저지 캠페인 참가대학생 불법연행

부산 민가협·기독교인권위원회 등은 지난 22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전·노 사면저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2차 캠페인에서 부경총련 학생 불법·폭력 연행된 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주최측은 이날 캠페인은 합법적인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진압 경찰들은 '캠페인장에 학생들이 한데 모였다'는 이유로 부경총련 학생 30여 명을 포위한 채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동아대, 부산대 등 학생 6명을 무자비하게 연행했다고 밝혔다.

명성 평신도회측 텐트철거 이승진씨 단식농성 16일째

7월 16일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한국후포구 명동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현재 이승진 문화부장이 1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25일 오후 8시 40분 경 명동성당 평신도회 회원 20여 명이 몰려와 '상임위원회 결정'이라며 텐트를 철거하는 바람에 피약별 속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후포구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장애여성들이여 자신의 목소리를 갖자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 보고대회

장애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국제장애여성리더쉽포럼 참가 보고대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1부 북경세계여성대회 장애여성활동 비디오 상영과 세계장애지도자 연수보고에 이어 2부는 참가단의 참관기 그리고 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국제 장애여성 지도자 연수'와 '국제 장애여성 리더쉽 포럼'은 지난 6월 1~20일까지 미국 오래건 주 유진 시와 워싱턴디씨에서 열렸으며, 이 행사에는 82개국 6백여 명의 장애여성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장애여성 관련 행동강령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고 전세계적 장애여성의 네트워크 마련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었다. 국내에서는 「빛장을 여는 사람들」 등 13명이 참가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국제 행사기간 동안 전세계 장애여성들과 공유했던 내용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여성의 제반 문제점을 함께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한국 장애여성의 자기 목소리의 주인공을 위하여"라는 성명발표를 통해, 한국 장애여성과 여아들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보장과 모든 일상 결정에 있어 선택의 자유 보장 △양질의 교육 보장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 △적절한 의료서비스 실시 △인론과 매스미디어는 장애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26일 (화)
 - <한총련 사건>
 - 김광수/박관조(국보법)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최영철(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 10:00 합의23부 319호 선고
 - <일반사건>
 - 박용모(진관소남, 국보법) 오후 4시 3부 303호 속행
 - 최옥철외1(공직선거법위반) 오후 2시 10부 403호 선고
 - 최인기/김태윤/정영훈(국보법등)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이선정/김양남(국보법) 오후 3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유덕상의외6(한국통신, 업무방해등) 오후 2시 3단독 317호 속행
 - 김진성(국보법) 오후 2시 7단독 523호 선고
 - 이시영(알선뇌물수수) 오전 10시 11단독 526호 선고
 - 박계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문원주의외1(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주간/인권/호/름 (97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 ◆ 18일(월)
 - 야권, 오익제 씨의 월북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국회정보위원회 공개회의 소집 요구/민주노총·전국연합 등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승리 21(가칭)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개최/서준영 제네바 주재 대사, 유엔 인권소위에서 일본정부에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 촉구/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재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조사 뒤 20일 훈방 조치
- ◆ 19일(화)
 -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우조선 도장노동자 중 20% 뇌기능 손상 등 직업병 증세 보여/정부, 내년 '학교폭력예방 및 방지법' 제정예정/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짓고 자택 압수수색 실시/미국 최대 수화물 택배사인 유니타이트 파슬 서비스와 전미트럭운전자조합, 15일 동안 계속된 파업종식시킬 잠정합의 도출/세계식량계획, 금주 내 북한 4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 ◆ 20일(수)
 - 황도연 현재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서울고법원장 지명 예정/국민회의, 정영근·강삼재·이시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 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조현재(24·인천교대 4 재적) 씨 등 인천교대생 13명 구속키로/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민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 21일(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 국가소유의 땅 80여 평을 자신의 집마당으로 사용해 온 유아무게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변정수 전 현재재판관 등, 정부가 전·노 두 대통령 등 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14명의 훈장을 4개월째 박탈하지 않아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 제출
- ◆ 22일(금)
 - 국민회의, 김시복 안기부장 특보 안기부법상의 정치권 여금지죄 혐의로 형사고발 검토/국내 30대 그룹 하반기 총채용 규모 96년보다 12.6~13.2% 감소/서울지법 형사 12단독 박정현 판사, 성희롱 사실을 학교측에 진정한 여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징유 2년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 죽이기’에 맞서 투쟁 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사업장 사태해결 촉구대회’에서는 그간 노조탄압, 전임자축소, 고용안정, 완전월급제정취를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여온 각 사업장 노동자들 5백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정부, 노동법 개정 완전 무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과 해고 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고 노동자의 살 길을 개척해서 총력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조폐공사노조, 민주택시연맹, 삼미특수강노조 등의 장기 파업 투쟁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지난 3월 총파업 결과, 여야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창남(삼미특수강 노조) 위원장은

“26일 현재 1백56일째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포철측은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포철의 ‘위장정리해고’ 사태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 땅 봉급자 모두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폐공사, 택시연맹 등 계속 투쟁 이밖에도 조폐공사 노조는 조폐공사(사장 민태형)측의 일방적인 노조 전임자 축소에 항의하며 현재 철야농성 1백60일, 파업 7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전임자 축소문제는 지난 3월 13일 통과된 노동법에서 5년간 유예를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민주택시연맹이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법으로 9월 1일부터 완전월급제 시행을 약속하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현재 재판관 총사퇴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현재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을 백지화하고, 현재 재판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생존권을 보장할 것 △일본 기업 후교꾸는 용역강제를 즉각 철폐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 △고용불

노동자들의 단식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일 현재 덕부진흥노조 이성권 위원장과 탁충남 문화부장이 단식 9일째, 한국후포주 이승진 문화부장이 2차단식 17일째 접어들었으며, 두 사업장 모두 정리해고 철폐와 용역강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도 강화철 위원장, 해고자 권금자씨 그리고 이상춘 병노련 부위원장이 노조 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35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1997년 8월 27 일(수)

제 9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 획책하는 한국전기조차 사용자는 정리해고 음모를 철폐할 것 등을 비롯해 조폐공사 민태영 사장의 즉각 구속과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를 즉각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판결 백지화 촉구 국민승리 21(가칭)

「국민승리 21(가칭) 추진위원회」(대표 이창복, 권영길)는 26일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이 노동법의 취지를 전면 부인할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노총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현재 결정 백지화 작업을 위한 여론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관련단체 국고지원 50% 증액 전국연합 “대선 앞둔 의도적 편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재경원이 밝힌 내년 예산편성 잠정안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50% 증액된대 대해 26일 즉각 철폐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정부의 관련단체 국고지원이 1백10억원에서 1백65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편향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등 혐의

26일 오전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서상철(회사원) 씨를 비롯한 이경원(청년회 전회장), 기봉설(청년회 노래반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 등은 각각 오전 8시 경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경찰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청년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단체주소록·지역단체 회의록·책·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해 갔다.

안산 민주청년회는 91년 창립되었으며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현재 회원은 20-30여 명. 올해 들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반대투쟁과 8월 통일행사 참가, 지역시민들과 만나기 운동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제2회 인권영화제 ‘이동’ 영화 2편

<눈물의 사슬>

영국·토니 스트라스버그 감독·52분·컬러·다큐멘터리 이 작품은 1980년대 모잠비크와 앙골라 내전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어린이들에게 카메라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이들 나라는 다시 내전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 <눈물의 사슬>은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상황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은 외상뿐만 아니라 악몽과 자아이상현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오직 전쟁밖에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어린이들은 심각한 경우 인성마저 파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는 전쟁의 가장 처참한 희생자인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유년을 가슴 아파한다.

<히틀러와 아브라함>

프랑스·케서린 델리에 감독·26분·흑백·다큐멘터리 “내 나이는 11살이고 내 이름은 히틀러 킬러입니다. 이 이름은 전쟁중에 썼던 이름이지요. 저의 진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베리아에서 싸우고 있는 6천명의 어린이 병사 중 한 명의 이름이다. 아브라함같은 어린 아이들을 병사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무 살이 넘으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없단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어린 소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모르고 살인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상태라서 더 용감하게(?) 싸우고 어떤 잔인한 명령에도 복종한다고 한다. 11살의 아브라함은 이미 1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영화는 아브라함에게 잔인한 기억을 남긴 전쟁을 고발한다.

서울국제노동자미디어 발족식 국내 노동운동의 정보화 앞당기고자

진보진영에서 정보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서울 국제 노동자미디어(Seoul International Labor Media) 97’이 노동자대회에 맞추어 11월 10일에서 12일까지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 노동정책정보센터(대표 노회찬) 등 7단체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이를 공식화했다.

참세상 대표 김형준 씨는 “올해 초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국제연대활동과 미디어 활용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전파하고 각국의 발전 사례를 교류함으로써, 국내 노동운동의 정보화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행사의의를 밝혔다.

‘서울 국제 노동자미디어’는 ‘노동운동과 미디어: 노동자, 정보기술 그리고 연대’란 주제로 열리게 되며 ▲노동운동과 정보화 ▲새로운 매체의 개발과 확산 ▲노동자영상운동 ▲LaborNet운동의 성과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등을 쟁점으로 갖고 회의 및 각국의 사례발표, 국제노동영화제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879-0871)

.....주요 공판 안내

- ▶27일 (수)
 - 김수환외3 (특가법위반) 오후 3시30분 2부 302호 속행
 - 이철우외2 (특가법위반) 오후 4시 2부 302호 속행
 - 홍인길외9 (특가법) 오후 2시 4부 317호 속행
 - 허필수의1 (뇌물공여등)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 신승우 (국보법) 오전 10시 1부 1부 418호 선고
 - 김달화 (법호사법위반) 오후 4시 3부 421호 속행
 - 하정호외3 (업무상과실치사) 오후 2시 1단독 519호 속행
 - 강병식 (국보법) 오전 10시 6단독 522호 선고
- ▶28일 (목)
 - 김기순 (살인등) 오후 4시 5부 404호 속행
 - 정한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오후 10시 합의 23부 319호 선고
 - 홍석범 (국보법) 오후 2시 합의 23부 319호 선고
 - 최예경 (국보법) 오후 2시 319호 선고
 - 한재현/홍성이 (한총련 관련, 국보법) 오후 2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29일 (금)
 - 상춘식 (특가법위반) 오후 2시 4부 403호 속행
 - 이영구 (배임수재) 오전 10시 6단독 522호 선고
 - 김기영외3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오후 2시 합의30부 318호 속행
 - 김홍수의1 (조세법처벌법위반등)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문영태 (한총련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8 일(목)

제 9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 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

수원지역 직장인 통일단체인 '희망아리'(회장 안대성)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8월초부터 이 단체 사무실 부근에서 감시를 벌이더니 드디어는 회원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사장을 만나는 등 협박을 가했고 결국 한 회원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20일 박해경(24·건설회사 근무, 희망아리 회원) 씨는 퇴근 시간 무렵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형사 3명으로부터 학교 후배 동향과 수배중인 학교 선배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사들의 질문은 학교에서 '희망아리'로 옮겨갔다. 결국 "얼마 전 매탄아파트에 간 것은 불법유인물(범민족대회 관련)을 뿌리러 간 것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남편과 함께 매탄아파트에 사는 후배를 만나러간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같은 날 그녀의 남편 이창주(26·일용직 노동자) 씨에게도 역시 형사들이 찾아갔다.

"불법유인물 배포한 적 없다"

그뒤 몇 차례 박 씨의 회사로 형사들이 찾아왔으며, 23일에는 이신의(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형사가 방문해 박 씨는 만나지도 않고 사장실로 들어가 30-40여 분간 면담을 가졌는데, "증거를 잡고 있는데 박 씨가 오리발을 내민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27일 회사측은 박 씨에게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박 씨 등이 졸업한 학교에 찾아가 학적부를 떼고 후배들을 만나 "박 씨는 빨갱이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박 씨들에게 "끝까지 부인하면 사생활은 물론, 취지도 못하게 할 거다. 또 남편 집에 전화를 걸어 당신네 며느리(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린 상태임) 사람이 빨갱이라고 말하겠다"며 온갖 협박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아리 회원 근황 파악

이밖에도 희망아리 회원 강숙경(23·회사원) 씨가 미행을 당했으며, 형사들

은 희망아리 회원들의 주소록은 물론 최근 동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잠복근무를 하면서 희망아리를 찾아온 외부 사람들까지도 미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대성 씨는 "안산 민주청년회를 포함해 희망아리 등을 한데 엮으려다 회원들이 완강하게 부인하니, 일단 안산을 먼저 친 것 같다"며 지역단체들에 대한 공안몰이를 우려했다.

희망아리는 96년 8월 15일 창립한 수원지역 민주청년단체로, 회원은 3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년간 북녘동포돕기, 통일운동, 수원통일한마당 참가, 체육대회 등을 지역 단체들과 함께 벌여왔다.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김진성(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 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되어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마저 강력하게 부인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김 씨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책중 '대중운동세미나'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 '근대조선역사' 3권과 동생 김진웅 씨의 주민등록증 번호 및 호출기를 외대 후배 박상화 씨들에게 제공한 점을 들

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 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풍물방은 전교조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공간으로 압수된 책자는 본인의 것도 아니고, 그 책이 풍물방에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94년 당시 인공기 계양사건으로 후배 박상화 씨가 수배중인 것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씨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어, 안기부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초경찰서에 유치되기까지 처음에는 계속 잠을 자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한총련 배후조종자임을 자백하라" 등의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수사관들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승문 판사는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관 2명 중 이대식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2시 523호 법정

여기 보따리를 꾸리는 한 가족이 있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온갖 불행을 겪으며 살아온 이 가족은 이곳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 가족에게 물려서거나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3명의 어른과 이들의 배우자, 늙은 어머니와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어린자녀를 거느린 이 가족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6명의 어른들이 모였다. 어떤 나라에 정착하고 싶은가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눠보려 했다.

첫번째 사람이 말했다. "모든 건 문에 달린 거야. 우리 자신은 우리가 돌볼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 희망사망 따윈 얘기하지도 말자구."

두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운이 좋을 수도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안락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이야. 그것이면 족해."

"삶의 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로 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우리는 우리만의 말을 계속 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애들에게 우리들만의 특별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단구" 세번째 사람이 말했다.

"물론이지,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과 문화야. 우리랑 외모가 가장 비슷한 사람들, 생활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자. 그러면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테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네번째 사람의 말이었다.

다섯번째 사람이 나섰다. "모두가 맞는 말인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통을 보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만 돼. 우리가 선택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해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상당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이야."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 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권력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한 지배를 확신할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이들 6명은 늙은 어머니 앞으로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지닌 힘을 가장 잘 펼쳐낼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이 아이가 충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갓 태어난 손녀딸을 안고 있었다. 여섯자녀의 얘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그 깊고 깊은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애들아, 이 아이가 지닌 힘을 가장 잘 펼쳐낼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이 아이가 충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아이의 인성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육일 게다. '인권'에 기초한 교육, '인권'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교육, '인권'에 의해 계획되고 풍부해지는 교육 말이다."

할머니 품속의 아이가 이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동의를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계의 인권'을 통해 살펴본 주제들-사형, 고문, 실종, 인신매매, 기아, 선주민, 아동노동, 이주노동 등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눈앞

에 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내놓았다.

세계의 인권 현장

▲지난 10년간 6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명이 사형을 선고받거나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1백개국 이상에서 고문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60개국 이상에서 양심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1천4백만 아동이 매년 5살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있다. 1억 이상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굶어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1/4이상이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한다. 10억 이상 인구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고, 15억 인구가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3일마다 14만명의 5세 이하 아동이

기아와 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10억이 넘는 인구가 적절한 주택에서 살고 있지 못하고, 집없이 거리에서 떠돌며 사는 사람들이 1억에 달한다.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인구가 노예상태에 매여 노동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아동으로

동과 매춘, 구걸에 종사하고 있다. ▲1억3천만 아동이 초등학교를 받지 못하고 있다. 10억의 성인 인구가 문맹이고 이중 2/3가 여성이다. ▲1천4백만에서 1천7백만 인구가 난민으로, 1천2백만에서 2천4백만 인구가 국내 유민으로 떠돌며 살고 있다. 이들 인구의 80%를 여성과 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 나 군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GNP)의 15%에 달한다. 제3세계가 군사비로 쓰는 돈은 보건과 교육비로 쓰는 돈에 맞먹는다. 게다가 이들은 매년 수출소득의 20%정도를 외채를 갚는 데 써야만 한다.

앞에서 본 가족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보따리를 쌀 것과 새로운 선택을 재촉받고 있다. 빨리 이 악순환을 벗어나라고 말이다. <끝>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29 일(금)

제 95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으려나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공안당국의 부풀리기식 수사가 또한 차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죽이기'가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국군기무사는 친북이적단체인 '민족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을 발표하면서 대장 류석상(국어교육 4) 씨를 비롯해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공개학생활동 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안몰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본지 6월 13, 14, 21일자 참조).

하지만 24명의 구속자중 대장 류석상 씨등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행당시부터 '청년 조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부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 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구속된 홍석범(96년 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 금속공학 4)·최애경(95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전국연합 교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물도 이적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 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부 회의에 참가해 문제의 문건을 읽은 적은 있

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 주목돼

최애경 씨 역시 구국선봉대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95년 10월 열린 구국선봉대 청년 창립 총회에 참가한 적은 있으나 이는 총학생회 간부로서 다른 학내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또 96년 여름 총학생

회 주최로 열린 여름일꾼수련회에 청년 소속 조직원들이 몇몇 참여한 데 대해 "간부수련회는 총학생회·단체·과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매년 있는 행사로, 학생회 사업에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기관지인 '청년의 길' '새시대 새일꾼' 등은 미군철수·남북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 자주화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재현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9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있다. 또 최애경·홍석범 씨 재판증인으로 류석상·김성희(95년 총학생회 총학생회장)·권용찬(군복무중, 통계 92) 씨 등이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3시 319호 법정

새책소개 <1996년도 인권보고서>(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문민정부 집권 4년째를 평가하며 96년도 인권상황을 정리한 『제11집 대한변협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제1부 1996년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는 개혁의 완결과 민주화의 완성을 통한 새지평을 여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째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특징으로 ▲12·12, 5·18관련 자들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한 과거청산의 일단락 ▲인권정책의 부재 ▲인권영화제 개최 등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개 ▲잠수함 사건과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한 신매카시즘의 등장 등을 들었다.

결론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뚜렷한 인권정책 수립 ▲사회권 확대와 실현 ▲인권이론 정립과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제안했다.

제2부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 및 보건의 권리, 농어민·장애인·도시빈민의 권리, 여성·아동의 권리, 사법과 인권 등 각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또한 특집으로 12.12, 5.18재판의 의미와 과제, 김영삼정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총련사건과 인권, 노동법·안기부법 낚치기의 법리적 검토 등의 자료를 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간/비매품/ 문의: 전화:3476-4000)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병역면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군대에 강제 징집 후 의문사 당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유가족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상임의장 박정기, 유가협) 소속 의문사지회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명동성당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박정기 의장은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높은 병역면제율에 대한 항의와 강제 징집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농성에는 전국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원 등이 참여하며, 농성은 31일까지 계속된다.

유가협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사람들이 44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군대에서 의문사 당한 사람들은 20명에 이른다. 이들은 보안사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으며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 받는 '녹화사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성희, 김두환, 한영현 씨 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84년 녹화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학생운동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 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자가 있으나 군고위층이 연루된 관계로 군당국은 사건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사 착수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라도 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뛰어들었다. 유가족들은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88년 10월부터 89년 2월까지 농성을 벌였다. 또한 지난 94년에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김영삼 집권 말기에 이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에 유가협은 이러한

의문사를 당한 사건을 모두 정리·서류화하였다.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문사 당한 12명에 대한 재조사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중 84년 부산수산대에 재학중이던 허원근 씨 사건 등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조사 요구를 인정받았으나 아직까지 기초조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두거부

"성폭행피해 사건 아직 수사중"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기사보도(말지 7월호)와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27일 대전지검으로부터 2차 소환을 받았다.

대전 북부경찰서 조사계 박창호(경감)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김 기자는 "성폭행 피해당사자가 지난 7월 10일 청주지검에 재진정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쓴 기사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사건이 종결된 연후에야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국민승리21 논평

'국민승리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28일 논평을 통해 "사납금제의 철폐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변칙적인 택시경영을 막고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시를 즉각 시행할 것과 완전월급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지"

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9일부터 31일까지 충북괴산에서 제10차 중앙위원회와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국민후보추천과 하반기 '고용안정 및 경제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임금채권 보장 등 퇴직금문제 해결, 정리해고특별법, 근로자파견법 저지 등 고용안정과 제벌개혁 및 경영민주화,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등 사회개혁투쟁을 위한 하반기총력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행사와 동정

<제2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주요행사>

- 주최 : 전국연합, 민주노총,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월간 말 등
- 주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연대회의(742-318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764-1684)
- 제2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 때 : 9월 1일(월) 오후 2시 ·곳 : 조성만 거리(명동성당 앞)
-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
 - 때 : 9월 1일(월) 오후 5시 ·곳 : 가톨릭회관 3층(명동)
- 제 8회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 때 : 9월 6일(토) 오후 2시 ·곳 : 서대문 독립공원
- 제1기 통일시대 지방자치 아카데미 강좌
 - 때 : 9월 4일 ~10월 30일 매주 목 오후 7시
 - 주최 :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문의 ☎ 362-6086)
- 전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서는 "가고픈 산하"를 주제로 북한 풍경을 담은 98년 교회달력 판매한다. 한부 가격은 1,300원이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북녘동포돕기에 쓰여진다.
 - 접수마감은 10월 12일, 문의 ☎ 3672-0252(빛두레편집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8월 30 일(토)

제 9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27일 김수환 추기경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구 법무부장관에게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9) 씨의 사면과 형집행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김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사형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전재천 씨가 저지른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그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법무부장관은) 그의 형집행을 연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회·종교단체 탄원서 제출

그간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랐으며, 국내에서도 사회단체·천주교·불교·원불교 등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에서 영치품과 가족 입국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왔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근원을 바라보는 김 추기경의 시각 또한 그간 전재천 씨 등을 위해 정부에 탄원서와 모금활동을 벌여온 인권·종교단체들과 비슷하다. 즉 지난해 8월 11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은 사형수 전 씨 등 6명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재천 씨를 포함한 중국동포와 외국선원들은 혹독한 선상폭력에 항의하고 반항하다 하선을 요구하기에 이르지만 선장은 하선할 경우 경찰에 구속되어 중국에 돌아갈 수 없고, 보증금으로 맡긴 5만페(한화 5백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 말을 곧

이곧대로 믿은 피고인들은 중국사회에서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인 5만페를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될 뿐 아니라 다시는 선원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죽는 것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깊은 절망감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7월 26일 상고심에서 전재천 씨에게 사형, 백충범(28) 씨 등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 여론 오도” 전교조, 대선주자토론회 논평

전교조(위원장 김귀식)는 28일 동아일보와 KBS가 공동주최한 3당 후보초청 TV대토론회에서 김대중 국회의원의 총제가 ‘국민 여론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전교조는 우선 국민의 지지를 받은 후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 여론을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93년 4월 동아일보 공동국민여론조사결과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 국민의 52.5%가 찬성을 했고, 96년 9월 15개 시민·종교단체가 벌인 여론조사결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68.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만평이 매주 2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맛화가 이동수 씨가 하루소식 독자들에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창작자로서 항상 미흡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유든지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릴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남들처럼 때론 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아직(?) 내 몫이 아닌 듯하고, 갈고닦은 재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다. 근 1년여의 궁리 속에 찾은 지면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이다. 나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만화를 그리고, 그 만화를 보고 주변에서 좋아하고 용기를 얻는다면 더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제 사랑방 만평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가겠다. 재미있고 맘에 들면 마구마구 이뻐주시고, 재미없고 부족하면 가치없이 질타해주시기를 ...



또 만화가 이동수(38) 씨는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사무국장을 지내며, 현재 가톨릭신문, 경향잡지에 연재하며 한겨레문화센터 ‘꿈나무만화고실’ 등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분 총목차 (937-95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937	8/1	1	"한총련 문제 자율에 맡겨라", 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2	<자료> 한총련 개혁 보장을 위한 전북총련 성명서 /청량동 주민 길거리로, 가수용 시설 예고 없이 철거
938	8/2	1	공포를 몰고 다니는 철거용역...철거폭력 대명사 (주)적준/새책소개: 새로 나온 논문-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2	천리안 희망터, 전·노사면 반대 서명운동 전개/인권영화 11 <블레이드 러너>
939	8/5	1	경찰폭력 퇴치 기자도 한몫, 한겨레 취재기자 종로경찰서 고소/과거청산위, 3당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전·노사면 반대 결의대회
		2	"통신에도 몰래 카메라", 통신검열철폐 서명운동 계속/주간인권호름/주요공판안내
940	8/6	1	안기부 주사파 조작 의혹/명동 향린교회, 전·노 사면 반대 서명운동
		2	남북교류협력금 3천 4백억 북한지원 촉구, 97민족대회추진위 동포돕기 단식운동 전개/전국연합, 정략적 전·노 석방, 사면 반대/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일정표
		3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41	8/7	1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 사면' 반대... 과거청산위 신한국당사 앞 시위/박순덕 열사 비대위 규탄집회
		2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942	8/8	1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에서/<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2	<기자수첩>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전교조, "신임 교육장관 전교조 인정음"
943	8/9	1	북녘동포의 아픔을 함께하자, 동포돕기 순례단 발족식/만화가들과 함께 그리는 양심수 석방 캠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만화가와 양심수가 뭐가 다른가"
		2	후포꾸 농성장을 찾아 휴가도 반납한 채 농성장을 찾는 동지에/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에 방위근무 4개월 선고/행사와 동정
944	8/12	1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대북지원촉구 굶기운동, 신한국당 방문/5·18단체 전·노 사면 반대
		2	하루감옥을 다녀와서 (정범구 '시사자기' 진행자)/주간인권호름
		3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945	8/13	1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10월4일 열려/천주교 광주교구 "사면반대/아시아 인권워크숍 참가자 '전·노사면 반대' 국제연대 요구
		2	<특별기고> "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이동수)
946	8/14	1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자/"남북협력기금을 북한동포에게", 이창복·권영길 씨 등 단식/한국후포꾸 단식농성 29일째/행사와 동정
		2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전농3총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날/인권영화 12 <나쁜영화>
947	8/16	1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남북 어린이를 살리자", 전교조 성명/전·노사면반대, 부산지역 215명 성명
		2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기미, 노조전임자·근로조건개선 합의/<기자수첩> 대학생엔 인권이 없다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분 총목차 (937-957호)

호	월일	번	기 사 제 목
948	8/19	1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한국후포주 단식농성 34일째, "용역강패 철수" 촉구/새책소개- [빛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여성잡지
		2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전농동 책임규명 요구 철거민 10명도 구속/주요공판안내/주간인 권흐름
		3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반인권의 주범(김동한 광주여대 교수)
949	8/20	1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조사·집시법 적용/대우조선노동자 직업병 무 방비 노출
		2	전국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주요공판안내
950	8/21	1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법무시, 수배자 예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알아들시다-경찰관 직무집 행법
		2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쇼아/한국타이어 고발기자 경찰 소환/주요공판 안내
951	8/22	1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됐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정동근 씨 안기부 연행, 범민련·통일운동 관련인 등/행사와 동정
		2	한국후포주 단식농성 34일만에 교섭재개, 2차 단식자 등 명동농성 계속/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추 구, 합동추모제 9월 1~7일/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2편 〈호남호녀〉 〈루치아〉
952	8/23	1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기관/“노동권 생존권 압살”, 현재판결 전면 백지화 촉구/우리땅 되찾기 전국 공대위 출범
		2	〈출범선언문〉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953	8/24	1	한국타이어 '올머 겨자떡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해소송 철회/전·노 사면 지지 캠페인, 첨가대학생 불법연행/양대 노총·여연 등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험결정' 현재 판결 백지화 촉구/명성 평신도회 후포주 텐트철거, 이승진 씨 16일째 단식농성
		2	국제장애여성 리더쉽 포럼 보고대회 "장애여성들이여 자신의 목소리를 갖자"/주요공판안내/주간인 권흐름 (97년 8월18일부터 24일까지)
954	8/27	1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국민승리 21, 현재 판결 백지화/관련단 체 국고지원 50% 증액 "대선앞둔 의도적 편성"/노동자 단식투쟁 중(한국후포주 등)
		2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혐의/제2회 인권영화제 '아동' 영화 2 편(눈물의 사슬) 〈히틀러와 아브라함〉/서울국제노동자 미디어 발족식/주요공판안내
955	8/28	1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채 기소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2	〈세계의 인권 17〉 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956	8/29	1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새책소개 〈대한변협 1996 년도 인권보고서〉 (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2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기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 두거부 "성폭력 피해사건 아직 수사중"/민주노총 하반기총력투쟁 결의 "퇴직금 해결·정리해고 저 지"/국민승리21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지"
957	8/30	1	김수환 추기경, 패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하루소식 만평 고정 게재, 만화가 이동수 씨가 하루소식 독자에게
		2·3	〈인권하루소식〉 97년 8월분 총목차 (937-957호)

인권하루소식
97년 9월
(제958호 - 제975호)

〈인권하루소식〉 합본8호(97년 상반기) 발행.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